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1997년 1월 24일 (토요일) 제 1000호

2003년 1월 24일
제 2247호
발행처: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 24일

윤산구치소

인권하루소식

윤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윤산구치소 폭스카 사건 관련 윤산지검은 2003년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산구치소 내 폭스카 차량의 불법 압류에 대해 윤산지검이 '압류가 정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산지검은 윤산구치소 내 폭스카 차량의 불법 압류에 대해 윤산지검이 '압류가 정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산지검은 윤산구치소 내 폭스카 차량의 불법 압류에 대해 윤산지검이 '압류가 정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산구치소 폭스카 사건 관련 윤산지검은 2003년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산구치소 내 폭스카 차량의 불법 압류에 대해 윤산지검이 '압류가 정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산지검은 윤산구치소 내 폭스카 차량의 불법 압류에 대해 윤산지검이 '압류가 정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산구치소 폭스카 사건 관련 윤산지검은 2003년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산구치소 내 폭스카 차량의 불법 압류에 대해 윤산지검이 '압류가 정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산지검은 윤산구치소 내 폭스카 차량의 불법 압류에 대해 윤산지검이 '압류가 정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3년 1월

(제2247호 ~ 제2266호)

만화사랑방



축사 Soja 개천의 개천개천! 개천의 개천의 개천개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3일(금)

제 22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송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멍이 들고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본지 2001년 11월 24일자 참조>

이에 구 씨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26일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한달 여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해 "구 씨가 구치소 입소 후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위급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해 12월 28일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후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인권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아래 울산지검, 담당검

사 유현식)은 "구 씨를 방치한 교도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울산지검은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구 씨가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 다른 누군가에게 맞았을 뿐 증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의 이 같은 수사결과는 "구 씨가 구치소 입소 전까지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의 조사 내용과는 정반대 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구 씨가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음에도 검찰은 '구치소 안에서는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 내용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그저 사실관계만 언급할 뿐, 검찰의 결정 이후에 국가인권위 차원의 대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검찰의 진실은페 기도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싸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보도자료는 단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내용과 울산지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공표한 것 뿐"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의 범위 내에서 다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상반된 조사결과에 따라 구 씨의 사망사건은 구치소 내 의료문제와 가혹행위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남겨둔 채 두 해를 넘기게 됐다.

한편 구 씨의 유족은 울산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항고를 할 예정이다. (김영원)

청년인권위크샵에 초대합니다.

- 참가자격: 성별, 학력, 직업 등에 상관없이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 참가비: 2만원(1박 2일, 숙식제공)
- 때: 2003년 1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1월 11일(토) 오후 4시까지
- 곳: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 내 '내일을 여는 집'
- 문의 : 02)741-5363(류은숙)

만화사랑방

이동수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유치장내 알몸수색의 근거가 되어 온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하 훈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6일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단체들의 '반인권적 알몸수색 폐지운동'에 이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알몸수색에 대한 위헌 판결', 그리고 10월 국가인권위의 '유치장내 신체검사 요건 강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 현행 훈령의 간이·정밀신체검사 전에 손으로 의복의 외면을 두드리는 외표검사 추가 △ 정밀검사의 경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운을 갈아입도록 탈의막을 설치하고,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시행 △ 구속영장발부자는 무조건 정밀신체검사의 대상으로 정한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밀신체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강력범죄 이외의 피의자들에게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반인권적 알몸수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조사1과 정병춘 조사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의 외표검사나 간이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에게 인격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각 신체검사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아 정밀신체검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담회에서 지적했다. 그 밖에 유치장 내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밀신체검사를 요구하는 수용자에게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권고를 반영한 개정안

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주문했다. 현행 경찰청 훈령 하에서 신체검사는 '유치장내 질서유지와 수용자 신체보호'라는 목적을 넘어, 반인권적 알몸수색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왔다. 반인권적 알몸수색 근절요구는 2000년 3월 민주노동기관지를 배포하다 연행된 여성 노조원에 대한 알몸수색이 확인되

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후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청 내규의 성격을 갖는 훈령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범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유치장내 알몸수색 관련 경찰청 훈령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한 행정법의 신체검사 규정을 유치장내 신체검사에 적용한다고 해도 알몸수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각 신체검사 단계마다 검사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허혜영)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비리·경제사범의 사면을 위한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특별사면의 대상자인 강위원 씨(제5기 한총련 의장)는 이번 사면이 "달갑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TV뉴스에서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복권사실을 알게 됐다는 강 씨는 "사면권 남용이 문제시 돼 온 상황에서 신중하게 논의·결정됐어야 할 사면이 정권 말 선심용으로 졸속·기습적으로 집행된 것 아니냐"며 "원칙 없는 면죄부 사면으로 사면에 대한 국민적 정서만 나빠지고 오히려 새 정부의 양심수 사면에 악조건만 형성했다"고 한숨지었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감형 및 복권 조치에 포함된 122명 중에는 옥중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반면, 각종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전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말 선심", "명목 없는 사면", "반부패 공명불" 등 이번 사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7십여 명의 양심수가 옥중에 있고 정치수배자가 3백여 명인데 단 한 명의 구속자 석방도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를 변호하거나 사면하는 행위는 부정비리와 동일한 범죄행위"라며 "현정권 내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부패정권이 사면해 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31일 성명을 내어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사면권 행사의 적정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이번 사면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범죄는 화려하다. IMF 환란주범, 세풍사건, 대우 경영비리사건 등 대형비리 연루자였다 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을 10일만에 사면된 고위관리도 포함돼 있다. 이 지경이고 보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관용을 통한 민주주의 지향'이나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빛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사면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이에 민주노동이 낸 새해 첫 보도자료는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가 892명이며, 이들에 한 명 풀로 노동운동과 관련해 노동자를 구속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단병호 민주노동위원장을 비롯해 33명의 노동자가 수감중이며 30여명이 수배상태에 있다. "국가발전과 경제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사면 이유가 공색하기만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4일(토)

제 22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경찰, 반미집회 엄단?

촛불시위 강경대응 비난여론

미군 캐드차량에 숨진 두 여중생 촛불 추모행사에 대한 경찰의 잇따른 강경대응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경찰이 서울시청의 요청에 따라 도시미관 상의 이유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추모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한 데 이어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미집회'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계속돼 온 촛불시위에서 미대사관 앞을 행진하려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연이어 부상자가 발생했다. 12월 31일에는 백만 촛불평화대행진을 보장하겠다는 범대위와의 약속과 달리, 광화문 네거리를 원천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찰의 강경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중생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시위와 농성으로 두 여중생문제 해결을 부르짖었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의 의지를 폭력으로 꺾으려 한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사이버범대위 또한 "도시미관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중생범대위 제회병 사무국장은 "그동안 경찰에서도 촛불추모행사를 인정해왔는데 주한미군 측의 대책 요구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촛불시위 자체 요청과 맞물려 경찰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인도에서의 행진까지 막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광화문 촛불시위행사에 참석한다는 심모(30) 씨는 "촛불시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고 그런 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에서 평화적인 촛불추모행사를 '반미집회' 운

운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은 작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여중생 범대위는 3일 오전 11시 경찰의 추모농성장 강제철거와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방문 했으나 경찰청장 부재를 이유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여중생 범대위는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1인 시위를 24시간 철야로 진행하고 있으며, 4일 오후 6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추모농성장 강제철거 규탄 및 광화문 촛불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모)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2일 서울경찰청은 여중생 추모촛불 시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한 추모행사는 보호하지만 최근 시위가 소파개정·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미집회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및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앞세워 미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조치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을 근거로 추모행사와 반미집회를 구분하겠다는 것인가. 현실의 바다를 가릴 수 없듯이 촛불의 바다를 이념의 잣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러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체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주목할 일이다. 노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촛불시위 자체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연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 미국에게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두 여중생이 미군 캐드차량에 깔려 사망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촛불시위가 서울시청과 광화문, 미대사관을 뒤덮고 있는 것은 불평등한 소파개정과 반미를 넘어 반전평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촛불시위가 국민들의 자생적인 의사표현의 통로로 형성된 만큼 공권력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또한 지금 상황을 경찰과 촛불 시위대의 대립국면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어내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찰은 알파한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함성을 진압하지 말라. 지금은 촛불시위의 행렬을 막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촛불시위를 뒷심으로 삼아 더욱 담당하게 소파개정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늦게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에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IP추적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경찰은 16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글 작성자의 IP추적 수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선거위는 선거기간 이전부터 후보와 관련된 지지 혹은 반대 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차장은 이 같은 선거위의 삭제 요청과 경찰의 수사의뢰가 모두 20여건에 이른다면서 "민주노총 자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오고가는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 첫 화면을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화면으로 장식한 것이나 관계지 <노동과세계>의 기사는 선거법위반이 아닌데, 똑같은 내용을 옮겨 놓은 게시판 글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김기중 변호사는 "선거법으로는 특정 후보의 낙선 혹은 당선 목적을 쓴 글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경우는 특정후보의 지지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운 반면, 개인의 정치적 발언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법의 포괄적 규제의 문제를 우려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영경 정책실장도 "네티즌이 정치를 바꿨다고들 말하는데, 한편에서는 단순한 지지나 반대 글도 삭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선거위의 부적절한 법 적용과 경찰 수사를 꼬집었다. 장 실장은 "미국에서도 인터넷 낙선운동이 무죄가 된 전례가 있다"며 "사람을 동원해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야겠지만, 지금처럼 일반인의 정치적 발언과 개인의 의사표현을 수사하는

것은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입은 풀고 돈은 묶었다'는 선거법이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들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 모순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고근예)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케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후, 17일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의정부지청의 비공개 사유는 "청구정보공개내용은 진행 중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술조서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는 '여중생 케도차량 사망사고 범국민대책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법정 개최 여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전김명훈 간사는 "미 군사 재판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채 종료된 상태에서 민간법정은 진실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법정의 실질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민변은 의정부지청 외에 미국측 재판부를 상대로 한 재판기록 공개 요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혜영)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 마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초청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은 전했다. 이에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말 일본 외무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을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일본정부는 '공식 외교루트가 없다. 노력은 했으나 초청 못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왔다.

이에 한국 등 6개국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 초청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므로 회원국인 북한은 당연히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 준비회의를 위임받은 일본정부가 북한을 초청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WSIS는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개최가 결정된 회의이며, 1차 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아 튀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보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지식 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 정치적 참여, 교육, 보건, 여가와 오락' 등 우리 생활의 전 분야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조화, 공동행동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본에서 열리는 회의는 아시아지역준비회의이며, 국내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네트워크 등 10여 개 단체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본권의 보장과 인터넷에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주요 의제로 토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WSIS에 관련된 내용은 <http://wsis.or.kr>에서 볼 수 있다.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7일(화)

제 22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 박탈의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차디찬 겨울,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의 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 2번지 김태환(무직, 70) 할아버지의 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이렇게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냉장고와 작은 찬장, 그리고 한사람이 누울 수 있는 요가 차지하면 공간을 빼고 나면 남는 공간이 거의 없다. 공책 크기 만한 창으로는 한낮에도 별이 들지 않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진다.

김태환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산 2번지의 주민들은 대부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있는 집도 고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공동화장실을 쓰는 실정이다.

이렇듯 산 2번지 주민들의 대부분은 화장실, 부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단칸방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가족자체가 낡고 위험한 경우도 눈에 띈다. 김예덕(무직, 79) 할머니의 집은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다. 이 때문에 천장이며 벽면까지 곰팡이가 썩었으며, 천장 지붕이 약간 내려앉았다. 또 문이 틀어져서 맞지 않아 바람이 사정없이 들어온다. 이

때문에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는 쌀렁하기만 하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심하게 추운 날씨가 아니면 보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순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엮은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식 대기자만 3만5천여 명에 이르고,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임주가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최저생계를 겨우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기존 임주자를 내쫓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주거정책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거빈곤자에게 대안적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권운동진영은 1998년 말부터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개선, 임차인과 철거민보호' 등을 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보편적 인권은 일정한 국가의무를 발생시킨다.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에 목표를 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부담능력에 따른 주택가격 차등 적용 △주거비 보조제도 시행 등의 조치는 국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정보근)

(기사가 1면에서 이어짐) 민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맞춰서 짠 데로 가 야지요"라는 막연한 대답을 한숨 섞어 할 뿐이다.

얼마 안 되는 이주비를 받고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곧 철거가 공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 값을 현실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산 2번지로 이주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산 2번지 8통에서 오래 살았다는 통장 아저씨는 "77번지의 재개발로 산 2번지로 이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입주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나마도 일정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통하여 일정 정도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지만, 현재 민간건설회사가 초기단계부터 개입하는 이러한 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례로 현재 재개발중인 인근 하월곡 4동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1,610세대 중 단지 288세대만이 임대아파트로 건설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전용면적이 고작 9평이어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입주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77번지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들어가려 했었던 한 주민의 경우, 식구가 다섯이라 13평에 방 두 칸짜리로는 살기가 힘들어서 대신 이주비를 받고 그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산 2번지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 소원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야"라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는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

곽길자(무직, 32) 씨의 경우에는 하월곡 4동에서 이주비를 받고 산 2번지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 여섯 식구

(바로잡음) 지난 3일자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 기사에서 고 구송우 씨의 유족은 항고를 한 것이 아니라 준비중입니다. 구 씨 유족은 이번 주에 항고를 할 예정이며, 유족의 항고가 있는 후에 국가인권위는 울산지검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가 모두 함께 다리를 쪽 뺀고 누워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은 아니지만, 보증금도 없이 매달 10만원 방세를 내고 있는 형편에 재개발이 된다면 이주대책이 전혀 없으며 한숨만 내쉬 뿐이었다. 고정적이지 않은 남편의 노동을 통해 여섯 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형편으로 천만 원이 넘는 임대아파트 입주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사는 김민생(무직, 44)씨의 유일한 이주대책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나가게 되면, 자신도 숙식이 해결되는 직장을 얻어 사는 것이다.

이산가족이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무책임하게 내몰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주거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어야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삶의 터전을 빼앗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일이 지금도 하월곡3동에서 자행되고 있다. (박유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제2기 객원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인권운동연구소는 서유럽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근하며 모든 세미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같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인권활동을 우선합니다.

· 비상임연구원은 무급이며, 모집인원과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희망하는 세미나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학기 (2월~7월) 세미나 내용

- 1. 정세 및 운동 동향 분석 1(월 7:30-10:00)
 - : 국내·외의 주요 정세 분석과 본질 파악/진보운동 및 인권운동의 '핫 이슈'에 관한 보고와 실천적 토론
- 2. 기본적 인권론 1-역사(화 1:30-4:30)
 - : 인권의 역사 개관/인권 개념의 형성 (근대 시민혁명과 인권개념의 형성)/기본적 인권의 주요 국가별 발전사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 3. 인권문헌 연구 1(수 7:30-10:30)
 - :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문헌의 시대적·사상적 배경 탐색과 문헌 축조 읽기(마그나카르타에서 러시아혁명 이전까지)
- 4. 근·현대사(목 7:30-10:30 금 1:30-4:30)
 - : 에릭 홉스봄의 혁명사 5부작과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근·현대사에 관한 저작들을 통독하는 한편 근·현대사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7-8개 정도의 세미나를 병행

* 4학기 전체 세미나 내용은 홈페이지(sarangbang.or.kr)를 참조

□ 일정 : 오리엔테이션 : 2월 8일(토) 오후, 개강: 2월 10일(월)

□ 신청 방법:

- 1. 제출서류: ① 이름, 연락처, 경력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생각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 (A4 1매) ② 인권에 관한 에세이 (객원연구원 지망자에 한함. A4 2매 이상)
- 2. 제출마감: 2003년 2월 1일 [토요일]
- 3. 제출방법: 팩스 741-5364 또는 3676-1302
 - : ihrm@sarangbang.or.kr 또는 doll@sarangbang.or.kr
- 4. 문의: 02-3675-5363 (배경내) / 02-3676-1301 (서준식)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아직도 '검문 중'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전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특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간지의 독자투고에서도 같은 맥락의 경찰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감압적인 불심검문은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과연 불심검문의 시대는 갔는가? 얼마 전 고한에서 보고들은 행태는 불심검문이 사라지지 않는 관행임을 똑똑히 알려주었다.

지난 주말 고한 흑빛공부방이 주관하는 청소년영상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고한역에 도착했다. 카지노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역사에서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출입문을 막고 검문 중인 경찰들에게 신분증을 꺼내 보이고 있었다. 이곳의 불심검문은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라 한다.

지난해 7월 잠시 이 곳을 들렸을 때도 똑같은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황인 것이다. 마치 음주단속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고 '무슨 큰 사건'이라도 생긴 줄 알았다.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기차역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검문하는 것은 계엄령과 같은 폭압적인 상황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경찰들은 '소속과 이유를 밝히는' 등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적법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통명스럽게 "신분증이요"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불심검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불심검문을 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나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경찰들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차역뿐 아니라 차량 검문도 강제적이며 무차별적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기막힐 사실은 도로가 곧 일터인 택시운전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검문 당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경찰에게 항의할 수 없는 '직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도 검문에 응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검문 이유를 설명조차 하지 않는단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요주의 인물'들을 외위두고서 항의하면 그냥 보내준다는 것이다. "왜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 지역 경찰서장의 뉘를 염두에 둔 '전시행정'이 아니겠냐고 한 주민은 추측할 뿐이다.

이 지역 경찰의 불심검문은 이유도 없고 일관성 아래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절차에 있어 주민을 존중하는 깍듯함도 없다. 현재 고한에서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 '아직도' 불법적인 불심검문인가?

(김정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1. 해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관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등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 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행사...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 추모행사 열려(12.24)/ 정부, '일본·독일과 큰 차이 없다' 소파 홍보자료 일선 자치단체 배포 물의(12.26)/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사이버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전세계 평화촛불집회·네티즌백악관 항의방문단 구성 추진(12.27)/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여중생범대위 관계자와 유족 만나 촛불시위 자제 요청(12.28)/ 서울 미대사관 앞 '제2차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 잇기대회'(12.28)/ 전국 곳곳에서 자정 넘기며 반전 평화 촛불시위(12.31)/ 경찰, 서울시청의 요청에 따라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추모 천막농성을 강제철거(1.1)/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회견을 통해 '반미집회' 엄단 밝혀(1.2)/ 전국적인 흑한 속에서도 촛불 시위 계속돼(1.4)

- 2.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제대로 뽑아야
 - 21개 인권단체, '반인권·비리전력자 인권위원직 즉각 사퇴' 성명 발표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12.23)/ 울산지검, 2001년 11월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구치소 내부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수사 종결,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12.30)

- 3.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 민변, 법무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성명·대법원도 반대 의견 내기로 결정...변호인 입회 제한·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 조항 문제 제기(12.24)/ 경찰청, 피의자에 대한 '알몸 수색' 등 경찰의 잘못된 신체검사 관행 금지·'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훈령 개정방침 밝혀(12.30)

- 4. 기탁
 - 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한 대국회 요구안 발표...'한반도 위기 대책 범국민기구'(가칭) 설치 요구(12.30)/ 정부·민간단체, 과천정부청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2차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준비를 위한 간담회 가져(12.23)

- 5. 주요판결과 통계
 - 대전지법, 알몸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술교사 김인규씨 무죄선고(12.27)/ 민주노총,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892명 구속했다고 밝혀, 이틀에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셈(1.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8일(수)

제 22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취재활동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하월곡동 산2번지는 건강을 잃은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가난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건강을 잃게 되면 가난해지기 쉽다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김민생(44) 씨는 5년 전 발생한 중풍으로 인해 신체의 왼쪽부분에 마비 증세가 있다. 지금은 제법 호전돼서 따뜻한 계절에는 조금씩 일을 하지만, 꼬박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다. 그 사이 돈도 못 벌고, 치료비를 지출하느라 점점 생활은 조여들었다. 그러던 중 2년 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었다. 요즘도 기운이 내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안에만 머문다.

김 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김 씨는 추운 겨울날 밤 50미터 쯤 떨어진 공동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두렵기만 하다. 추운 날씨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고열압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급여 2종이어서 단지 건강보험료만 안낼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보호비 45만원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5-10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나면 생활은 쪼들리기만 한다.

한 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고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성북구에 하나씩 있는 보건소와 보건 분소가 멀리 있어서 추운 날씨에 외출하기 힘든 김 씨는 몇 달째 보건소에 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환(70) 씨 역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의료급여 1종이라서 병원에 갈 때 구청에서 제공하는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 명

의 가정도우미가 7개 동을 담당하고 있어 제 때 병원에 가기란 어렵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다니기 힘든 환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방문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혼자 몸을 추스를 수 없는 김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와 발목통증, 고혈압, 당뇨, 결핵 등으로 인해 누워 있는 것 말고는 할 (※2면에 계속)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

인권단체,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촉구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서 6시간여 동안 류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 전원과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위 1년 사업평가와 계획을 세우는 내부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었다. 류 신임 인권위원의 당면 참석을 예상한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연말에 이어 두 번째로 사퇴촉구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가인권위 정문 앞에서 점거시위를 한 후, 워크숍이 열리는 건물 12층으로 옮겨 연좌시위를 계속했다. 워크숍 예정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가 다가오면서 인권위원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반인권·비리전력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선문제 공론화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인권활동가들의 물음에 인권위원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윽고 김창국 인권위원장의 등장을 마지막으로 회의장 문이 닫히고 워크숍이 시작되었으나 인권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당면 참석해야 할 류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류씨가 근무하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류씨는 자신의 의뢰인과 오후 내내 상담 중이었다.

인권활동가들은 류씨가 인권단체들의 사퇴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회의에도 불참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전제일 간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자질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검토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감시해야 할 인권위원이 반인권·비리전력자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피하는 태도는 비겁하며, 류국현 자신이 입장표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오는 13일 류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류씨가 사퇴할 때까지 공동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허혜영)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보듯이, 빈곤과 건강박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빈곤이 건강박탈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부족, 무리한 노동이 건강의 상실로 이어지는 한편, 건강의 박탈이 노동력 상실과 소득부족을 유발하고, 더불어 무리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건강수준의 저하를 낳고, 낮은 건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는 185만9266 가구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체지역 가입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체납자의 78.3%가 소득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14.7%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에는 최저 생계비의 100-120%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2종, 그 외에는 1종으로 구분한다. 비급여 항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일반 보험가입자와 별 차이가 없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와 1종인 수급자의 실제 소득수준은 모두 최저생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체불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입원거부와 퇴원중용 등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

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이 많고,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이것은 국민 전체에도 그렇지만, 특히 빈곤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 장기적으로 국가는 의료의 전면적인 공공화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차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대폭 하락시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누적적 보험료 부과제를 확립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단계적으로는 의료부조제도의 도입으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왔다. 의료부조제란 기초생활보장의 여러 급여 중 생계급여, 자활, 주거급여 등을 제외하고 의료급여만을 특정집단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보건 의료료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경제적·지리적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방문보건과 장기요양 서비스는 빈곤층에서 광범위한 필요가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사회권규약은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중에 떠있는 선언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김명수)

(※ 1면에서 이어짐) 수가 없는 김 씨는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 3일을 굶은 적도 있다. 결국 작년에는 영양실조 판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는 민간요양원의 높은 비용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공공요양원은 공급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고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할 실정이다.

김예덕(79) 할머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가끔 종이상자를 주우러 다니는데, 무릎 관절염이 있어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다. 물리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데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병원에 안가"라고 고개를 젓는다. 오랜 세월동안 '아프면 참는 수밖에 없다'는 치료 아닌 치료방법에 익숙해진 것이다.

하월곡동 산2번지에는 알콜 중독 환자들이 특히 많았다. 알콜 중독은 가난과 실업, 질병으로 인한 절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찾아드는 건강악화와 가정불화는 가족체제로 이어진다고 한다. 알콜 중독에 걸린 후 건강악화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50대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과 모두 헤어져 80대 노모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었다. 생계 능력이 없는 50대 아들이 80대 노모의 낄낄팔이에 기대 살아가는 모습은 처연한 그 자체였다.

홍광현(12)군은 정신지체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장애1·2급에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장애등록을 하려면 장애인당서를 병원에서 받아 받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광현 군 가족은 '큰 돈 들 걱정'과 이후 불어날 진료비 걱정 때문에 장애인당서 받기를 꺼려한다. 주변의 설득 끝에 광현 군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자마자 받았어야 했을 진단을 12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당서 심사비는 20여만 원이 나왔고, 독지가의 도움으로야 지불할 수 있었다. 장애수당이라는 복지에 접근하기에도 가시밭길이 놓여 있는 것이다.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은 노동을 포함해 어떠한 활동도 하기 힘들다. 건강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월곡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병마에 맞서 싸우고 있다. (김명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9일(목)

제 22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 제도 보완 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 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한해 2004년 3월말 한도에서 강제 출국 시기가 연장되며, 연장 신청 후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미신고 불법체류자, 체류기간 3년 이상자, 유흥업소종사자 등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을 밝히고 있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정귀순 대표는 "(강제출국 유예조치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지만 해당하는 사람이 몇 안 돼 실망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 중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많아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이다. 민주노총 이상화 정책국장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결국 26만여 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추방시킬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인권유린, 노동착취, 송출비리 등 연수생 제도의 문제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정부 대책은 잘못된 제도를 더욱 확장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석원정 소장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되는 실정이지만, 정부 대책은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따로 생

각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중 80%가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 1년간의 출국유예조치는 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1년 유예라는 정부 대책은 반복적으로 불어닥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을 예고할 뿐이다. (김영원)

<해설> 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지난해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의 국민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의국민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올해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였다. 신고기간 동안 접수처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복새통을 이뤄 만나질 이상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자진신고자 중 체류기간 3년 미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출국기한을 재유예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강화와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는 '외국인력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자진 출국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원 강제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일시에 많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취한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현 외국인력 도입제도 자체에 있다. 91년부터 시행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저임금·단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돼왔다.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이주노동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수생제도 철폐, 불법체류자 사면,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 실시' 요구가 계속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제도로써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계약 하도록 하는 반면,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선택할 권한을 주고, 고용주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만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 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모)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2001년 11월 울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려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본지 2003년 1월 3일자 참조>

울산구치소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직후 최초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과 국가인권위의 대응은 앞으로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말썽한 상태로 입소'

우선, 사건경위에 대한 검찰과 국가인권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자.

고(故) 구승우 씨는 2001년 11월 17일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틀도 안 돼 온 몸에 멍이 들고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검찰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구치소 입소 전까지는 구 씨에게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입소 다음날 오전, 구 씨가 노역실인 훈거방으로 이동한 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 △구치소 측이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교도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여부, 상반된 결론

그러나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전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한달 여 동안 조사활동을 한 국가인권위는 2001년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입소 다음날 오전 11시경 동료 재소자들에 의하여 구 씨의 전신에 멍든 자국 등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광범위한 피하 출혈 및 근육간 출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외상을 입은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2001년 조사 당시 동료 수용자 박모 씨가 "냄새가 지독해 구 씨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는데, 양쪽 팔꿈치·장강이·가슴·엉덩이 등 전신에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니 '맞았다'고 했다. 어디에서 맞았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반면,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검찰은 "피해자가 누구에게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구치소 내에서의 소란이나 구타 등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며,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결국 말썽한 상태에서 입소한 구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전신에 상처를 입게 됐는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진술과 목격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린 것이다.

공은 다시 인권위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은 시종 방어적이었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보다는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사건 발생 초기인 2002년 1월까지만 해도 법무부 측은 "법무부가 책임질 일은 없으며, 교도관들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1년 만에 환자방치의 책임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진실규명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결과는 조사의 진실성마저 의심케 만든다. 예컨대, 검찰은 "구 씨에 대한 구치소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사체에서 멍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사망 전 3일쯤 전후에 형성된 것"이라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공은 다시 국가인권위로 넘어 왔다. 검찰발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대응할 차례다. 이대로 검찰의 발표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 국가인권위로선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검찰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뒤엎는 사태가 빈발한다면, 인권피해 구제라는 국가인권위의 주요한 기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난해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두고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 사이에 치러졌던 싸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강한 권위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될 시점이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 문제와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창조)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1.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반대
3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반대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다.

2.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수두룩
7일 국가인권위는 1년 동안 50인 이상을 채용한 업체의 2002년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38개 업체 모두가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개인신상,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의 차별적 항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8개 주요업체의 입사지원서 양식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업무수행과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채용 관련 차별관행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10일(금)

제 22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고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확인한 경찰구타 사실을 전면 부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아래 광주지검)은 사건 당시 경찰의 구타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목격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의문사위에 의해 고발된 경찰을 무혐의 처리했다.

광주지검은 불기소처분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김준배를 화단 위에서 발견하는 순간에는 이미 그 주위에 경찰관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이들 동료 경찰의 '구타 장면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옆드러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몽둥이로 가격한 후에도 ... 다시 발로 짓밟았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광주지검은 일본 법의학자의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내부 장기손상의 발생시차에 대해 법의학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구타에 상응할만한 신체외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조사했던 김상구 의문사위 전 조사관은 "의문사위 조사에서 구타사실은 명백했다. 쟁점은 구타여부가 아니라 구타가 김준배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검찰이 구타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장 경찰관의 주장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에 대해 김 조

사관은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화단에 도착했을 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 있었던 경찰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단지 그들이 못 보았다고 해서 구타사실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옆드러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구타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검찰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정윤희 사무처장도 "검찰이 직접 목격자 사람이 말하는 진실은 부정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근거해 결정했다"며, "이

는 의문사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횡포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9일 긴급회의를 열고 광주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를 말한다.

이에 앞서 의문사위는 지난해 8월 추라과 경찰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김준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전남지방검찰청 이모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의문사위 결정의 근거는 △추라한 직후 경찰관이 김준배 씨를 구타하는 장면을 아파트 2층에서 목격한 주민의 증언 △내부 주요장기 손상의 발생시차를 고려할 때 추락이후에 별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일본 법의학자의 감정 소견 등이었다.

(허혜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9일 징계와 가압류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견디다 못해 한 노동자가 분신·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두산중공업 노조의 전 대의원 배달호(50) 씨로 분신 직전 '회사의 가혹한 노조탄압과 임금 등의 가압류 문제'를 고발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배 씨는 유서에서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 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라며 괴로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가 사별 집단 교섭을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간부 89명 징계 해고, 22명 고소고발과 구속, 총 7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임금 가압류였다. 이 과정에서 배 씨는 지난해 7월 구속됐고, 9월에 출소한 후 곧바로 3개월 징계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배 씨는 징계기간이 끝나 사업장으로 복귀했지만, 배씨의 재산과 임금은 이미 가압류된 상태였다.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배 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분신이라는 극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성명을 통해 "사용주들이 노조를 꺾기 위해 노동자의 월급과 재산을 압류하는 등 사상초유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두산중공업의 악랄한 노조탄압이 배 씨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성 회장 퇴진 △노조탄압실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민주노총 산

하 39개 사업장이 맞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만 1천3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신종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두산중공업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배씨의 죽음은 "노조 탄압이 가져온 타살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인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서 해결하겠다"며 시신 옆에 천막 6개동을 설치하고 300여명이 모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에 따라 배씨의 시신은 두산 중공업 사내 '노동자 광장'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김영원)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박석곤 판사는 20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범용)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한미소파 전면 개정은 국민적 요구"

'여중생범대위 한미소파개정 추진단'(아래 소파개정추진단)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발표했다. 소파개정추진단은 한미당국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소파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소파의 본 협정과 부속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재확인한 것일 뿐 별 실효성이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교수는 "현재 미군에게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상·무제한 주둔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폐지, 본협정과 부속 문서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파개정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주권회복과 한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 호혜평등의 실현뿐 아니라 현재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합동위원회의 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소파 개정의 내용은 △형사재판권 △시설과 구역 △군사훈련 조항 △민사청구권 △환경 △노무 등 7개 분야에 걸쳐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공무원이라도 한국국민에게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 또는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 등 제약 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협정에서는 군사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 통보,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 실시와 중단, 토지손상 시 원상복구 등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야에 대해 최승한 교수는 "2001년 환경관련 조항이 특별양해각서로 신설되었지만 문언상 '존중한다, 노력한다' 등 미군 당국의 법적 의무가 결여돼 강제성이 없다"며,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환경정화비용의 지불, 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파개정추진단은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범국민 요구안과 범국민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파 바로 알기 캠페인과 교양자료 제작, 국민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2월 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완성해 2차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11일(토)

제 22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속보> 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반인권·비리 전력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는 10일 "류 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가 도착하는 대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류국현 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지 한 달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현재까지 류 위원의 사임 이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거센 압력이 사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류 위원의 취임 직후, 그가 99년 대전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전력 등이 밝혀지면서 인권단체들은 곧바로 사퇴추구 행동에 나서왔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 청사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오는 13일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류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류 위원의 사임은 앞으로 인권위원 인선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인권·비리 전력자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만큼, 현재의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를 비롯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3일, 류국현 인권위원 인선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행 인선절차나 기준이 파리원칙(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편지자)에 비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근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류국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인권위원의 자리에서 물러난 류 위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류국현 인권위원의 임명은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진행됐다. 전임 인권위원의 사임 소식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덜컥 새로운 인권위원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공기업에 낙하산을 투하하듯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그때부터 이미 '류국현 사태'는 예고된 바나 다름없었다.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진 류 위원의 인선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혹시라도 자질 없는 인물이 또 인권위원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으며, 그것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그것도, 검찰 출신으로서 바로 몇 해 전 대형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인물이자, 국제무대에서 반인권적 발언에 앞장섰던 인물을 낙점한 '대형사고'였다.

'류국현 사태'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국가인권위가 그나마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내기 위해선 철저히 '검증'되고 '자질'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의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 이미 인권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인선의 공론화와 자질검증을 요구해 왔다. 그 기준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도덕적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품성과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임 인선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미 인물검증의 능력과 자격 모두를 상실한 지금의 청와대가 또다시 후임자를 인선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 새로운 인권위원은 차기 청와대에서 마련해야 할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해 인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또 "인권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향후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인권단체들이 접수한 '인권위원 임명 경위 해명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청와대에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공개 △인권위원 밀실인선을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창조)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하월곡동 이야기 ③ 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하월곡동 산2번지. 주민들의 삶은 궁색하고 비참하지만, 나름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람들은 일하고 또 일한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매일 매일의 노동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둔 솔이 엄마는 얼마 전까지 하월곡동의 한 영세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결혼 전 한복 재단기술을 익혔던 그는 다행히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10시간씩 먼지 자욱한 공장에서 일하고도 고작 50만원 남짓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한다. 주말 근무나 야근도 예삿일이지만 그렇다고 버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솔이 엄마는 "많은 공장들이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일을 시키면서도 야근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잡부에겐 산재보상도 없어"

솔이 아빠는 하월곡동의 몸 성한 남자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을 일터로 삼는다. 원래는 세공기술자였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피해 몇 년 전부터 '그나마 나은' 건설노동을 하게 됐다.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로서의 삶 역시 고되긴 매일반이다. 휴일이나 월차휴가는 언감생심. 일감이 주어지는 한 열심히 일해 보지만, 아무리 건물을 올리고 또 올려봐도 솔이 아빠 자신의 집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솔이 아빠에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산업재해다.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를 당한 경우에도 기술자가 아닌 잡부의 경우는 어영부영 넘어가는 때가 많다. "회사는 산재처리를 거의 해주지 않는 데, 산재 사건이 있으면 공사를 하청 받을 때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보통 한 달에 한 두 명은 꼭 다치지만, 잡부의 경우는 다쳐도 약간의 병원비만 보상받는다." 또 다른 건설

노동자 장춘기(37)씨의 말이다.

여섯 식구, 한달 60만원으로 버티

홍규해(37) 씨네 여섯 식구는 요즘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만원으로 한달을 버텨낸다. 홍 씨가 2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건물 방수작업의 특성상 날씨가 추워지면 일감이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지만 "배운 게 짧고 나이가 많아서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자신 없어 한다.

홍 씨의 우려는 현실적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실사 훈련을 마친다 하더라도 질이 낮은 노동력이라고 회사에서 기피할 것이 뻔하다"고 말한다.

노동권의 박탈과 절대적 빈곤은 어깨를 걸고 대를 이어 찾아온다. 전라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서울에 온 김(37) 씨. "다치는 대로 일하면서" 밑바닥 인생

사치일 뿐이다. (박세진)

을 전전한 그는 여러 차례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애를 써봤지만 무학에, 변변한 기술도 없는 터라 매번 실패하기 일쑤였다. 그는 5년 전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웬만큼 거동이 가능해진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기초생활보장비 45만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돈으로 월세, 난방비, 세금, 약값 등을 내고 나면 담배 한 갑 사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아들이다. 아들만큼은 고등학교라도 졸업해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지만, 벌써 몇 달째 학교에 나가질 않는다는 아들의 미래도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세계인권선언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월곡동 산2번지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다.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산2번지 주민들에게 '노동의 권리' 운운하는 것은 그저 사치일 뿐이다. (박세진)

[해설]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가난한 이들이 으레 그러하듯 산2번지의 주민들 대부분도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건설일용직 노동자다.

현재 전체 기술직 건설노동자의 90% 가량은 임시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건설업체는 기능인력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하도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회사측에는 노무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라는 이점을 주지만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항상적인 고용불안이라는 문제를 안겨준다.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임금, 복지, 사회보호 등 여러 측면에 걸친 문제를 야기한다. 건설일용노동자는 그리 적지 않은 일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 노동자에 비해 평균 임금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한 달 평균 근무일수가 19일 정도에 불과한데다 유급휴일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에게는 산업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이 없어서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당국의 의지 부족이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관계당국은 안전관리비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조차 조사하지 않는다. 노동부와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식 속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박세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가압류 남발, 파업권 꺾이기본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 씨의 분신사망 사건으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실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배달호 씨의 분신배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 가압류 조치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고 배달호 씨 분신배경의 하나였던 파업참여자에 대한 재산가압류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관련 기고 2면)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6월 24일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15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했다. 2002년 임단협 교섭 당시 교섭위원이었던 배 씨 또한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가압류 당했다.

배 씨는 유서에서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사의 노조탄압과 더불어 손해배상소송·가압류가 한 노동자의 분신사살이라는 참극을 빚은 것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액수는 손해배상액이 58개 업체에서 5백35억여원, 가압류 청구액이 44개 업체에서 1천77억여원으로 모두 1천6백12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변질돼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와해 전술'로 일반화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는 노조 조합비나 노조 간부만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 발전노조 파업사태의 경우, 회사는 파업참가 조합원 3천9백 28명을 상대로 1백48억원을 가압류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5개 발전회사는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2002년 4월 7일)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대상자 결정, 가압류 처리 등은 노사관리 안정화 차원에서 정계 및 고소사건과 연계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해고자 선별 복지 조치와 함께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노

조를 길들이고 조합원들의 저항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가압류'를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노동자들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해 사용자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의 경우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 민사상 대응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조합원들은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손해배상·가압류 등 법제도적인 맹점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3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채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남발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탄압의 수단을 제공하였다"며 "노동쟁위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종모)

[안내] 2002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 자료에는 김대중 정부 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인권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2002년 발생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임위 자료나 분야별 주제(예를 들어, 주한미군, 감옥, 탈북자 등)를 신청하시면 제본해 드립니다. 우송료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문의 : 02-741-5363 (최은아) E-mail : angelica-choi@hanmail.net

<기고>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고상만(인권운동가)

1월 9일 오전 6시20분경. 창원 두산중공업 사내 노동자 광장 앞에서 한 노동자가 분신했다. 배달호(50) 씨. 그는 81년 한국중공업에 입사 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접 숙련공으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전형적인 노동자였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인 두 딸의 아버지였던 배달호 씨는 분신을 결행하기 이틀전인 7일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 작은딸을 껴안고 울었다고 한다. "아빠가 너한테 해 준 게 없어 미안하구나.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야 한다."

다음날인 8일 저녁 5시경. 여느 때와 달리 일찍 집에 들어온 배달호 씨는 부인에게 45만원이 든 봉투를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남편이 있으니 좋지"라며 전해준 봉투에는 자신의 글씨로 '배달호 45만원'이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파업 이후 구속과 징직 3개월, 그리고 이어진 사측의 임금, 부동산 가압류 조치 이후 6개월간 단 한푼의 월급도 가져다주지 못했던 그는 마치 월급 봉투를 가져다주듯 그렇게 어디에선가 돈을 얻어 부인에게 전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일 아침 5시 15분경. 다른 날과 달리 1시간 먼저 회사에 가야한다고 말한 배달호 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 아침에도 부인의 불에 뽀뽀를 한 후 출근했다고 한다. 부인이 남편의 분신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2시간 여가 지난 새벽 7시경이었다.

혈값 매입 후, 막가파식 노조탄압

1월 11일. 밤 11시가 넘어 도착한 창원 두산중공업은 너무나 넓었다. 중공업답게 뛰든지 다 크게 지어진 공장을 본 후 "도대체 여기 땅은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한 노조 간부는 "100만평이 넘는다고" 답했다. (정확히는 138만평) 2000년 12월 12일 당시 공

기업 중 흑자를 기록하던 자본금 5조원의 한국중공업을 불과 3천57억원이라는 혈값에 사들인 두산그룹이 제일 먼저 나선 것은 노조 무력화를 위한 무자비한 탄압이었다.

1200여명의 사원을 내쫓은 후 노사가 함께 합의한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18명을 해고하고 90여명을 징계했다. 그뿐 아니라 61명을 고소고발하고 89명의 노조원에게는 총 65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들의 급여 및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심지어 아파트 보증금까지 차압했다. 이 같은 사측의 막가파식 민, 형사 소송은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무기였으며 그 결과 극한 상황에 처한 노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노조측은 2002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노동조합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상식 밖의 발언 이후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며 두산중공업은 노동조합 탄압을 넘어 노조에 대해 완전 백기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여명 정도, 재산 가압류, 급여 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정책,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유서에서)

사측은 배달호 씨가 마치 임금 및 부동산 가압류 때문에 생활고를 비판하여 자살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 문제에 대해 노조측과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너무 성급한 분신을 한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유서에서 보듯 임금 및 부동산 가압류가 배달호 씨 분신 항거에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마치 배달호 씨의 분신 항거가 모두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처럼 사측이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일 뿐이었다.

"3개월 정직, 해고자 불 낮았어"

무엇보다 배달호 씨가 분신 항거한 원인은 자신이 노조 교섭위원으로 일하면서도 해고자 18명의 복직에 대해 아무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한 자책감이었다고 한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라고 유서에서 썼듯 실제로 배달호 씨는 아침 7시 회사에 출근하여 제일 먼저 노조 사무실 1층 해고자와 수배자들이 생활하는 방에 들린 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 바란다'는 유서의 말처럼 배달호 씨는 생전 "나는 정직 3개월을 받아 해고자들을 볼 낮이 없다"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극악한 노조 말살 정책과 가진 자의 횡포에 대해 분개하며 자신이 일하는 보일러 공장 소속 200여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노조 운동에 함께 할 것을 열심히 설득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사측의 가압류와 무자비한 징계 앞에서 한껏 위축된 조합원을 보며 배달호 씨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크게 통탄했다고 한다. 결국 노조가 무너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두산중공업의 현실을 보며 배달호 씨는 자신이 가진 단 하나의 생명을 던져 사측에는 불의에 대한 항거를 표시하고,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각성을 촉구한 것이었다.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 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동지들이여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해 주기 바란다. 나는 항상 우리 민주광장에서 지켜볼 것이다."(유서에서)

배달호 씨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앞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제2의 전태일'이 되어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바라보겠다는 '민주광장'에서 한 늙은 노동자의 절규가 어찌될 것인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였다.

고 배달호님의 명복을 빕니다.

“류국현 사임, 밀실인선 결과”

인권단체들,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요구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씨가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데 대해 13일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그의 과거 반인권적 행보와 비리 전력을 볼 때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퇴진 투쟁을 벌여온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류국현 사태’를 계기로 ‘밀실인선에 따라 인권위원을 임명해 온 관행이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반인권·비리 전력자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라도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4명의 인권위원 중 1명이 검찰 뒤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권위원은 나눠먹기 식으로 인선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감대증 정권은 이번 인선 사태를 통해 인권위원을 지명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명백해졌다”라며, “차기 정권과 적극 협의해 류 씨의 후임 인권위원을 인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씨는 지난 9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에는 인권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발언을 했으며,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 복을 벗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류 씨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곧바로 류국현 퇴진투쟁을 전개해 왔다. (범용)

<인권이야기>는 내일 자에 실습니다.

제2기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 공개모집

제2기 인권운동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신청방법, 세미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kr/inst) 참조.

□ 1학기 (2월~7월) 세미나 내용

1. 정세 및 운동 동향 분석 1(월 7:30-10:00)
2. 기본적 인권론 1-역사(화 1:30-4:30)
3. 인권문헌 연구 1(수 7:30-10:30)
4. 근·현대사(목 7:30-10:30 금 1:30-4:30)

□ 일정

오리엔테이션 : 2월 8일(토) 오후, 개강: 2월 10일(월)

□ 신청 및 문의

1. 신청서 마감: 2003년 2월 1일(토)
2. 신청서 제출: 팩스 741-5364 또는 3676-1302
ihrm@sarangbang.or.kr 또는 doll@sarangbang.or.kr
3. 문의: 02-3675-5363(이창조)/02-3676-1301(서준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2003년 1월 13일)

1.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항거

두산중공업 노조 전 대의원 배달호씨,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사망(1.9)/ 민주노총·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노동열사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구성...노조탄압중단 및 두산중공업지회 현안문제 해결·한중사유화 두산재벌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제 실시·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박용성 회장 공개사과 및 대한상의회장 퇴진 촉구(1.10)

2. 인권위원, 아무나 하나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인권사회단체, 국가인권위 청사에서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사퇴촉구 시위(1/7)/ 류국현 인권위원 사의 표명...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원 인사 공개적인 검증절차 요구(1.10)

3. 소과개정은 이렇게..

여중생범대위 한미소과개정 추진단, ‘불평등한 한미소과개정 범국민 요구안’ 발표·형사재판권·시설과 구역·군사훈련 조항·민사청구권·환경·노무 등 7개 분야(1.9)/ 여중생범대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서울지검에 정보 공개 청구(1.10)

4. 위안부 피해자 시위 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1돌 맞아...지난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205명 중 79명 숨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공식사죄와 피해배상’ 요구(1.8)

5.국보법·도청·의문사·총기사고 소식 등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윤경희씨 연행(1.8)/ 국가정보원 직원, 국정원 상대 도청·미행금지 가처분 신청...정보유출 의심 “동료로부터 도청 당해 정신적 피해 입고 있다”(1.8)/ 의문사위,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사건 관련 광주지검 불기소처분에 불복 재정신청 내기로 결정...광주지검, 지난달 30일 의문사위에 의해 고발된 경찰 무혐의 처리(1.9)/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1년 11월 ‘진주총기사건’ 가해 경찰 이윤희 경사 과실치사죄 인정 벌금 1천만원 선고(1.9)

6. 노동권 관련 소식

인천지하철 청소년노동자 노조 설립...고용불안·저임금 시달려(1.6)/ 의정부보건소, 노조가입 간호사 8명 계약 만료 명분 무더기 해고 물의(1.8)/ 울산 등부경찰서,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때 공무원들에게 집단연가 허가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게 두차례 출석 요구...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조항에 따른 정당한 조처” 항의(1.1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 방송대 법학과 교수)이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마지막 항의”의 표시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인선되기 전까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으로로서 인권위 설립투쟁을 주도했고,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으로서 적극 추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2001년 10월 국회(민주당) 지명 뒤편으로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돼 활동해 왔다.

누구보다도 인권위 활동에 애정을 갖고 헌신해 왔던 곽 위원이 김창국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인권위원들의 문제점, 조직운영의 비민주성, 업무수행 방식 등을 직접 비판하며 사임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곽 위원은 언론에 배포한 “국가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란 성명에서 “위원장의 감수성 및 지도력 부족과 위원들의 사명감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전원위의 형해화, 정책소위의 특권적 지위, 소위간 업무불균형” 등 명백한 잘못이 벌어졌으나, “집행부의 독선과 편익, (상임)위원들의 무기력과 기득권, 기타 이해관계 등이 얽혀서”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의 법령제도 개선 권고와 인권정책 권고가 위원장과 집행부에 의해 묵살되기 일수였다”며 “현재의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관료제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런 관료제화는 “(상임)위원들에게도 닳이 있지만 가장 큰 닳은 집행부의 전략기획 마인드 부재 및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곽 위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14일 논평을 발표해 “권위주의로 가득찬 운영, 무기력한 위원들의 행태, 그리고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가득찬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집행체계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인권위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쇄신 방향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전원의 환골탈태의 노력 △공개적인 운영

2003년 1월 15일(수)

제 22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과 검증 가능한 활동 △인권위의 관료화를 낳은 사무처 중심주의의 운영 개혁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위원장의 대오각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곽 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인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태세여서 향후 행동이 주목된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전면적인 쇄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김창국 위원장 퇴진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곽 위원이 중요하게 지적한 인권위 내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생각한 채, 곽 위원이 인권위 내부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비칠 수 있는 대목만 강조·인용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반축을 사고 있다. 아직 인권위의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곽 위원 사임을 계기로 인권위 문제를 집중 진단하는 기사를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대군)

클릭! 인권정보자료

『한국어린이·청소년의 인권-진주지역 사례연구』

엮은이: 김중섭 / 펴낸 곳 : 오름출판사 / 2002년 12월/ 399쪽

진주지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출간됐다. 지난해 출판된 『2001년 한국지역사회의 인권』이 진주지역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면,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주지역의 상황을 1년간 조사한 생생한 현장리포트다. 이 책의 특징은 어린이·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단체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생활지도사 등이 집필자로 참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대안을 현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지역은 전체 인구 비율 중 어린이·청소년이 18.1%를 차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호 증진할 수 있는 진주시나 진주교육청의 전담인력이나 부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시설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동집필자 중 식선옥 씨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태 조사, 연구와 상담, 인권침해 고발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진주시 아동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최은아)

○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

고 배달호 씨의 사망사건에 부처

를실증주의이다.

지난 9일 노조간부인 배달호 씨가 분신 '자살'한 사건은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에서 질곡된 우리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 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수단이 자 통로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권은 법원의 맹신적 '법률'만능주의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딛고 민주화로 지칭되는 일련의 개선조치들을 통해 국가부문에 관한 한 미흡하나마 인권보장의 틀을 나름으로 구축하여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은 과거의 정경유착을 대체하여 자신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찾아야 했다. 노사갈등이나 권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 등 경찰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었던 인권담론들을 다시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재포획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에 적극 부응한 것이 가처분·가압류제도를 활용하는 법원의 맹신적 법

자 한다.

가처분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힌다. 하역업주가 도급의 방식으로 기존의 하역노동자들의 작업권을 박탈하였음에도 법원은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 대하여 작업장출입금지·가처분을 내렸다. 평화롭고 안정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원들이나 비판과 대안제시의 자유를 주장하는 비평가 혹은 기자 개개인들에게 우리의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이라는 조치를 통하여 생활과 활동의 근거를 박탈하며 중국에는 그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본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종 인권탄압' 수단

이 법률과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인권보장의 틀이 인권의 법적 제도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후의 인권수호자가 법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권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전횡에 의하여 그리고 법조관료로 둘러싸인 법원의 맹신적 '법률'만능주의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법가치인 인권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념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민법이나 민소법만이 마치 최고법인 양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우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라고나 할까? 권위주의적 통치의 고통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려고 하는 참에 그것도 법과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억압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법원은 국가권력이 기업의 경제권력에 의하여 대체되는 이 변화의 양상을 굳이 알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권이나 헌법보다는 민법이나 형법을 우선하는 법률관료, 법조관료의 틀에 안주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법원에 관한 한 아직도 권위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아나, 우리의 법원이 법률만능주의와 법률실증주의라는 고착된 틀 속에서 인권을 향한 시대적 요청을 보지 못하는, 그럼에도 자신의 판단에 대한 비판을 열어두지 않는 태도를 지속하는 한 신자유주의에 편승하는 반인권적 작태는 더욱 빈발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건국대 법대학장으로 재직중입니다)

〈현장스케치〉 2003 청년인권워크샵

“인권마을에서는 교육·의료 등이 모두 공짜”

회사원, 고등학생, 군인, 대학생, 사회단체 활동가 등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서울 크리스찬아카데미하우스 내에서 열린 '2003 청년인권워크샵'이 바로 그 자리.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인권의 개념과 역사, 내용 등 인권일반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학대받는 아동,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참가자들은 인권의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직접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 '영화 속 인권 찾기' 프로그램에서는 모뎀 성원들이 모두 봤던 영화를 골라 인권의 시각으로 '영화 다시 보기'를 시도했다. <미녀와 야수>의 야수는 외모차별의 희생자로,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은 가문의 성공을 위해 희생되는 여성으로 묘사함으로써 차별이나 사회적 편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인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담아 '인권마을'을 설계했다. 인권마을에서는 교육, 병원, 보육 등 생계에 필요한 수단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마을 중앙의 광장에서 전체 문제를 논의하며 언제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자동차는 없고 이동수단은 자전거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제로서 '인권교육 기회의 제공',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물 철거'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출했다.

워크샵을 마친 뒤 이정희(26, 교사) 씨는 "여전히 권위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인권을 누르고 있는 교사들에게 인권을 알리고 싶다"는 자신의 결심을 소개했다. (김영원)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지난해 12월 하월곡동 산2번지 언덕 꼭대기 구멍가게에서 만난 통장 부부는 자신들이 사는 얘기를 들려주는 대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골목으로 나섰다. 그들이 발걸음을 멈춘 집 앞에서 누구보다 힘들게 달동네의 겨울을 나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다. 최저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빈곤은 곧 생존권의 박탈이었다.

어느새 곱길자 씨 집 앞에 통장부부와 동네 할아버지, 세 살 박이 막내딸을 안은 곱 씨가 좁은 골목을 짝 매운 채 둘러섰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에서 곱 씨네 여섯 식구의 힘겨운 겨우살이를 짐작한다. 곱 씨는 "몇 달 전에 30만원씩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9만8천원으로 깎이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면서 "겨울이라 남편은 일을 못하는 날이 더 많은데..."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다.

곱 씨네 사정을 잘 안다는 동네 할아버지는 "이 집 에 아빠가 일 나가는 날은 한 달에 보름도 못 된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많아야 70만원이고 적으면 50만원도 안 되는데, 생계보조금을 10만원 정도밖에 안 주면 60-80만원으로 여섯 식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이나"며 여섯 식구의 고된 삶을 전하려 애쓴다.

곱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곱 씨 식구가 한 달을 나는 60-8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곱 씨는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15만원 정도와 노동에 의한 가구소득 50-70여 만원을 빼고, 나머지 45-6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했지만, 곱 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10만원도 안 되는 것이다.

권리 되찾는 방법도 몰라

문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책정한 곱 씨 남편의 일일근로소득에 있었다. 동사무소 기록에 책정된 그의 일일근로소득은 100만원이 넘었다. 방수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일용노동자로서 겨울에는 체 보름도 일하지 못하는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일일근로소득에 대해, 이 지역 사회복지사는 "일하는 사

실이 확인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일근로소득을 책정하는데, 주로 노동사무소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악된 비숙련 노동자의 일당 수준에 기초한다"라면서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질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가구가 터무니없이 많은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실제로 그는 몇 달 전 철거로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350가구를 담당해 왔다.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주거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빈곤층은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최저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다.

장애, 아동, 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생계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급 장애인의 한달 추가지출은 20만원이지만 장애수당은 7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대상자의 누락은 일선의 전담 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급신청 탈락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였으며, 이 중 23.9%가 최저생계비의 절반 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우가 45.3%에 달한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일부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녀, 증손자도 부양의무자로 보는 것은 이러한 기준의 비현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추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결국,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완화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근)

● 바로잡습니다 ●

1월 8일자 2면 <인간답게 살 권리 2> 해설기사에서, "2종의 경우...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 같다"의 부분을 "비급여 항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일반 보험가입자와 별 차이가 없다"로 수정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16일(목)

제 22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위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위해 3년 여간에 걸친 투쟁을 주도했고, 2001년 1기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곽위원의 인권위 철수는 한 개인의 신상 문제를 떠나, 그 동안 곁을 대로 곁이온 인권위 내부 운영의 문제점이 일시에 폭발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현 상황을 '국가인권위의 심대한 위기국면'으로 이해하면서, 곽위원의 사임을 계기로 불거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 '위원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

곽노현 위원이 밝힌 주요한 사임 배경의 하나는 '인권위원회 운영구조'의 문제다.

현 인권위원회는 11명의 인권위원(위원장+상임위원3+비상임위원7)과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는 진정사건의 접수·조사를 비롯해 정책·법령 개선안 마련, 인권교육 등 각종 업무를 계획·집행하며, 이를 사무총장과 위원장의 직제라인이 관리감독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인권위원들은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해 사무처에서 올라온 사안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즉, 집행기능은 사무처로, 의결기능은 인권위원들에게로 분리된 형태의 운영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구조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효과적인 역할 분담으로 안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위원들의 역할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위원과 사무처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는데 있다.

인권위원 아닌 심판위원으로 전락

"현재 상임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사무실 있는 비상임으로 자리매김돼서 어떠한 실질적 기능도 못하며 예산을 축내고 있다. 비상임위원들은 종합적인 국가인권위원이 아니라 진정사안에 대한 심판위원으로 전락했다."

"인권위의 운영구조는 너무나 파행적이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전원위원회는 진정구제 안전을 다룰 뿐, 조직 운영이나 인권현안, 심지어는 정책제도개선 사안조차 다루지 못하도록 껍데기만 남았다."

이상은 곽위원의 신랄한 비판이다. 실제로 위원장과 정책소위 소속 3명(상임1+비상임2)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진정사안에 대한 각

하·기각·합의권고'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정책 등의 업무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결국 인권위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가며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셈이다.

본질 비켜간 법 해석 논쟁

곽위원의 사퇴 결심에 불을 당긴 것은 지난 7일 열렸던 '위원·간부 합동 워크숍'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03년 인권위의 핵심사업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문제가 논의됐는데, '위원의 역할'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위원은 '비상임을 포함해 위원 1인당 1개 이상의 팀 구성'을 주장한 반면, 사무처측은 '상임위원 1인당 1개씩 3개 팀 구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사무처측의 논리는 '위원들 중심의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위원의 고유 권한에 위배된다'는 것. 즉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으며, 결국 '국가보안법' 등 3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워크숍에서의 충돌은 의견상 '인권위원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다. 즉, 워크숍 파동은 인권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곽위원과 이를 견제하려는 사무처측의 충돌에서 사무처측의 형식논리가 승리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법 해석'의 문제보다는 '인권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신장에 복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 2면에 계속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 1면에서 이어짐

이 점에 대해 한상희 교수(전국대 법학)는 "인권위는 정책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무처 중심으로는 전문성이 발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위원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도 배치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두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 딜레마... '인권위원의 자질'

인권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인권위원의 자질' 문제다.

최근 '류국현 위원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인권위원의 자질은 인권위의 아킬레스건이다. 현 국가인권위법은 대통령(4인)과 국회(여야 각 2인), 사법부(3인)가 각각 인권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1년 1기 인권위원 인선 당시 누구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다. 이렇듯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지는 인권위원 인선제도는 인권위원 개개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위원들 스스로 드러낸 '자질부족'

실제로 인권위원 자질 시비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권위원들 스스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개를 차단한 문제였다. 2002년 3월 인권위원들은 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 규정을 삭제하고, 사실상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운영규칙에 합의했다. 물론, 위원들 내에서 적극적인 의사공개를 주장한 인물도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개인적 이해관계에 한눈파는 인권위원들의 모습 또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지난해 연말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이진강 전 위원은 '대한변협 회장직 출마'를 위해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사실 역시 '재류 쟁기'에 바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인권위원의 겸직금지규칙' 역시 난산 끝에 제정된 사실이 있다. 지난해 초까지 인권위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용환 변호사는 한 기고글에서 "조문을 교묘하게 구성하여 현재 인권위원들이 겸하고 있는 수많은 직책을 하나도 그만둘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인권위의 중요한 활동과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울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한 소극적 조사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서 위원회 스스로의 권한 포기 △비전향장기수 복송차별 건에 대한 판단 포기 등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의심케 한 대표적 사안들이다.

곽노현 위원은 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들의 무기력과 침묵, 사명감과 전문성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위원들 스스로가 인권위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음을 질타한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인권의지 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인선의 과정은 위원회가 진정으로 인권위원회일 수 있는지 회의하게 만드는 최대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인권위원 평가장치 전무

아직까지 인권위원 개개인을 평가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지난해 조용환 변호사의 글을 통해 비로소 인권위원의 자질문제가 공론화됐듯이, 현재로서는 인권위 내부인사의 입을 통해서 인권위원의 자질문제를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인

권위원 개개인의 활동을 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현실에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원의 자질을 둘러싼 여러 시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들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상희 교수는 "인권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처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 위원장과 집행부의 독선

곽노현 위원은 무엇보다도 '위원장 및 집행부의 독선'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인권현안에 대한 전략적 인식공유 및 대응방식을 단 한번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 그것은 '의안상정권'을 독점해 온 집행부의 책임이다."

"현재의 인권위는 기관장을 정점으로 하는 단순한 관료제 행정기관과 별 다를 바 없이 실질적으로 관료제화하고 있다. (상임)위원들에게도 탓이 있지만 가장 큰 탓은 집행부의 전략기획마인드 부재 및 오만과 독선에 있다."

결국 김창국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의 독선이 인권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서 멀어진 인권위를 자초했다는 것이 곽위원의 진단이다.

"현재의 인권위는 겉으로는 분주하되, 안으로는 철학과 생명이 없는 죽은 인권위"라는 곽위원의 참담한 고백에 대해, 이제 위원장과 인권위원, 그리고 사무처가 각각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다. [이창조]

* 내일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인권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봅니다.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개경고하자, 인권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일"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인수위 업무보고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유시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직무 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권위는 최고통치권력자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사무처의 심상돈 총무과장도 "인수위 업무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9조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상희 교수(전국대 법학)는 "인권위를 소속 없는 국가기관으로 둔 입법취지에 따르면 보고의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가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보고'는 상하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위원직을 사퇴한 곡노현 교수(방송대 법학)도 "특별보고는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지만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불과 두 달 전에 행정기관에 아니라고 해놓고 이런 처사를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업무보고의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업무보고의 중요한 취지가

"노 당선자의 공약인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인권위 산하 기관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인권위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내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인권위가 차별실태를 조사하거나 제도개선 권고를 내리는 등 차별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로 나서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곡 교수는 "인권위가 차별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그동안 차별철폐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만나 차별시정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협의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라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차별시정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조직적 관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권적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인수위에 보고하는 일을 자제했어야 했다"라고 덧붙혔다. (허혜영)

다섯번째 반딧불이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산딸고는 친구가 없다>

미국의 이라크전 개시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면서 중동은 다시 전쟁의 위협아래 놓이게 되었다. 지난 2000년 제5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는 미국의 군사도발로 희생당하고 있는 중동의 유랑민족, 쿠르드 민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다 주는 작품이다.

미국의 이익에서 본다면 두 종류의 쿠르드 민족이 있다. 이라크 산악 지역을 근거로 '항(抗)이라크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가 '착한 쿠르드'라면, 이라크 공격의 전진 기지를 마련해 주는 미국의 우방 터키에 대항해 수십년을 항쟁하고 있는 PKK(쿠르드노동자당)는 '나쁜 쿠르드'인 것이다.

지난 91년부터 9년 동안 쿠르드를 취재한 미국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케빈 맥키넨은 91년 걸프전을 취재하기 위해 이라크로 들어간다. 그가 걸프전에서 '발견'한 것은 쿠르드 민족이었다. 터키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산민족 쿠르드인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중동의 산악지대를 누비며 '독립투쟁'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쿠르드 독립투사들은 단지 중동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으로 이민 온 쿠르드인 카니 형제들은 미국 안에서 '항터키전'에 주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투쟁은 총을 들고 산악을 누비는 국지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터키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쿠르드 말살정책의 잔혹함을 미국과 국제 사회에 폭로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선 이들은 '나쁜 쿠르드'인 셈. 터키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의회와 정부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미 정부는 '없어져 줬으면'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민법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카니 형제를 괴롭히고 있다.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억울하게 죽어간 쿠르드 민중들과 아직도 산악을 헤매며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게릴라들의 실상을 미국 방송을 통해 알리려 했지만 좌절되고 만다. 방송국들은 모두 '쿠르드 인권문제'를 꺼리고 있기 때문. 터키의 인권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미국의 도덕성을 치장하는 좋은 '거리'라면 쿠르드 문제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쿠르드 민족의 오랜 격언처럼 이들은 정말 '산딸고는 친구가 없다'. 1월 22, 23일 저녁 7시30분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열리는 '반딧불'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김정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17일(금)

제 22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착잡·올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16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 두산본사 앞 인도는 검은 머리띠와 두건을 쓴 노동자들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 9일 회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분신한 고 배달호 씨의 죽음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무대 위에 설치된 분향소 옆에는 '손배 가압류 해제', '노조탄압 중단'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렸다. '배달호 동지 살려내라!'는 노동자들의 외침과 함께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추모·살인 두산제벌 규탄대회'가 시작됐다.

추모사에서 발언자들은 '배달호 씨의 분신사망 사건은 수십억 손해배상 및 가압류와 징계·해고·고소고발 등 박용성 회장이 진두지휘한 두산제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하면서, △박용성 회장의 퇴진 △손해배상 가압류 78억 철회 및 해고 등 노동탄압 원상회복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에도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는 붓물처럼 터져나왔다. 참가자들은 두산 본관을 향해 '계란세례'를 퍼부었고, 건물 옆에 걸린 두산 깃발을 내리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주석 씨는 지난해 발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를

당한 노동자다. 박 씨는 "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당한 탄압과 똑같다"며 "먹고살기 위한 투쟁조차 불법으로 취급하는 건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태광하이텔노조 조합원인 김혜진 씨는 "일손을 놓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손해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누라가 노조 활동한다면 지지할 남편이 어디 있겠냐"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안산지구협의회에서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권향숙 씨는 "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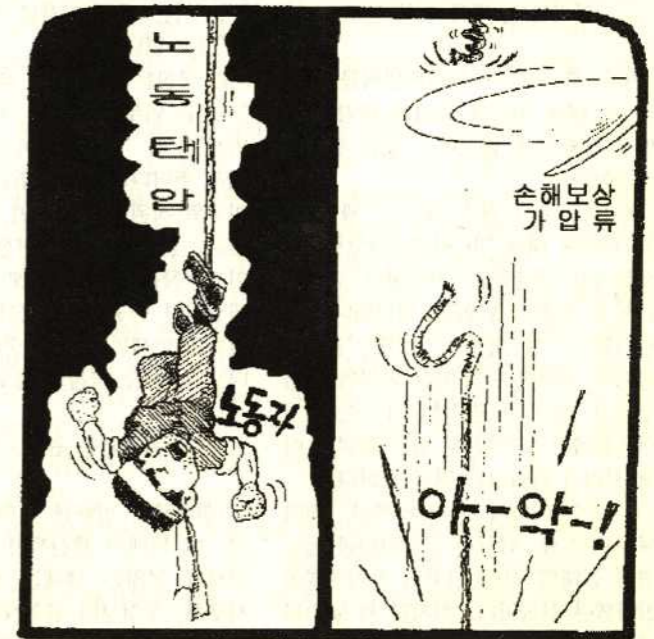
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파업이 끝난 후에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했는데(회사에) 몇 억씩 물어줘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손배소송, 가압류 등 노조를 길들이고 조합원들의 저항을 누르려는 회사의 노동탄압이 멈추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뿐이라는 게 한결 같은 이야기였다.

한편, 민주노총 등 4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5일 각각 창원과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antidoosan.or.kr)를 개설해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과 함께 박용성 회장의 국제기구 직함을 박탈하기 위한 국제연대운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영원)

만화사랑방

이동수



다섯번째 반딧불이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산 딸고는 친구가 없다」

때 : 1월 22, 23일 저녁 7시30분

곳 : 광화문 아트큐브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국가인권기구 공대위의 상임집행위 위원으로 입법투쟁을 3년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인권단체의 추천과 국회의 선출,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3중, 4중의 국민적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진 인권위원으로서 나의 양심과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처럼 입법정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료제화한 인권위(그것도 위원장의 권위주의에 의해 부채질되고 위원들의 무책임성에 의해 관철되고 있음)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3일 곽노현 교수는 ‘인권위원 사임의 변’에서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중심 운영구조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 등 그 동안 인권위의 폐쇄성으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인권위에 대한 고민의 정도와 이해득실 여부에 따라 인권단체는 ‘분주’, 인권위원은 ‘관망’, 사무처는 ‘합구’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곽 교수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 대책 논의 분주

먼저 곽 교수가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인권단체들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곽 교수의 사임에 대해 “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좌절이자 인권운동 차원에서 공대위 질서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공대위 질서의 완전한 단절’이란 인권위 설립 투쟁을 했던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인권위에서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곽 교수 이외에 정감자 위원, 최영애 사무총장, 남규선 공보담당관 등도 과거 공대위 시절 인권위 설립투쟁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곽 교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지난 1년간 인권

위의 운영 등과 관련해 인권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인권위가 과거 공대위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고 있다’는 인권위 스스로의 주장은 곽 교수의 사임을 계기로 도덕적 명분을 상실했다.

이 대표는 또 “현 인권위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며, 「국가인권위 전면쇄신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모임」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총체적 개혁을 위해 인권위 내 새로운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라며, 민간출신 직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위원장의 보필로는 인권위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인권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오 국장은 “곽 교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인권위는 ‘그렇다’, ‘아니다’, 아니면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고치겠다’는 등의 답이 없다”며, “이는 책임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가 현안을 피해가고 문제제기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른 것은 따져볼 수준도 안 된다”라고 힐난했다.

오 국장은 인권위의 쇄신책에 대해 “자기들 업무와 행정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인권지킴이로서 인권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인권위원, 사무총장, 인권위 직원들을 봤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끊임없이 인권현장과 호흡하고 인권현장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위라면 인권단체는 물론 언론과 시민들도 언제든지 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오 국장의 충고다.

위원회는 관망·합구

인권단체의 발빠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생산적인 토론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는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무엇보다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먼저 유현 상임위원은 전화통화에

서 “곽 위원의 말에 동감한다”,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잘 짚었다”, “저희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겠다”라며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정감자 비상임위원도 곽 교수의 문제제기가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기사로 나가는 것이라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어렵게 전화연결이 된 인권위 사무처의 한 민간출신 직원도 마찬가지로 반응이었다.

인적·구조적 쇄신 절실

곽 교수의 사임은 인권위원들의 자질 문제를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놨다. 인권위원들의 발상과 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인권위원들의 물갈이는 불가피하다. 사무총장도 법 형식주의와 효율성을 앞세워 단일한 집행체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최영애 사무총장이 한때 몸담았던 공대위의 문제의식도 결코 사무처가 집행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인권위원들을 배제하는 현재의 운영구조는 혁신돼야 한다. 인권위에서 가장 열성적이었던 곽노현 교수가 좌절 끝에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역설적인 상황에서, 인권위원들의 소극적 활동을 인권위원들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전원위의 형해화, 소위간 업무불균형 등도 극복돼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무엇보다 위원장 자신이다. 김창국 위원장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했던 자신의 권위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이 인권위에서 1/11 밖에 안 된다는 변명 뒤에 안주하지 말고, 곽 교수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과감한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18일(토)

제 22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잊혀진 아동권, 궁색한 변명

유엔아동권위원회,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장 에그버트 뉘, 아래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현지시각으로 15일, 8시간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회가 열렸다.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 교육부, 노동부 등 각 부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읍저버로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94년에 1차 보고서를,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96년 한국정부보고서를 심사한 후 20여 개 항목의 권고를 했고, 이번 심사회회는 지난 7년 동안 이루어진 아동권의 진전사항과 유엔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년 전과 달라진 게 없어

위원들의 질문은 △유보조항 철회 여부 △체벌금지 △협약 이행을 위한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적이고 다각적인 체계의 마련 등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사항의 이행여부에 집중됐다. 이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답변은 여전히 “시기상조다”, “고려중”이라는 데서 진전이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협약 비준 시 유보했던 조항에 대한 철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협약에서 3개 조항을 유보했는데 그중 하나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시 아동이 부모를 만나 볼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한

국 정부는 ‘국내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이는 1차 심사 때도 했던 답변으로 7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고려중”이라는 것은 2차 보고서 심사를 받기까지 ‘잊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또한 1차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아동권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는 거짓보고가 들어있었다. “그 위원회가 왜 2차 보고서에서는 사라졌냐”는 추궁에 정부 대표단은 “1차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위원회였을 뿐인데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어서 아동권리 이행사항을 점검·조정하는 상설기구인 것처럼 보인 것 같다”는 궁색한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체벌금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2면으로 이어짐)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대열에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은 부당한 법,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 조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가협 등 3백61개 인권사회단체들의 호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당선은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해 왔다. 선거 시기 ‘맑은 정치’의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불을 당기지 못했던들, 노 당선자의 오늘이 과연 있었겠는가? 그가 청산하려는 ‘맑은 정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인권 악법들을 철폐하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다. 따라서 노 당선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승리’를 지속시키기 위한 그의 화답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 한총련 이적규정 적용자 등 석방의 대상은 명확하다. 민가협은 이들 양심수 명단을 63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심수 석방이 63명에 그치면 안 된다는 점을 노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일제강점 시기부터 시작된 병역거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양심수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이’를 양심수라고 한다면, 병역거부자들 또한 양심수임이 분명하다. 정권을 향한 것이든, 악법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병역을 향한 것이든, 양심에 따른 행동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역대 정권 중에서 양심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정권에 반대하고 병역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반인권 악법의 매서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정권 초기 모든 양심수들의 차별 없는 석방! 단호한 만이 반인권 악법의 매서움을 녹일 수 있다. 노 당선자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1면에서 이어짐)

유엔아동권위원회 정부보고

이에 대해 한국 담당인 시타렐라 위원은 "한국 정부가 1차 보고서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며 "1차 때 했던 권고를 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동권에 대한 인식 부재

토론 과정 전반에서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가 대안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아동의 참여의 권리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의 체벌금지 △반차별 캠페인 △경찰과 법원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아동권 교육 △호주제의 폐해와 아동의 성명선택권 등 위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담긴 문제의식을 정부 대표단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언어 문제가 아니라 아동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보기에 제기되는 질문에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의아해하며 '한국의 현행법과 제도는 이렇다'는 식의 단편적인 답변이 계속되자 토론이 진전될 수 없었다.

또한 대안에 있어서도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할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여론이 성숙되지 않았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여론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기대

위원들은 2001년에 신설된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의 위원 중에 아동권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느냐"며 위원 인선과정에 관심을 보였고, 아동의 진정이 얼마나 접수됐으며,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의 신설이 가능한지, 국가인권위가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을 보였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정부대표단의 태도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태도를 벗어나 잘못이나 부족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대안을 구하는 열린 자세를 보였다.

대표단의 책임자인 문경태 실장은 회의 직후 시타렐라 위원에게 "1년 후에 한국에 초청하겠다. 협약의 이행 사항 여부를 와서 점검해 달라"고 했고, 이에 시타렐라 위원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민간단체와 평가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아동권의 이행이 3차 보고서 제출 때까지 또다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대표단의 이런 약속부터 이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보고서 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1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제네바: 류은숙]

새로운 인권비디오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III」

애니메이션으로 아동의 인권을 설명하는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III>이 출시됐다. 이 작품은 유니세프와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NFB)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연작시리즈. 2000년 인권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1, 2편이 5, 6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인 반면, 이번에 출시된 3편은 13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며 민감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작품을 그렸고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 시리즈의 특징이다. 수록된 작품은 모두 7편이며 총 51분에 담겨있다.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교육에 쓰일 수 있는 가이드북도 같이 들어있다. 가이드북은 토론수업이 가능하도록 '주제', '해당 유엔 어린이·청소년조약', '줄거리', '토론거리' 등으로 분류되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국제조약도 수록되어 있다. ● 구입문의 : 02-741-5363 (인권운동사랑방) 값: 18,000

1. 결투 (6분 45초) 태어나자마자 거대한 컨베이어벨트에 놓여진 소년의 이야기. 아동권 조약 13조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2. 환각의 늪 (8분 14초) 방학이 시작되자 심심해하던 소년은 우연히 마약중독자의 폐임에 빠지게... 이 작품은 '조약 33조 마약·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를 말한다.
3. 사랑의 하모니 (7분 5초) 사랑에 빠진 소녀, 소년의 이야기. '의견을 표명할 권리'에 대한 은유다.
4. 자물쇠의 유형 (5분 54초) 학교를 가던 소년은 '거대한 손'에 붙잡혀 자물쇠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32조 '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작품.
5. 거레 (6분 37초) 인도의 한 순박한 소녀가 부모에게서 팔려 도시로 오게 되는데... 34조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사실감 있게 보여준다.
6. 마스크 (8분 12초)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맞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풍자적 작품이다.
7. 죽음의 뒷 (7분 3초) 어두운 인생을 비판하는 아이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6조 '생명에 대한 권리 및 생존과 발전의 확보'를 이야기하는 작품.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21일(화)

제 22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이무영-각하, 민승기-혐의없음..."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발생한 경찰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 김현철 검사는 대우차 노동자 집단폭행 사태와 관련해 '살인미수·업무방해·독직폭행·직권남용·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무영(당시 경찰청장), 김종원(당시 부평경찰서장) 씨 등 경찰 간부 5명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부평 경찰테러'로 불린 사건은 그 해 1월 정리해고를 당한 대우차 노동자들이 4월 10일 노조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경찰병력이 무력으로 가로막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노조원들은 "회사가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길이었으나, 경찰은 '상부지시'라는 이유로 다짜고짜 출입을 봉쇄했다. 경찰병력과 대치하던 노동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도로에 주저앉자, 곧바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무장한 전투경찰대원들은 방패와 곤봉, 군화발로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폭행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비디오로 촬영됐던 당시 상황은 공중과 방송으로도 보도돼, 온 국민을 놀라게 만든 바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92명은 경찰간부 및 현장 지휘책임자, 성명 미상의 전투경찰대원 등을 고소했으며,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도 함께 고

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간부들에 대해 모두 면책결정을 내렸으며, 직접 폭행에 가담한 피고소(발)인들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민변의 김진수 변호사는 "집회 현장에서 비디오를 관동해가며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하던 검찰이 대우차 사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의문사건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이모 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관 이 씨가 김준배 씨를 구타하는 현장을 아파트 2층에서 목격했다'는 신고, 전모 씨의 진술을 배척하는 대신,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아파트 7층 주민과 동료경찰들의 진술만을 인정, 이 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 씨의 구타로 김준배 씨가 사망했다고 밝힌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

의문사위는 "검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씨의 폭행을 목격한 주민의 진술을 배척했다"며 재정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신고, 전모

건을 소극적·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제29민사부(재판장 곽종훈)는 "시위가담자들이 무자항의 표시로서 웃옷까지 벗고 있었음에도, 무장경찰병력 중 일부가 경찰봉·방패와 같은 경찰장구로 시위가담자들의 머리·얼굴 등 신체의 중요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이창조]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점 △당시 두 사람이 폭행장면을 목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의문사위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아파트 7층 주민 황모, 이모씨와 동료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이씨의 폭행을 부정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위 조사에 따르면, 황모, 이모 씨는 최초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의 진술이 폭행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의문사위의 설명이다.

또한 동료경찰관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검찰은 김준배씨 사망 다음날, 경찰관에 의한 폭행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부검감정서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허혜영]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루현의 [아Q정전]에 보면, 아Q라는 인물은 동네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신을 때리는 놈들을 '버릇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는 것이니 때리는 자들이 후대자식이 되고, 형편없이 두들겨 맞는 자신은 합리화된다. 이것을 '정신적 승리'라고 믿는 것이다.

아Q의 독특한 정신적 승리법을 알게 된 동네 청년들은 아Q에게 "난 벌레다. 난 벌레에 불과해서 맞아도 짜다"고 이야기하도록 만든다. 아Q는 스스로를 벌레이기에 맞아도 짜다고 말하면서도 '역시 자기를 비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세계 최고일 것'이라면서 또다시 자신을 합리화하고 흡족해한다.

난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왜소한 개인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처버릴 것이다. 이러한 합리화는 미약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일지도 모른다.

아Q식 '정신적 승리법'

한 대형유통업체 노동조합 간부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 간부는 나에게 말했다. "비정규직들은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일을 엉망으로 해서 야단을 치기라도 하면 다음날 안 나와버려요. 도대체 회사나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다른 간부가 또 이야기했다. "요즘 매장에 있는 젊은 비정규직들을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공동체적 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함께 회사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리타분한 걸 왜하냐고 하고, 친구들이나 애인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더 즐기거든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번졌다. "비정규직들은 도대체 삶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게으르고, 되는 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

니까 평생 비정규직 신세를 못 면하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이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서신

그런데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인터뷰를 했던 젊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도 "답답하게 일자리에 매어있을 필요 있나요. 현실을 즐기면 되지요."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은 또 하나의 아Q식 '정신적 승리법' 아니었을까? 열심히 일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에 톡하면 찢리고, 정규직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들로서는

휴게실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하청노동자들은 직영이 오면 큐대를 내려놓고 비실비실 자리를 비켜준다

그렇게라도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비참해서 살 수 없는 것 아닐까? 삶의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고 자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력감'과 '길들여짐'이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력감'과 '길들여짐'은 투쟁의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투쟁에 나선다. 그가 비록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당장 투쟁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숨죽이

며 기회를 노린다.

그러나 나는 많은 비정규직을 만나면서 이들이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게 되었다. 울산에 있는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젊은 노동자였는데, 어쩌다보니 사내하청 중에서도 가장 노동조건이 안 좋은 3차 하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색시, 이곳에 있으면 인생 끝이야. 빨리 잘 알아봐서 2차 하청이나 1차 하청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봐." 하신단다.

휴게실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하청 노동자들은 직영이 오면 큐대를 내려놓고 비실비실 자리를 비켜준다.

'길들여지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멸시, 무리한 요구, 반말과 욕지거리들이 일상을 이루면서 비정규직들이 초기에는 '욕'하는 성미가 생기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비하하여 주눅들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1류 노동자와 2류 노동자를 나누었던가. 정규직이 오면 큐대를 놓고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밑바닥 인생이고 그저 낮은 임금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차별 속에서 어떻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신을 2류 인생으로 취급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구조이자, 그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차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선택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을 벌레로 취급해보기도 하고, 합리화해보기도 하지만, 심연에 놓여있는 인간다움을 향한 외침,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 2면으로 이어짐.

2면에서 이어짐.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아Q가 사형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는 걸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다니 난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라고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했을 때 우리는 희극이 아니라 비극을 보게 된다. 그의 자위가 정말로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아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심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실을 극복하는 투쟁 과정에서 패배할지라도 그 길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아무리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 속 깊이 있는 인간선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 노동자들이 공돌이, 공순이라는 비하적인 호칭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우뚝 세워 당당한 '노동자'로 자기 선언을 해왔듯이.

'패배할지라도 그 길에 나서야 한다'

한진관광 면세점 동지들의 투쟁이 끝났다. 결과는 패배였다. 4, 5개월의 임금이 그들 손에 주어진 전무였다. 그러나 그 동지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투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실은 자본에 의해 강제된 2류 인생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을 비정규직 투쟁으로 규정했고, 투쟁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3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투쟁하던 이 때 외에 한번이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적이 있었나, 내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투쟁을 이야기하고 삶의 비전을 말할 수 있었던 투쟁기간이 어떻게 보면 내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승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투쟁에 나선 순간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두 눈 똑똑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바로 그 위에서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을, 바로 자신의 힘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선언이다. 투쟁으로 나선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무기력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존엄성을 세우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참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사람의 당당한 노동자로, 인간으로 일어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동지들의 투쟁은 자신들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묻혀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이들을 짓밟는 데에 알게 모르게 일조해 왔던 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노동자'의 이름에 걸맞은 연대를 실현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주간인권호름

(2003년 1월 13일 ~ 2003년 1월 20일)

1.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 류국현 씨 인권위원장 사임 계기로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 촉구(1.13)/ 과노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위원직 사임...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마지막 항의'라고 밝혀(1.13)/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 '김창국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전원의 환골탈태 노력과 인권위의 공개적인 운영 및 검증 가능한 활동' 등 인권위 전면쇄신 촉구(1.14)/ 국가인권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현황 보고해 독립성 훼손 논란(1.14)

2. 배달호씨 분신 계기...노동자 분노·투쟁 확산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두산중공업 민주광장에서 추모집회와 두산제철 노동단합 규탄집회 열어(1.13)/ 민주노총, 전국 단위 사업장 시한부 파업과 두산제품불매운동 결의(1.14)/ 천주교 정의구현 사관교구 사제단 등 60개 시민사회단체, '고 배달호 열사 경남지역 대책위원회' 구성...회사 쪽에 균형잡힌 노사관계와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 촉구(1.15)/ 두산중공업 노조, 하루 파업(1.16)/ 전국금속노조 산하 160개 사업장 3만6천여 조합원, 4시간 파업(1.16)/ 노동자 등 5천여 명, 마산 삼각공원에서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추모 및 살인 두산제철 규탄 대회' 열어(1.18)

3. 인수위원회, 쏟아내는 인권공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장애·학벌·외국인·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검토(1.14)/ 인수위원회, 일반 기업이 여성·장애인·지방대 출신 취업 희망자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 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실태, 세계무대에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열어...정부 대표단, 아동권에 대한 인식 부재 드러내(1.15)

5. 기탁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주한미군 50~60년대 지뢰 매설한 뒤 철수하면서 제거하지 않아 21개 지역 민간인 등 100여명 사망"했다고 밝혀(1.15)

서울지법, 노태우씨가 '녹화사업'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1.1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 "차가운 시선" 난관

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 '삼청교육'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아래 삼인련)은 「2002 삼청교육대 백서(하)」(아래 백서)를 발간해 삼청교육의 실상을 다시금 국민들 앞에 소개했다. 2001년 「백서(상)」에 이은 두 번째 백서 발간이다. 이번 백서는 국방부, 청송감호소 등 삼청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주요하게 수록하고 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악?

백서'는 저학력자 등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검거됐으며, 이는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졸업자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도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서는 삼청교육대상자 가운데 폭력사범이 80.8%를 차지한다는 국방부의 통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친구들끼리 싸우다', '이웃간의 싸움을 말리다',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등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려 잡혀간 사람들이 폭력범으로 둔갑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4주 교육이 5년으로 연장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경찰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A·B·C·D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B·C급에 해당하는 3만9천7백42명이 25개 군부대로 분산 수용돼 '지옥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4주 교육 후 집으로 돌려보내 준다는 약속은 6개월간의 강제노역에 이어 또다시 최장 5년의 감호형으로 이어졌다.

2003년 1월 22일(수)

제 22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폭력에 대해, 백서는 "기본 순화교육기간 동안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철저한 보복을 가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나가더라도 더 이상 국가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삼청교육은 5공화국 초기 국방부와 법무부 등이 합작해 만들어낸 공포통치의 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

그로부터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삼청교육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서는 삼청교육의 진상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삼청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경찰청, 국방부 등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모두 폐기됐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삼인련 회장 전영순 씨는 발품을 팔아가며 곳곳의 정부자료실을 뒤졌고, 삼청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부나마 찾아냈다.

전 씨는 "어느 정도 삼청교육의 실상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갈만한 사람이니까 갖지'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결국 삼청교육 문제 해결은 '피해자인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다.

전 씨는 또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라며 "어서 빨리 삼청교육대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인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삼청교육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영원)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끝>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배우지 못해서...', '학력이 없어서...' 하월곡동 산2번지의 두 아버지가 한숨 쉬며 뱉은 말이다. 달동네로 밀려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가 모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란 듯이 말한다. 지금 하는 노동으로는 가족들과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지만, '배운 게 없어서' 좀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희망은 일찌감치 버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지식들 앞에 놓인 미래가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학력을 결정하고, 학력이 경제·사회적 지위를 만드는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공교육 따라가기도 벅찬 아이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득세하는 지금, 가난한 부모들의 불안대로 교육의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하월곡동에서 8년째 '밤골아이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숙경 수녀는 '대부분의 산동네 부모들은 보통 10만원이 넘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데, 지금의 교육현실에선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조차 없다'고 말한다. 달동네 아이들이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지금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녀 문제가 덜 하지만,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교육에 의한 교육수준의 격차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방은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수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모든 것은 공부방에 맡겨지고

빈곤지역에서 공부방이 하는 역할은 단순한 학습보조뿐이 아니다. 빈곤지

역 아동들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단지 '학교공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숙경 수녀는 '빈곤이 낳는 가정해체, 가정불화 속에서 아이들이 방임·결식·학대·일탈·따돌림 등에 노출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공간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밥을 해결하고, 상실한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민간 공부방에 떠넘겨왔다.

"공부방 법적 지원 시급"

빈곤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해 왔음에도, 정작 공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결국 무허가 시설일 수밖에 없는 공부방들은 언제나 운영비 부족에 시달린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평화는 힘이 세다』 『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

펴낸곳: 푸른숲 / 글: 로자 자페 외 / 그림: 레지 팔러 외 / 옮긴이: 장석훈 / 53쪽

길고 긴 겨울방학, 아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면 좋을 인권교육 교재 2권을 소개한다. 《세계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시민학교》 시리즈 중 '폭력'과 '차이'를 다룬 『평화는 힘이 세다』와 『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

이 책들은 프랑스 비야르(Byard)출판사에서 출간된 시리즈(원제 Vivre Ensemble)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치-평화, 차이, 폭력, 차별 등-에 대해 아이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책은 크게 '옛보기', '들여다보기', '생각해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옛보기'에서는 활짝한 생활 동화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작은 사례들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들여다보기'는 옛보기의 핵심이 되는 개념, 논리와 주장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생각해 보기'는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 책들은 아이들에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스스로 판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교재와 차별성을 갖는다.

『평화는 힘이 세다』는 폭력을 주제로, 『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는 차이를 주제로, 아이들을 인권의 세계로 이끈다. (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국가인권위, 이대로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최근 과노현 국가인권위원(비상임)의 위임직 사임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15개 인권단체 공동주최로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현 상황이 국가인권위의 위기국면이

며, 인권위의 변화를 위해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양한 쟁점방향 제출

인권위의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는 △인권위 운영과 업무에 대한 전면 공개 △위원회 조직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정례화 △사무처와 위원간의 운영구조 전면개혁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위원장과 사무총장, 인권위원들의 물갈이 등 인적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출됐다.

더불어, 류국현 위원 파동을 계기로 불거진 인권위원 인선문제에 대해서도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단체들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 △상시적으로 인권현안에 관해 인권위를 강제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단체들 내부의 자성과 연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출됐다.

대응기구 구성은 유보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인권단체들의 단일한 대응방안이 도출되지는 못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위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상조사부터 시작하자’는 방안에 대체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 ‘쇄신’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한 가운데 진상조사에 나서자”(다산인권센터 송원찬)는 견해와 “진상조사 활동 이후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기구를 구성하자”(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는 견해 등을 놓고 단체들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방식은 추후의 논의과제로 유보됐다. [이창조]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달라진 게 없다”

22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시킨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2주기를 맞아,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2004년까지 전 역사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와 관련해, △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운행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특히 이동권연대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넓은 간격과 높이 차이’로 인한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 위험을 새롭게 제기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간격은 3cm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5cm를 넘는 곳이 허다하다.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높이 차도 보통 5cm를 넘는다. 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앞바퀴가 승강장과 차량사이의 구멍으로 빠져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양영희 씨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 폭이 넓어 그 사이에 끼기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칠 위험도 있어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동권연대 조직국장 박현 씨는 “일본의 경우,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역무원이 직접 승강장으로 나와 ‘간이 경사로’를 깔아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40여명은 오후 1시경부터 서울역에서 청라리역까지 매 역마다 ‘간이 경사로’를 설치해 전철에 탑승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두시간 반에 걸친 시연회로 전철운행이 지체되자, 비장애인이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한 비장애인은 “뭐 하는 짓이냐. 장애인들이 시민들에게 동정받을 생각을 해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반응에 이동권연대 박주희 씨는 “장애인도 시민이다.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서로를 단절시키는 의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든다”고 말했다. [허혜영]

2003년 1월 23일(목)

제 22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직권조사...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대표적인 폐쇄형 수용시설인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실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21일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2명을 검찰 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3월 부산 만덕복음병원(아래 만덕병원)에 수용돼 있던 김모(55)씨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진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체 수용인원 290명 가운데 통상 100명 정도가 행려환자인 시설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인권위는 병원측이 가족들의 퇴원요청마저 무시하면서 환자를 강제수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가 찾아낸 강모(53), 권모(48) 씨 등의 사례에 따르면, 병원측은 가족이 찾아와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원치료비 미납’ 등의 이유를 대며 환자를 내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병원측이 환자수용에 집착하는 배경엔, 환자 1인당 한달 평균 8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있다. 반면, 시설과 의료인력 면에선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또, “경찰관이 무연고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무연고환자가 무분별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원환자의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됐다. 병원측은 본인의 실명을 밝힌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가명 기재를 고집함으로써, 가족들의 접근을 사실상 방해했다. 인권위는 “병원측이 행정목적 등을 이유로 기록부에 가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고집했으나, 시설에서 가명을 사용할 경우 가족 등이 환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병원측의 조치는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만덕병원에서는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서신을 검열하며 필기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등,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부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한 실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보호시설 전반으로 조사확대 필요

현재 국가인권위에는 만덕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20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기획담당관실의 임송 사무관은 “진정된 사건부터 차근차근 조사를 진행한 뒤, 전체적인 조사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정신병원의 숫자는 70개 정도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문진웅 사무관은 “인권위가 지정한 내용을 정리해서 의료기관 입원시설에 대해 일체조사를 한 뒤, 필요하다면 법령이나 지침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정신병원은 물론, 각종 미인가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및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원/이창조]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의 주요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비정규직 문제’를 선정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전원위원회는 위의 세 가지 인권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결정했다.

‘인권위원·사무처·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은 6개월 내지 2년의 기간 동안 주요 인권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1월 7일 열린 인권위 내부 워크숍에서는 ▲탈북자 인권 ▲외국인노동자 ▲사형제도 ▲프라이버시보호 ▲과거청산 등의 과제도 함께 검토됐으나,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인권위는 또, 2003년에는 ‘군부대 의문사’에 대한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이를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주요기업의 채용 차별관행 예방 등이 주요업무계획으로 결정됐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는 2002년 활동과 관련해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권정책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진정사건의 처리지연과 조사처리 체계 미확립 △국민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기능의 미흡 △주요 시민인권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 미흡 등을 주요하게 평가했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22년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도로 복판에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진 양동학(남·49)씨를 보며 울부짖었다. 23일 오후 2시 삼청교육대 피해자 15명은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서울 한국은행본점 앞 도로로 뛰어 들었다. 10여 분쯤 지날 무렵, 양동학 씨가 웃음을 벗고 자신의 배를 30cm 가량 갈로 그은

뒤 쓰러졌다. 22년 간 자신들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한 절규였다.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 실상은 8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세상에 알려져 왔지만, 22년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진상규명이나 피해배상은 전혀 없었다. 13대 국회 이후 15대 국회까지, 매년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청

교육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피해자들은 16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결국 자기 목숨을 내거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대구에서 상경한 정주용(남·77) 씨는 "(공약도 안 지키면서) 그게 무슨 대통령인교?"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박춘화(여·58) 씨도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22년이 지났다. 이제 사람들도 지쳤다"며 그 동안의 힘겨움을 토로했다. 한편, 양 씨는 서울 백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다. [김영원]

"노동쟁의에 손해·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사건과 관련, 사회단체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며,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를 일괄 취하하고, 정치권은 부당한 손해배상 가압류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의 김인회 사무처장은 "정의과정

에서 폭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뿐 아니라 영업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개개인에게 가압류를 씌우는 법원의 태도에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며 "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호 씨 분신사망 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신종 노동탄압 손해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5일에는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23일 오전 7시30분경 건설운송노조 노동자 2명은 '노동자성 인정과 손해배상 가압류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지난 2001년,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150여 명에게는 76억원에 가까운 가압류가 청구된 바 있다. [허혜영]

백혈병환자 인권위 농성돌입

"글리벡 약값 인하" 등 촉구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원 20여명은 23일 오후 3시20분경 글리벡 보험적용 확대와 약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의 김상덕 씨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글리벡 약가 결정은 환자의 생명보다 제약사의 이윤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인권문제지만 국가인권위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며 농성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글리벡 약값을 한 알 당 2만3045원으로 결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계산에 따르면 백혈병 환자는 한달 최저 50여만원에서 최고 553만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들은 24일 오후 2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 소개 못한 사연들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합니다'

하월곡동 연재 기사를 끝낸 뒤,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면의 한계로 소개되지 못했던 사연들, 취재과정에서 느낀 소회들을 다시 담아보았다. <편집자주>

◎ 하월곡동 취재 방담회 ◎

- 사회 : 최은아
- 참석 : 김명수, 박세진, 박유민, 정보근, 허혜영

"골목에서 무작정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얘기할 힘조차 없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하월곡동 취재 기획부터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취재기자들의 뇌리 속에는 만났던 주민들의 모습이 선하다.

○세진 : 문제의 사슬이 꼬여있으니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유민 : 돈 때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약 당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보근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운동 하는 것이 배운 소리 같았으나 하월곡동 취재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사회권 운동이 출발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명수 :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개인이 부족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시스템에서 개인이 똑똑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연탄가스 가득찬 방의 아이들"

○명수 : 김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50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연로하셔서 당신 몸을 기누는 것도 힘든데, 아들이 장독대에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방에만 누워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계속 누워 있으니까 욕창

에 걸리는데도 적당한 치료를 못 받고 있죠. 한 때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적극적으로도 못했다고 합니다.

○혜영 :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번씩 오는데 회충약이랑 소화제 등을 놓고 간다고 해요. 정작 필요한 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철거가 시작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진 : 광진이네 집 취재를 가면 골목 입구에서 동생 영희가 저희들을 마중 나와 손을 잡고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그만 방... 많은 슬픔이 고였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하월곡동 사람들에게 권리란 단 세상 이야기와 같았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이익을 제기하는지, 주민들에게 아무 정보가 없었다.

○혜영 : 광진이네 집은 연탄가스를 배출하는 기계가 고장나 연탄가스가 방안으로 가득 퍼집니다. 광진이네 집 골목에 들어섰을 때부터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데 그 연탄가스가 가득 찬 방안에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 일상화된 셈이죠.

하루는 김밥집에 갔는데 영세공장의 노동자들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밥집 아줌마가 "저 사람들은 점심 15분, 저녁 15분이야"라고 하더군요. 구두밀창을 몇 개 붙이느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에 시간이 곧 돈이죠. 저임금이 사람을 기계처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유민 : 광진이의 경우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 검사비가 필요한데 검사비가 무려 11만원 정도 나왔어요. 누구한테 11만원은 하루 술값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광진이에게는 큰돈이죠.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못 찾아 먹느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수 : '자포자기', '해도 안 된다'는 의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식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련과 벽에 부딪쳐 좌절했던 경험들이 쌓였을 겁니다.

○세진 : 자기가 못 나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혜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등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우선 구청에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구청 직원들조차 이 절차를 모릅니다. 그 동안 요구해온 사람들도 없었다고 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절차 역시 거의 모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라'는 의식이 아직까지 있죠.

○명수 : 사회권 영역의 법은 사람들의 삶에 별다른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민 :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 너만 똑똑하고 의지가 있다면 장학금 받고 공부 잘 하면 지원해준다는 식이죠. 실제로 가보면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놓아도 그렇지 못한 환경이 많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사회적 의식구조 자체가 이 사회를 계층화시킵니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너희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위계층으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 3면으로 이어짐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취재후기 2면에서 이어짐

“무기력·외로움·상실감의 늪... 자존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수 : 하월곡동에 알콜중독자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 생기고 아내는 집을 나가죠. 또한 주거든 건강이든 물질적인 부족이 정신영역까지 우울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유민 : 대부분 힘든 노동을 하는데 술로 잊을 수밖에 없으므로 알콜중독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보근 : 인간은 모두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싶는데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일상적으로 겪는 상실감과 좌절감이 클 것 같습니다.

○혜영 : 자기 삶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무기력하고 외로움, 고립감, 사회와의 단절감이 큼니다. 자활공동체 같은 곳이 마련되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가면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아이들이 공부방을 이용한다든지 등 지금은 낮은 수준이나마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재개발을 통해 그런 사회적 관계가 깨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보접근도가 낮습니다. 자기권리를 알아야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데 경제·시간적인 여건 때문에 절차에 접근할 수 없죠.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인터넷의 접근으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빈곤은 불가피한 게 아닙니다”

○보근 : 예산이 문제입니다.

○혜영 : 국가가 의지는 있으나 돈이 없다면 지금처럼 그 이상의 주장을 못해야 하나요? 사실 그런 것을 강제해내야 합니다. 강제할 수 있으려면 재정이 무엇에 우선적으로 쓰이는지 충분히 알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수적인 생존권 보장에 우선적인 재정투여가 필요하고 국가의 의무로 강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은아 : 정말 한정된 재정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장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에 중심을 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하죠. 단지 돈이 없다는 것으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혜영 : 돈이 없어서 지금처럼 참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은아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는 그들의 몫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의 접근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노인·임산부 등이 그 시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이라는 가치는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같이 향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혜영 :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참여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인권운동과 지역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자기의 구체적인 문제를 권리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에필로그

기자들은 처음 인터뷰를 시작할 때 주민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고 한다. 그 삶을 듣는 것 자체가 ‘개입’인데 과연 취재 이후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는 거다. 그러나 막상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마음을 쉽게 열어주고,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며, 심지어 격려해주는 말을 했을 때, 닫혀있었던 마음이 열렸다고 한다.

“주민들은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간접적으로 일을 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연재를 마친 기자들은 자료집 만들기 열심이다. 취재하면서 들었던 고민들, 기사를 쓰면서 참고했던 글들을 모아 하월곡동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최은아)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25일(토)

제 22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글리벡 약기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1층에서 농성에 돌입한 백혈병 환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글리벡 약기 결정 철회와 약기인하, 보험적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백혈병 환자들은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기를 한 갑셀 당 23,045원으로 결정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결국 환자를 외면하고 제약사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다. 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은 글리벡 4알을 꺼내 “이게 10만원 어치”라며, “환자들은 죽음의 벼랑 끝에서 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글리벡 약가가 한 갑셀 당 23,045원(생산원가의 30배)으로 결정됨에 따라,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백혈병 초기 환자들은 한 달에 2백76만5천원(하루 4갑셀 복용기준)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백혈병 초기 환자는 전체 환자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보험이 적용되는 중기, 말기 환자의 경우엔 각각 74만6천원에서 124만4천원(하루 6-10갑셀 복용기준)씩을 부담해야 한다. 나라별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이 가격은 영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의 9배에 해당한다.

백혈병 말기 환자인 최중섭 씨는 “하루에 10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하루 8알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무려 240여 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백혈병 초기 환자와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의 상

황은 더 심각하다. 아버지가 GIST 환

자인 양현정 씨는 “한 달에 3백만원씩 하는 약값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 올해 들어 아버지는 약을 더 이상 못 드시고 있다”고 토로했다. GIST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험적용을 허가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아 왔다. 2면으로 이어짐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1980년 8월 4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1년 3개월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6만7백5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42명이 군부대로 끌려갔다. ‘죽음의 순화교육’으로 불리는 삼청교육은 그렇게 시작됐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곳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기억한다. 가족보다도 못한 수용생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라는 수칙, 강제노역, 기합과 구타, 심지어 살상까지 서슴없이 이뤄졌던 그곳에서 수용자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당초 4주로 예정됐던 삼청교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인 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가 발표됨으로써 계엄포고령의 효력도 상실됐지만, 수용자 가운데 7천5백78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이 다시 떨어졌고, 1년, 2년... 길게는 5년까지 억류생활은 계속됐다.

당시 검거과정에서 참여했던 경찰관조차 “실적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검거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삼청교육은 무자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됐다. 89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군부대 내에서의 사망자는 3백97명, 행방불명자 4명,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조차도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니 88년 11월 26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을 약속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도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피해자들은 국회에도 매달려왔다.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 회기 때마다 ‘삼청교육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한결같이 심의지연으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도심의 한복판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자신의 배를 갈랐다.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해 장애인인 됐다는 이 남성은 자신을 22년간 내팽개친 세상을 저주했는지도 모른다.

22년이 지나도록 삼청교육의 진실은 야사(野史)로만 떠돌고 있다. 국가가 팔짱끼고 있는 동안, 피해자들의 힘겨운 발품을 통해서만 진실의 편린들이 모아지고 있을 뿐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복원해야만 한다. 피해 배상은 진상규명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진실규명이 없는 한, ‘삼청교육’은 진행형이다.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쟁점화되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배·가압류에 의한 파업권 제약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 22일 현재,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액이 50개 사업장에서 2천222억원이 넘었으며, 최근 6개월 동안에만 12개 사업장에서 1천억 가까운 손배·가압류 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박강우 정책국장은 "현행법이 쟁의행위의 요건과 정당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노동자가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박 국장은 이어 "법원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노조나 노조원은 물론 보증인에게까지 가압류를 결정하고, 회사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있다"며 "가압류·손배가 신종노동탄압의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의 조영선 변호사도 "법적으로 쟁의행위의 요건이 너무 한정된 것이 문제"라며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과 관련한 쟁의에서,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부득이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노조로 국한하고, 범위도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의 노조탄압 방식은 유럽에서는 거의 1백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때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자본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장진수 씨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 한라병원 노조 조합원 이은주 씨가 참석해 자신이 겪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씨는 "과수원 가압류로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가족간의 신뢰는 이미 무너져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있는 놈들은 잘 버팁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이 버티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한라병원 노동자들은 240여일간의 투쟁 끝에 생존에 대한 위협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감에 직면하게 됐다고 이 씨는 토론했다. (김영원)

※ 새로운 인권비디오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III」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1,2에 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3」을 배급합니다.

- 수록 작품 7편 / 작품길이 총 51분
- 구입문의 : 02-741-5363 (인권운동사랑방)
- 값 : 18,000원

1면에서 이어짐 <글리백>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승인결정을 통보하지 않아 처리가 누락됐던 것"이라며 "지금부터 보험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자모임은 "약값을 인하하지 않으면, 최근 인도 제약회사가 개발한 글리백 복제약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복제약은 한알 당 1,200원으로 글리백 가격의 약 1/57에 해당하며, 성분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부작용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오후 4시께 환자들은 국가인권위에 "보건복지부, 노바티스,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들이 참석해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백혈병 환자들은 '비싼 약가, 초기환자 보험적용 제외' 등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인권위측은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은 "지난해 9월 1차 심의를 끝내고,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중"이라며 "담당 조사관이 한 달간 호주로 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더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20여 명의 투병 환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가 결정이 철회되고 보험적용이 확대될 때까지 무기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28일(화)
제 22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관련 심사회의가 열린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아동권리보호의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협약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감시·조정하는 성격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제네바에 파견됐던 7개 부처 13명의 정부대표단은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최병갑 연구관은 "5년마다 협약 이행사항을 심의받는데 중앙정부 시스템의 (뒷)받침없이 그때마다 귀납적으로 (각 부처의 보고를) 모아서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법 부처 협의기구가 이뤄지면 정책만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율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부 인권과 민만기 과장은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중앙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간단체와 여러 연구자들의 오랜 지적사항이었다. 또한 이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지난 96년 1월에 한국정부대표단

이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95년 8월에 설립했다"고 했던 보고가 거짓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장치의 마련을 위원회가 또 한차례 권고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에 정부의 대응이 이처럼 빨리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는 '만든다'고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다. 위상과 역할이 모호했던 각종

위원회의 뒤를 잇는 유명무실한 기구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 민간단체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의 김학기 사무관도 "임시기구는 아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구이며, 정부내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포괄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기구의 상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가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업무사항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사항을 감시·조정하는 기관의 선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는 2월중에 간담회를 가지고 아동권리 이행기구의 상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류은숙)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지난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미군, 국군,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00여 만 명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50여 년 간 진상조사는 고사하고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진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국회는 지난 2001년 9월 발의된 '민간인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을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반인도적 집단학살의 진실규명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이 창수 정책기획실장은 "학살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데, 어떤 국가기관도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다"며, "진실규명이 인권위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첫 걸음인 만큼,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상규명위와 유족들은 진정되지 않은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분명한 만큼,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정사건들이 모두 공소시효를 지난 상태여서,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들을 각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기획실장은 "학살사건들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인권위는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정된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지난 48~51년간 알려진 학살사건 가운데 일부이며, 학살규명위는 앞으로 1천여 명에 이르는 피학살자들 관련 진정을 계속 낼 계획이다. (허혜영)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

정치적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역화, 지방화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민주주의를 별로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남한사회의 어떤 지역,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권력의 뿌리를 캐 들어가 보면 그 권력의 기반은 주로 일제 식민지 지배나 한국전쟁 전후의 좌우의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전후의 격동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운동세력이 소멸된 정치 사회의 공간에는 친일인사와 관료 및 경찰, 극우반공 청년운동 세력, 권력에 기생한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조직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정치권으로 진출해내고 지난 50여 년 동안 물리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오늘날 이들은 이제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체와 언론, 각종 학교의 이사회, 단체장과 지방의원, 관변단체 등에 진출하여 확고한 권력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치사회의 공간이 이렇다 보니, 최근의 정당들의 개혁과정 과정에서 보여지는 한나라당의 토착세력문과 민주당의 살생부의 갈등들은 이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수구 권력들의 마지막 저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토대 위에 오늘날 농촌의 경우에는 말 꺼내 하지는 젊은 사람들이 소위 근대화과정에서 다 도시로 떠나버려 지역내의 비판적인 소리조차 만들어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 지역은 이제 인구 과포화 상태가 되어 지역과는 아무런 연고도 갖지 않는 떠돌이 시민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아래 위층에 누가 사는지, 집 주변에 러브호텔과 같은 위해시설이 생기거나 말거나 지역 일에는 도대체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지역을 그저 잡자는 집이나 아이들 학교 다니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조차 소속감과 유대 의식을 갖지 않은 모래알과 같은 개인들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여 떠돌고 있는 현대판 유목민들과 같은 것이다.

정치사회의 비민주화는 이러한 환경과 풍토에서 비민주, 반인권, 반환경, 관료주의와 효율지상주의가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잘못된 힘을 가진 자들이 정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인학살과 같은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나 국회, NGO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100년 간의 중앙지배의 역사를 극복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치 사회의 공간이 바르게 자리

주간인권호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1. 손배·가압류, 민중들의 분노는 활활

한진중공업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재산 가압류 중단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 (1.20) / 대책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 열어 (1.21) / 건설운동노동자 2명,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서 밧줄 고공시위...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재산가압류 철폐' 요구 (1.23) /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 촉구...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 (1.23) / 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1.24)

2. 인권위여, 인권옹호에 적극 나서라!

15개 인권단체,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인권위 변화 위해 인권단체들 공동대응 필요 공감 (1.22) /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원 20여명, 글리백 보험적용확대와 약값인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농성돌입 (1.23) / 전국학살규명위, 민간인 피학살자 집단진정... '인권위는 민간인학살 직권조사 하라' (1.27)

3. 달라진 게 없는 것들...

장애인이동권연대,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2주기를 맞아 기자회견과 집회 열어... '달라진 게 없다', 서울시에 적극적인 이동권보장 촉구 (1.22) /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울 한국은행본점 앞서 할복...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요구 (1.23)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농성 돌입 (1.24)

4. 전세계 민중들의 반전평화 외침

반전활동가, 이라크 침공저지 위해 '인간방패' 미·유럽서 이라크로 집결 (1.21) / 북한, 남북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핵무기 만들 의사 없다' 밝혀 (1.22)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유엔의 북 제재는 전쟁위험 높이는 것... '북 문제 유엔에 상정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논의해야' (1.24) / 여중생법대위, '2003년 자주평화 실현 범국민 촛불한마당' 올해 들어 첫 대규모 촛불집회 열어 (1.25) / 이스라엘, 탱크와 무장 헬기 동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의 가자시티 기습 침공... 교전과정에서 팔레스타인 13명 사망·60여명 부상 (1.26)

매김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민간인학살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이고도 역사적인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영일 씨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29일(수)

제 22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8일 낮 1시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먼저 민변 노동·복지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기소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재정신청의 전면적인 확대 △상설적 특별검사제 시행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특별검사제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재임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지·고소·고발된 경우, 검찰은 기초수사 이후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국가형벌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또 검찰조직개혁 방안으로 △검찰 공안부 폐지 △상명하복의 의무규정 및 내부 결재제도 폐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검찰부 개혁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검찰쪽 토론회자로 나선 대검 검찰연구관 이준명 검사는 "초기수사를 한

이후에 계속 수사를 할만한 사건이면 특검으로 넘기라"는 상설특검제의 도입은 검찰의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최고 사정기관(검찰)을 고발기관으로 만드는 셈"이라고 특검제의 상설화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 이 검사는 "아들이 몇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집밖으로 내 쫓고 아들을 들이는 꼴"이라며,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 내부에 '특검청'을 두는 검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 내용을 접한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시 국가가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직접 손해소송을 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다.

(고근예)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발전산업의 민영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민교협,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남동발전(주)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단체들은 "남동발전이 작년 한 해만 2천4백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굴지의 알짜 공기업들이 혈값에 국내 및 해외의 독점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교협 손호철 교수는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는 발전산업 민영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며, "그런 생생한 경험을 목격하고도 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아집은 소수 독점자본의 이득만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을 겪은 후,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단하거나 유보한 상태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지난 해 9월 '선 경영권 매각, 후 주식 상장'의 방식으로 남동발전(주)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입찰제안서 접수를 완료하고, 2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도 남동발전(주)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발전산업 민영화 일정 중단' 등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당초 공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단체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민주성과 공공성의 대원칙 아래 범국민적 여론수렴을 통해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소 매각을 계속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제출했다.

(허혜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하루소식>은 심사회회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발췌·개제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의견과 질문을, '정부'는 한국정부대표단의 답변을 말한다. 질문하는 위원이 다른 경우는 단락을 나누었다. <편집자주>

<협약 모니터·조정기관>

위원: 1차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2차 보고서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면서 2차 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 언급했다. 앞서 말했던 기구는 뭔가?
정부: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상설 기구가 아니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만든 특별위원회이고 2차 보고서에 기술된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협약의 이행사항을 모니터하고 조정하는 상설기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심사 후에 상설기구를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홍보와 교육>

위원: 협약의 배포를 위한 노력은?
위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협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이 있는가?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약을 이용할 줄 아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 내용이 협약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아동을 위한 입법원칙을 담은 지침서가 제작되어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부처와 민간단체들과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메뉴얼을 이용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보며 주목하겠다.

<체벌 금지>

위원: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지 않으며, 위원회

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체벌의 부작용에 대해 알고 그 대안에 대한 정보를 주는 캠페인이 있는가?

정부: 초·중등교육법 18조와 그 시행령 31조 7항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가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체벌의 근거 규정은 교칙마다 다르고, 교칙은 교사·학부모·학생의 참여나 의견반영에 따라 다르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 최근 체벌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단체, 민간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모았지만 어떤 합의도 없었다.

위원: 교육부는 2002년 3월에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또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서도 체벌을 허용했다. 이것은 체벌을 금지하려는 어떤 행동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 체벌에 관한 논의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 교사와 논의했다고 했는데 아동과는 논의했는가? 체벌의 해악과 체벌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고려했는가? 체벌을 금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그 과정에 이용했는가?

위원: 가정내의 체벌은 어떤가?
위원: 교사나 교장의 자유재량에 체벌을 맡기는 건 안 된다. 학교마다 생각과 재량이 다를 텐데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 체벌금지를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한데 가정에서의 변화 없이 학교의 체벌이 바뀌리라 기대할 수 없다.

정부: 국가인권위는 아동에게 분노와 우울 등을 자아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체벌을 반대했다. 그리고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체벌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되풀이해 소개하는 데 그침. 가정에서의 체벌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음[편집자주])

<입 양>

위원: 한국 정부는 입양 절차를 재고하겠다고 했었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정보를 알고 싶다.

위원: 비밀입양이 전통문화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입양부모들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부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가? 아동이 입양과정을 통해 착취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 과정이 필요하다.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입양부모들이 허가 과정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길이 없다. 정부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견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라고 말해야 한다. 아동은 그런 태도와 전통에 종속되어있다. 여러분은 여론과 싸워야 한다. 이견 체벌 같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생후 5개월 미만에 입양된다. 입양부모들은 입양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고, 자기 핏줄로 등록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입양을 부진케 하는 요인이나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문화가 점차 변하고 있다. 입양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해외 입양 모두 일정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22개의 입양기관이 관장하고, 해외입양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지도자들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밀입양을 선호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공개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리: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월 30일(목)
제 22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폐쇄성과 관료화 등으로 인권단체들의 강한 질타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를 대폭 공개하고 운영구조를 개혁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류국현 사태, 과노현 위원직 사임 등으로 불거진 '인권위 위기론'에 대한 돌파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회의공개 대폭 확대

먼저 지난 27일 열린 제3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논의안건 3개와 의결안건 3개 중 모두 5개의 안건을 공개하는 과격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 최영애 사무총장은 "앞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다면 소위원회도 적극 공개하자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 있다"라며, "이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원위원회는 진정한 프라이버시 문제,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이유로 사실상 대부분의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해 왔다.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 문제는 진정한 인적사항을 기호로 표시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회의를 비공개 하겠다는 것은 위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비판이었다.

최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안건이 공개되면 어떻게 판단이 잘 안 섰는데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안건공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영규칙'은 개정하지 않은 채 인권위의 재량권으로 회의공개 범위를 확대한 조치가 앞

으로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회의공개를 막아왔던 운영규칙의 독소조항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책소위 특권화 해소

또한, 정책소위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대폭 해소됐다. 이전까지 정책소위는 인권위 업무의 대부분을 독차지했다. 인권위법 제19조에 열거된 9개의 업무 중 7개가 정책소위의

설 정 시세요. <인권하루소식>은 2월 4일자부터 찾아뵙겠습니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2』

편저자: 김진균/ 펴낸 곳: 문화과학사/ 2003년 1월

한국 근·현대의 사회운동은 '저항, 연대, 기억'이라는 매개를 통해 뛰어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격동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길 찾기의 시도로부터 출발한다.

감오농민전쟁부터 4·19, 5·18, 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줄기의 사회운동이 존재했지만, 이 운동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기록이 은폐되거나 폐기 혹은 왜곡되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했다. 이러한 지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편저자 김진균 교수(서울대 사회학)는 지난 시기 사회운동의 경험과 기억을 후일담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축적하여 사회학의 연구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기존의 사회운동론을 다룬 책들이 구조적이거나 역사적인 분석을 해왔다면 이 책은 "노동, 인권, 정보, 문화, 여성 등 영역별 운동을 가로지르는 분석의 축을 상징하여 운동하는 주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격동의 한국사회 운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고 새롭다.

김 교수는 "사회운동이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에서 조망되어야 하지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그 주체들, 그들의 꿈과 소망, 좌절과 회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만 분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조건들과 좌절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역사적 소임을 알아낼 수 있다"며, 이 작업이 앞으로 사회운동의 전망을 내오는데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은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1월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권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심사회 의의 주요내용을 발췌·게재한다. <편집자주>

<아동관련 지표>

위원: 18세 미만 아동의 문제가 간과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부 통계를 극복하고 자료수집체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가? 아동권리학회와 청소년개발원이 개발한 아동권리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협력할 계획이 있는가?

정부: 한국의 자료수집체계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권리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내법이 취하고 있는 연령 대상이 협약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권리백서로 출판할 계획이다.

위원: 그 답변은 서면답변의 반복이다. 앞서 말한 두 단계가 개발한 지표를 이용했는지, 귀 정부의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대답이 없어서 유감이다.

정부: 예-, 지적에 동의한다.

<아동의 의견과 참여>

위원: 보고서에서 협약의 기본원칙을 언급했는데, 아동의 의견이 모든 과정에서 청취되고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이 배제돼 있다. 왜 그랬는지 듣고 싶다.

위원: 한국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진정한 자유는 매우 제한돼 있다. 사실상 권한이 전혀 없으며 참여가 없다. 교칙에 따르면 학생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이것은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위원: 아동이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거나 의견을 말했는지 알고 싶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위원: 아동의 의견이 법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위원: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고 참여를 독려하는 교칙이나 지침이 있는가?

위원: 아동이 증거를 대야 하는 경우,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 아동은 한편으로 증거를 대야하고, 한편으로 아동이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와 맞닥뜨려야 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경찰에서 증언을 하고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아동에게 매우 해롭다. 귀 정부는 아동을 증인으로 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민감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위원: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지 않는 것 같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은 침묵해야 한다는 문화적 태도와 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정부: 아동의 참여의 권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과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가정에서의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부모를 교육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아동은 학교학생회와 학급회를 결성할 것이 장려된다.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거기서 입학, 졸업, 학교예술제와 백일장과 같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한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의견을 말하고 청취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결사의 권리는 학생의 창조성과 흥미와 재능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동아리의 결성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치조직과 집단은 학교문화를 해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수단에 의해 적절히 지도된다. 학생들의 불만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 또는 담임교

사에게 곧 전달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수만명의 학생이 강제두발단속의 철회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대통령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즉시 각급 학교에 극단적인 두발규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거의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있으며,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는 없지만 학교당국에 학생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제안을 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제안은 학교운영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된다.

(정리: 류은숙)

(회의의 진행은 위원들이 한차례 돌아가며 질문을 던지고 나면 정부대표가 모아서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대표단은 미리 준비해간 답변문을 읽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질문은 있으나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편집자주])

<=> 1면 '인권위' 기사에서 이어짐>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어도 피해구제 권고가 불가능했다. 진정사건은 무조건 전원위원회로 올라야 했기 때문이다.

전원위원회가 모든 피해구제 권고를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효율성과 피해구제의 지연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원위원회는 침해소위와 차별소위의 명칭을 각각 2소위, 3소위로 변경하고,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으면 피해구제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소위간 업무량의 균형을 위해 업무량이 폭주하는 소위로부터 다른 소위로 심의안건을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1년이 넘게 복지부등하고 있던 인권위의 변화의 조짐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로 보여진다.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폐쇄성과 관료성을 반성하고 명실상부한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범용)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흐름과 쟁점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10), 두산제철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또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을 갖고(1/21),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납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1/23).

2. 위기의 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의 기로에...

국가인권위가 휘청거리고 있다. 반인권·비리 전력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1/9),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1/13). 한편 곡노현 인권위원은 △권위주의적 운영 △전라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위원직을 사임했다(1/13).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들은 '위기의 국가인권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1/22), 이후 「(가칭)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구성했다(1/29). 앞서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대폭 공개하고, 소위 사이의 권한과 업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1/27).

3. 검찰, '국가범죄 면죄부' 남발에만 급급

검찰이 구치소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구치소 구공우 씨 사망사건 관련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하는 것.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폭행·치사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의문사위는 '검찰 결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1/16). 검찰은 또 재작년 대우차 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관련 당시 고발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6)

4. 규명 안 된 국가범죄, 피해는 계속된다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거세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은 「2002 삼청교육대백서(하)」를 발간했다(1/15). 22년 전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장애인인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 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1/27).

5. 보건복지부,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답하라

보건복지부는 글리백 약가를 한 달 당 2만3천45원으로 결정했다(1/21). 이렇게 되면 백혈병 환자들은 약가 부담으로 인해 생존이 어렵게 된다. 이에 투병환자 20여 명은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1/24).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글리백 약가 해결을 위한 5자회담에도 불참해, 생존을 향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1/29).

논평

- 촛불의 바다를 가리지 말라(1.4)
-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1.11)
-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대열에(1.18)
-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1.25)

인권이야기

- 1.4 김정아 - 아직도 '검문 중'
- 1.15 한상희 -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
- 1.21 김혜진 -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 1.28 이영일 -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인권정보자료

- 「한국어린이·청소년의 인권-진주지역 사례 연구」(1.15)
- 「평화는 힘이 세다」, 「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1.22)
-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2」(1.30)

기획 - 인간답게 살 권리

- ①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1.7)
- ②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1.8)
- ③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1.11)
- ④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1.15)
- ⑤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1.22)
- ⑥〈취재 후기〉 소개 못한 사연들(1.24)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

- ①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제 속 인권정책 표류(1.16)
- ②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1.17)

연재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①(1.29), ②(1.30)

기고

- 1.14/고성만 -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1.9)
-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1.16)
- 인권위 직권조사...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1.23)
-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1.30)

인권하루소식

제 100호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1993년 1월 19일 발행된 제 100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아동인권 수 인권하루소식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3년 1월 19일 한국 정부에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권고문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며, 특히 아동 노동, 아동 결혼,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권고문은 한국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3년 1월 19일 한국 정부에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권고문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며, 특히 아동 노동, 아동 결혼,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3년 1월 19일 한국 정부에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권고문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며, 특히 아동 노동, 아동 결혼,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2003년 2월

(제 2267호 ~ 제 2285호)

이번호는 2003년 2월 발행된 제 2267호 ~ 제 2285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2003년 2월 발행된 제 2267호 ~ 제 2285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2003년 2월 발행된 제 2267호 ~ 제 2285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이번호는 2003년 2월 발행된 제 2267호 ~ 제 2285호입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4일(화)

제 22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최종 견해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8일자 참조>

위원회는 지난 96년 1차보고서 심사 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체벌금지와 경쟁적인 교육풍토의 개선 등과 관련된 1차 때의 권고를 거듭 내놓았다. 위원회가 특히 우려를 표명한 부분은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아동관련 지표가 불완전하고,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미흡하며, 아동관련 정책 전반에 아동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은 96년 1차보고서 심사 후 7년 간의 아동권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밝힌 주요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문제이다. 위원회는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

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3면 권고문 요약 참조>

오는 2008년 한국정부는 3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이 아동권에 대한 망각의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토론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이행은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류은숙)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연재기사 마지막회는 내일자에 게재됩니다.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버마 NLD한국지부 회원 3인과 카메룬 1인 등 총 4인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콩고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특히 버마인 3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입국 후 1년 내 난민신청'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난민보호에 걸림돌이 되어 온 까다로운 난민 인정 절차가 앞으로 좀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이와 같은 전향적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풀이하면서, 현재 3명에 불과한 민간위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난민정책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난민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제로 버마인 3인이 추방의 위협과 생활고를 견디며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무려 28개월이나 된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하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후에도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합법적 거주와 취업, 해외여행의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취업 알선이나 거주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관준 계장은 "현재 여건상 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은 장기적 과제로만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난민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는 70명 이상에 달한다.

(배경내)

스소투하독스

5003 55

(호2825) - 호2825(지)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인권영화' 확대하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작하고 있는 인권영화가 곧 완성된다고 세간의 관심이 많다. 박광수 감독 등 6명의 기성 감독들이 '차별'과 관련된 10분 가량의 단편을 각각 1편씩 만드는 연작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2002년 가을 제작을 공표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인 인권영화가 제작된 적이 없었다"고 단언하고 이 영화가 "국내 최초의 인권영화"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어이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37편의 국내 인권영화가 인권영화제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었고(여러 가지 사정상 소개되지 못한 작품도 다수 있다), 작품을 만든 감독들은 37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수년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인권영화 만들기라는 '천직'을 떠나본 적이 없다. 북송 장기수를 담은 김동원 감독의 <송환> 등 이들이 올해 쏟아낼 작품도 한두 편이 아니다. 푸른영상이나 노동자뉴스제작단처럼 십 수년 동안 묵묵히 소외되고 차별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비교적 잘 알려진) 독립프로덕션뿐 아니라 그런 울타리도 없이 연출자 혼자서 카메라 하나에 의지한 채 제작에 혼신을 쏟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이들이야말로 '본격적인 인권영화'를 만들어 온 장본인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들 누구에게도 '본격적인 인권영화' 제작을 제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의 존재를 몰랐을까? '몰랐다'면 누가 들어도 궁색하고 게으른 변명이다. 의도적인 배제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35mm 영화감독으로 제작 진용을 짠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극장 개봉용 영화만이 '본격적인 인권 영화'의 완성태가 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무지를 드러내며 인권영화가 극장으로 진입하기 힘든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권위의 어리석음 또한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그 결과 비주류 독립영화를 확대하는 힘이 되어 '차별'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인권위 스스로가 '문화적 차별'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묵묵히 인권영화를 만들어왔던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언론이 보인 관심 중에 하나는 초저예산으로 제작한다는 점이다. 총 제작비는 3억이며 편 당 할당 된 제작비는 5천만원이라고 한다. 모두 '개미처럼 허리를 졸라매야 했고 심지어는 사비까지 보태 만든다'고 보도된 바 있다. 5천만원이 적은 예산인가? 대표적인 독립영화 지원 기금인 영화진흥위원회의 단편독립영화 지원은 최대 2천만원이며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운영하는 CGV 기금도 여러 편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난만이 예술의 토대가 된다고 역설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충분한 제작비가 반드시 좋은 영화를 만드는 기본 조건도 아니다. 다만 국내 영화 제작 현실을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제작비라는 것이다. 이는 인권영화를 만들어 왔던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앞서 말한 기금조차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1. 두산중공업, 하는 짓도 가지가지

두산중공업 노조·분신사망대책위,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성향분석' 관련 문건 공개...노조원들의 성향 분류해 등급 매기고 이에 따라 근무형태에 불이익 줬다고 밝혀 (1.27) /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사찰 문건과 관련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1.29)

2. 인수위는 귀를 더 크게 열어라!

대통령직 인수위, 철도산업 공사화 추진·남동발전 제외한 4개 발전 자회사 지분 분산매각 처리하기로...민교협·전농 등 50개 시민사회단체, 인수위에 "남동발전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 촉구 (1.28)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재정신정 확대와 상설특검제 시행 필요성 제기 (1.28) / 사회단체인사 100인,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 '핵폐기장 추진 중단과 핵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선언 발표 (1.29)

3. 미국, 전쟁 향한 잔걸음

유엔무기사찰단·IAEA, 이라크 무기사찰 결과 안보리에 보고... "이라크 사찰 시간 더 필요"하다고 밝혀 (1.27) / 부시 미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북한·이라크·이란을 '무법정권'으로 지목... "북 핵 위협 허용 않겠다"며 으름장 (1.28) / 부시 미 대통령·블레어 영국 총리, 이라크에 최후경고 일정 도출...대량살상무기 해제 시한을 6주간 부여하기로 합의 (1.31)

4. 기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권위 적극적 진상조사 요구 (1.27) / 보건복지부, 급성기·가속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약값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접거 농성 계속 (1.29) /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버마인 등 4명 난민 인정 (1.29)

지 않다. 다른 기금이란 전무한 실정이다. 완성된 후 상영과 배급수익이 제작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제작비와 생계 해결하기 위해 예식장 비디오 찍기 등 갖가지의 부업을 전전하기 일쑤이다. 푸른영상은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액수로 활동비를 책정해 두었지만 이것도 1년에 '몇 번'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바로 신빈곤계층인 것이다. 인권위 프로젝트에 참여한 감독들은 몇 달 '좋은 일' 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인권위마저도 확대하는 '인권영화감독'들은 평생 빈곤과 싸우며 제작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김정아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양육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학교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법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 할당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 정책수립 및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하면서,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 단체와 좀더 체계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불충분한 것에 주목하면서,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 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

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그룹홈과 대안적 양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또 모든 사적·공적 양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하면서, 양육비 지불을 강제집행하거나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매년 버려지거나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 우려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과 공공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하면서,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적 목적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한 것은 물론,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아동에게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 아동의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요약: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5일(수)

제 22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의 유연성 정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 △노조의 힘(단체협약의 효력 정도) △해고의 용이성 △법정휴가일수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유연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점을, ‘경직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0점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식에 따르면 총점이 낮을수록 노동 유연성이 높게 된다. 조사 결과, 한국은 13.0점으로 이탈리아(36.40점)나 프랑스(32.25점)에 비해 노동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곧 고용불안이 심하고 비정규직화가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자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매체로서 평가되는 <포브스>지의 조사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 강성노조들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재계나 인수위측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한다. 이번 조사가 주로 장기실업률이나 노동법 조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까지 감안하면, 노동 유연성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전경련과 노 당선자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온 셈”이라며, 노동 유연화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가 ‘노동의 유연화’를 고수하면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동시에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

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비정규직이 당하는 차별은 근본적으로 고용불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만큼,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의 유연화는 함께 갈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노동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차별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4일 인수위 내부 차원에서 진행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도 고용보장 문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새정부의 노동정책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고용보장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노동 유연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장식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경내)

클릭! 인권정보자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펴낸 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펴낸 곳: 세계질/ 2002년 12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입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명단 등을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을 때 불복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범위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래, 민간단체들이 국가기관의 ‘비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여왔던 다양한 ‘정보공개운동’의 움직임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한편, 책에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져 온 행자부와 민간단체간의 주요 논쟁도 소개되어 있다. 2001년 11월 행자부는 정보 비공개 사유를 대폭 추가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민간단체들은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계 구축 △정보공개방법 개선 △공익상 이유에 의한 재량적 공개조항 신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공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비밀’의 문턱을 낮추려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은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끝>

(이주노동자 자녀)

위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이주노동자와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가? 비차별원칙에 맞도록 예산과 자원을 투입했는가?
정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교장의 재량이나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2002년 9월 현재 434명의 이주노동자 자녀가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자녀를 한국에서 기르고 싶은 이주노동자 부부는 등록을 하면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노동자들은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아동 출생을 신고하지 않는다.

2002년 현재, 275명의 탈북자 자녀가 있으며 매년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들 아동은 한국에 도착하면 두 달간 적응교육을 받은 후 일반학교로 옮겨진다. 탈북자 자녀는 수업료를 내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법적 차별도 없다.

(장애아동)

위원: 귀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감정이 명백히 보인다. 만약 장애아를 둔 부모가 자녀를 숨기려 한다면, 학교에 장애아를 보냈을 때 비장애인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통합교육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정부는 통합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부: 모든 학교에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아 통합교육이 장려되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요즘에는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없다. 단지 1만3천여 명의 장애아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그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치료와 특별한 보호를 위해 병원이나 일정 시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차별)

위원: 남녀 혼인 최소연령의 차이, 성감별에 의한 낙태 문제에 대해 알고 싶다.

정부: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여성부의 설립을 비롯하여 남성과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동등한 역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남녀의 혼인가능 최소연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이다. 이는 결혼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성과 성평등에 입각해야 한다는 헌법 사상과 충돌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녀의 평균 혼인 연령이 2001년에 29.6세와 28.6세로 실제 혼인 나이와 법적 나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위원: 실제 혼인 연령이 높다면, 18세로 똑같이 조정해도 문제가 없을 법하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혼외출생아동)

위원: 기존 법의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을 검토했는가?

정부: 호주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폐지되거나 개정될 것이다. 헌법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혼외출생아동이 법적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동과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에 성·장애·비정규노동·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종식시켰다고 선언했고 차별방지를 10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시켰다.

(시설 수용과 대안양육)

위원: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홀로 된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 두는 것은 가장 간단한 처리방식이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대부분 민간 비인가

시설이며, 정부의 감시·감독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아동에게 가능한 한 가정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상임을 알고 있다.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그룹홈과 위탁양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시설보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비용은 100퍼센트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사립시설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는 말)

위원: 오늘 회의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2차 보고서 제출 이후 지난 2년동안 새로운 법·기구의 설치와 제도 도입 등이 있었고 이는 긍정적인 면이다. 하지만 1차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했던 권고를 한국 정부는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권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표단과 토론할 시간이 짧았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부: 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오늘의 대화는 아주 귀중한 기회였고 한국의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위원회의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정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 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위원: 먼길을 와줘서 감사한다. 돌아가서 많은 도전이 있기를 바란다. 특히 체벌, 입양, 호주제 등에서 많은 도전이 있기를 바란다. 알다시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시간뿐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과 내일의 아동을 위해 협약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길 바란다. 지금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정리: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행자들에게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행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여호와의 증인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본지 2002년 10월 24일자 참고)에 대해 "이행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특유한 종교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신앙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불이행 사유를 밝혔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에 따라 국가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국가관 및 국민정서에 반하는 종교단체로 불 여자가 있다"면서, 여호와의 증인 "종교 자체"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 답변서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교정교화라는 교정시설의 특수 목적에 종속된다'는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은 수용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교정교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종교행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문제삼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종교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교정시설의

장이 '국가관 및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한해서만 종교활동을 허가'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를 잣대로 종교활동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번 결정은 수행자의 실정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의식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종교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허혜영)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

노동부 특별조사반이 오늘부터 두산중공업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사간 협상이 5차례나 결렬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조사가 사측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갑문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의 지휘하에 8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 현지조사를 앞두고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석영철 상황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두산제철이 벌여왔던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조사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사측이 설 휴무 일정을 예초 이달 3일에서 5일로 일방적으로 연장하면서까지 노조탄압관련 문서와 파일을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조사반이 얼마나 적극적 조사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금도 명확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 현지조사에 들어간 후 상황에 따라서 조사반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 상황실장은 "특별조사반은 폐기된 자료를 복구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측의 증거 인멸 행위를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오늘 오후 3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배경내)

2003년 2월 6일(목)

제 22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어이없는 민원 답변서를 보내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31일,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해 8월 1심 패소 이후 '엑스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인권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위원회법 28조 1항에 따르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일 경우 위원회가 '법률상'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위원회는 이 요청에 대해 "현재 관련 진정사건이 검토 중에 있"으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엑스존에 대한 유해매체 고시처분은 '음란'을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의견제출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엑스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절실한 인권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답변서를 보낼 때까지 위원회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자세한 맥락과 의견을 묻는 단 한 차례의 통화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도 어이없는 일"이라며 꼬집었다.

인권위 법제개선담당관실의 한병일 사무관은 "관련 진정사건이 검토중인 데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개정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따로 의견 제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체적인 개정 일정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조만간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위원회가 '음란'이 '사실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의견제출을 거부한 것도 문제다. 조광희 변호사는 "누군가를 폭행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의 문제인 반면, 무엇이 '음란'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가치 판단을 요하는 '법률상'의 문제라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결국 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정을 대표도 "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의식해서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눈치보기'를 비판했다.

인권위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다른 국가기관이 아니라, 존엄한 권리를 박탈당한 인권피해자들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때다. (배경내)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유보시켰지만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남아 있는 상태.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완전 철폐하고, 외국대학의 설립제한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지금까지 상류층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을 위한 신종 일류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등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커녕 오히려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귀족형 사립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개방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아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이 쉽게 학교를 세워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사교육특구'라는 비판을 교육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교육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면서 자본이 국내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22~23조는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초·국·중·고·대·대학원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도 무제한 입학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는 특혜까지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초·중·고·대·대학원은 등록금 수익을 교육자원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마음놓고 빼내갈 수 있다.

전교조 연구국장 천보선 씨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교육개방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교육개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침해당하든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선택'의 혜택은 가진 자만의 것이며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교육 관련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교육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7일(금)

제 22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글리벡 약값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백혈병환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10시경 20여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노바티스사를 기습 점거했다. 농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이 정부의 무능력과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직접 노바티스를 상대로 약값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들은 노바티스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진행하면서 “작년 7월 노바티스는 초기 만성백혈병 환자에게도 글리벡 약값 보험 적용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즉각적인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그 동안 만성백혈병 환자의 70%에 해당하는 초기 백혈병 환자들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노바티스의 책임 떠넘기기로 보험적용을 전혀 받지 못해, 한 달에 3백-6백 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부담해 왔다.

환자들은 또한 최근 노바티스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환자에 한해 글리벡 약값의 10%를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고가의 약값을 고수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더구나 10%의 무상 지원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값인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

기에 있다.

민중의료연합 권미란 씨는 “환자들의 약값인하 요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리벡은 노바티스만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환자들의 탄원, 세금 등 공공의 노력에 의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무기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불리는 행위를 비판했다.

그 동안 노바티스는 1조원의 연구개발비용을 들먹이며 고가의 약값을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노바티스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 1년8개월 동안 글리벡으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이 약 1조4백4십억 원에 달해, 개발비용이 2년도 못돼 전부 회수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환자들은 “노바티스가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인도 제약회사의 글리벡 카피약을 개별적으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카피약의 가격은 글리벡 약값의 약 14%에 불과하다.

이날 점거 농성은 2시30분경 경찰들이 환자들을 강제 연행하면서 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의 강제연행은 환자와 노바티스측이 곧 이은 면담을 합의한 직후에 기습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환자들은 경찰의 기습 점거에 대해 노바티스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 보고, ‘합의결과와 함께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통보했다.

한편 강제연행 과정에서 백혈병환우회 간사 김상덕씨가 출혈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허혜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국민 정보 왜 모으자?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오는 3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입중단 요구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6일 전교조, 진보네트워킹센터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 중단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육정보시스템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산화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과도한 정보가 국가수준에서 집중, 관리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킹센터 이은희 활동가도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사의 정치·사회

적 활동 등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노동통제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활동가는 또 “교육정보시스템은 개별 학교가 가진 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국가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통합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은 9·11테러 이후 정보 전산화를 통해 대국민 감시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등은 오는 18일 교육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사들의 인증 거부와 폐기 투쟁을 계속 조직화할 방침이다. [배경내]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

“미, 한반도 전쟁 준비한다”

한반도 전력증강 규탄 기자회견 열려

최근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한반도 주변 전력 증강을 결정하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를 비롯한 3개 단체는 6일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미 국방부는 전력 증강이 대북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나, 사실은 대북 ‘선제공격’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 올 7월까지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기로 한 한편,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는 장거리 폭격기들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변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우발계획의 경우는 미국의 한반도전략이 ‘억지’에서 ‘선제공격’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월’이라는 시한 역시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입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이라크 이후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오는 15일, ‘전쟁반대·평화실현 공동실천’도 미국의 전쟁 움직임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배경내]

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오 씨는 2001년부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에 오 씨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후 또다시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임이 밝혀지면, 예비군훈련을 강제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내]

“교육·문화 통상대상 아니다”

WTO 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문화 단체들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 영역을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문화영역의 개방은 파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개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WTO교육개방저지투쟁본부 박겨용 상임대표는 “교육은 ‘교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외국자본에만 유리한 교육개방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세계 150여개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파리총회는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양기환 씨는 “유럽연합은 문화개방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며 WTO에 맞서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문화단체들은 △개방협상의 내용공개와 민주적인 논의 보장 △개방협상 중단 △입법예고된 5대 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영역의 개방반대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8일(토)
제 22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한국인 3명,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오늘 한국인 3명이 스스로 '인간방패'가 되어 전쟁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이라크로 출국했다.

7일 오후 1시 30분,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로 떠난다"고 밝혔다. 평화운동가, 예비 병역거부자, 여성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반전평화팀은 "한상진, 이영화, 남효주 씨 등 3명이 이날 오후 3시 비행기로 출국하고, 오는 13일에도 7명이 추가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출국한 남효주 씨는 17살의 청소년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후 미국 평화단체 '꿈야의 목소리'가 운영하는 이라크평화팀에 합류해 폭격 예상 지역에서의 시위, 의료지원, 난민구조 활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 현재 이라크에 남아있는 '인간방패'는 25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반전평화팀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중동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의 목숨을 의미할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0여년간 폭압정치와 경제 제재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 온 이라크 국민에게 전쟁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 7일 발표된 UN보고서는 이번 전쟁이 일어날 경우, 최소 50만명의 사망자와 340만명의 난민, 그리고 질병을 가진 이와 빈곤층을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상진 씨는 출국을 앞두고 "만약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게 되

면 우리는 거기에 맞설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미국의 파병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을 국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도 구성됐다. 이들은 △재정 지원 △

반전평화팀 모집과 합류 지원 △캠페인 등 여론확산 △한국군 파병 저지를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전국학생회협의회, 사회당, 여성해방연대도 이날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여성해방연대는 "전쟁의 제양은 이라크에서 멈추지 않고 핵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까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막아내는 직접행동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김영원)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백혈병 환자들의 처절한 농성이 오늘로 17일째를 맞았다. 이들의 요구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의 약값을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라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결정한 글리백의 약값은 1알에 무려 2만3천4십 5원이다. 환자들 대부분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한 달에 최소 276만원을 약값에 들여야 한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들도 약값으로만 많게는 124만원까지 써야 한다. 이 같은 약값 결정은 환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환자들은 잇그제 병든 몸을 이끌고 글리백 제조사인 노바티스 사를 찾아가다가 경찰에 강제진압을 당했다. 환자들은 모두 탈진 상태가 됐고, 혈관이 터져 병원에 실려간 이도 있었다. 노바티스 측은 환자들더러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고 했다 하는데, 정작 '행패'를 부린 건 사람의 목숨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노바티스가 아닌가. 노바티스는 글리백 시판 1년 8개월만에 전 세계에서 8천9백여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렸다고 한다. 비싼 약값을 고수한 결과다. 글리백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세금, 환자들의 탄원 등 공공의 노력으로 탄생한 약인데,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방패삼아 세계 백혈병 환자들의 돈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들에게 약값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건 위선에 불과하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2001년 스스로 정했던 금액보다 30%나 인상된 약값을 정한 것은 제약자본의 탐욕 앞에 무릎 꿇고 환자들의 생명을 내팽개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죽음을!" 이것이 정부의 보건 철학이란 말인가?

우리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윤 추구에 눈먼 제약회사의 횡포에 약 먹는 걸 포기하거나 빚을 내 약값을 충당해야 하는 환자들은 국민이 아닌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글리백의 약값을 낮춰라. 나아가 모든 아픈 이들이 돈이 없어 약을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약의 유통과 가격 산정 기준을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환자들의 생명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켜켜거리고 있다.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2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중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옥외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월드컵 개최지에서는 천막농성을 불허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회 예정 장소에 미리 병력을 배치한 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천막 등 집회용품을 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아래 전주지검)은 경찰의 집회 침탈에 저항했던 노동자 세 명을 또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경찰이 피고인들로부터 천막 등을 빼앗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의 위법한 탈취행위에 저항하는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한 행위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법규자장 권두섭 변호사는 "그 동안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방해 또는 봉쇄하는 관행이 잦았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의 이러한 관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판결로써 확인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사건은 작년 상반기에만 4차례에 달한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7월 4일 당시 경찰서장을 고소·고발했으나, 지난달 초 전주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공권력 감싸기'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불복,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 신청을 내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박재순 교육선전부장은 "법원에서 경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만큼, 광주고등검찰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겼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혜영)

<기고>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처

이광영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

지난 1월 19일, 구치소 내에서 재소자가 숨지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윤수 씨가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에 의해 숨진 이 사건은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구치소내의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구치소내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짚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정당국이 갖고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방침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재소자들에게는 '형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내부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감시·관리, 감독·통제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종의 내부 규정들도 그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소자들이 응당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은 입감 시기부터 봉쇄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교정시설에서 첫 사망한 김윤수 씨의 경우도 그러하다. 김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징역형에 처해졌다. 몸이 성치 않아 병동에 수감되었다 이번 사고를 당했다. 아직 검찰 수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동료 재소자 3명이 폭행을 가해 숨진 것으로 밝혀져 관련자들이 폭행치사혐의로 지난 3일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윤수 씨가 숨지기 전 며칠간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당국은 "김 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 사실을 몰랐노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급사한 경우도 아니고, 사망 당시 온몸에 피멍이 들고 갈비뼈까지 부러진 상태였는데도 김 씨를 진료한 의무과장이나 구치소 당국이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될 법한 일인가. 더구나 구치소 당국은 사건 발생 후 김씨의 사망원인을 알코올중독에 따른 금단증세라고 발표하였다가 이 사건이 <부산일보>를 통해 이슈화되자 동료 재소자의 폭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발표 내용을 반복했다. 구치소 당국이 은폐 의혹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담당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무부 검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구치소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관련 교도관이나 삼급지휘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해마다 구치소내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하급 교도관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무마되어 왔다. 재소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교정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전면적으로 쇄신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책임을 최소한 부산구치소장까지는 물어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개심작’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서울의 한 여고가 학교 비리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데 이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까지 경찰에 고소해 ‘보복 징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용화여고 2학년 학생인 허성혜 양이 교감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안OO양의 예기와 함께 강제보충수업, 0교시 수업 등 학교에 대한 비판글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다가 교감이 허양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북부지검이 허양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학교·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허양을 퇴학시켰다. 이에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는 “학생이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학교의 주체로서 당연한 참여”라고 지적하고 “이는 건전한 의사표현을 통한 민주성의 함양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교측은 지난 1월 허양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집회를 했던 교사 3명마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또 허양과 부모의 사과뿐 아니라 “허양을 사주했다”며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의 사과를 ‘선처’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학교측의 요구대로라면, 허양이 전교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비리를 고발한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용화여고 동창회장인 조숙현 씨는 “교감선생님의 행동이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부적절했다면 비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감선생님 개

인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꼬집고, “학교측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과 교사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허양이 낸 ‘퇴학처분효력정지처분’ 소송에서 “학교의 퇴학처분은 학생에게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진 것이거나 적어도 학교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내려진 무효의 처분으로 보인다”며 판결 확정시까지 허양이 용화여고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학생, 교사, 사회단체로 구

성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퇴학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또한 개학을 맞은 지난 10일, 교사 3명은 학생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허양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교사에 대한 고소 취하 △교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날 허양도 학교에 등교해 “주변에서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가라고 권유했지만 내가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퇴학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학교를 다닐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학생의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 징계가 불러온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처벌의 두려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 [김영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

지난 10일, 백혈병환자들이 18일간의 힘겨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백 약값을 2만3045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환자들의 농성은 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이윤을 착취하는 제약회사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무능력한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다.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은 비록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은 풀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환자들은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곧 국민건강보험제정과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노바티스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폭리”를 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글리백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가할 것”을 특허청에 촉구했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을 이용한 제약회사의 횡포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면 노바티스가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글리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본지 2002년 2월 2일자 참조) 이미 지난해 1월 30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에 글리백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1년이 지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환자들은 강제실시가 허용될 때까지 인도제약회사가 개발한 글리백 카피약을 ‘자가치료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허혜영]

○ 현상희의 인권이야기 ○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까지도 빚어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인권의 수호역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정치장관이 통할하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고위 관직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과까지도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인권의 역사가 형사사법권에 대한 투쟁사와 같이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부서가 바로 ‘인권의 적이었다’ 검찰의 손아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를 넘어 일종의 배신이다. 그러다 보니 인권과장이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대담부당한 발언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된다. 혹은 법률구조공단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구해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대항하는 썸이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앞섰다는 과거의 코미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특검이니 뭐니 하는 시류영합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의 식민지로 존재하는 현실을 혁파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무부를 장악한 검찰을 본래의 자리·검찰청으로 되돌려 보내는 한편, 법무실의 한 하부조직으로 처량하게 배치되어 있는 인권과를 인권국 혹은 인권총무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인권전문가와 국가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국가를 표방하면서 한 국가의 인권행정과 정책을 총괄할 집행기관을 하나의 과 단위로, 그것도 검찰의 손아래 휘말리는 형태로 두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법제에 관한 한 그리 선진적이지 않은 일본도 법무성에 인권옹호국을 두어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인권상담, 인권의식 향상, 법률구조 등을 총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좌하기 위한 지역의 하부조직까지 가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개혁안은 DJ정권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권력과의 결별을 각오하지 못한 집권층은 애써 이를 무시하였다. 실질적인 조사권조차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놓고선 인권대통령 운운하였을 뿐이다. 법무행정에서 검찰인력을 제거하고 인권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인권부서가 강화됨으로써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인적으로 독립된 법무부가 검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준거로 인권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것은 지난 80년대 이래 우리 민주화의 긴 여정에 한 매듭을 지우는 작업이 된다. (현상희 씨는 건국대 법대학장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는 논문 발표(2.10)/ 인수위,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처벌토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 방안 검토(2.6)
- 2. 두산, “뽀뽀함의 극치를 보여주마”**
두산중공업, 노동부 특별조사 앞두고 노조탄압 증거 인멸 의혹(2.4)/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 ‘시신퇴거’ 가져분 신청(2.6)/ 노동부, 두산의 부당노동행위 특별조사 실시(2.6)/ 인수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남용 제한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2.10)
- 3. 현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결정(2.4)/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학교’ 열려(2.7-2.9)
- 4. No! ‘사람 죽이는 특허권’**
백혈병환자들, 글리백 약값 인하와 사장 면담 요구하며 노바티스 기습 점거...경찰 강제진압으로 협상 결렬(2.6)/ 백혈병환자들, 18일간의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하고 “글리백 강제실시 허가 촉구”(2.10)
- 5. 미국의 미친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미국의 한반도 전격증강군탄” 기자회견 개최(2.6)/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 3인, ‘인간방패’ 되겠다며 이라크로 출국(2.7)/ 700여개 시민·사회단체, 오는 15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시위 개최하겠다고 밝혀(2.10)
- 6.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부산지법 제7민사부, 윤락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업주와 유흥업소 업주에게 손해배상 명령(2.3)/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단독, 대학원생 성추행한 교수에게 손해배상 명령(2.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하여군장교 성추행한 남성장교를 강제전역은 정당하다”고 판결(2.9)
- 7. 기타**
대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항고한 사건 심의과정에 민간인 참여 도입 검토(2.6)/ 전주지법 제1형사부, 경찰의 집회장 침탈·노동자 강제연행 위법 판결(2.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12일(수)

제 22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주인 바뀐다고 위협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영교도소는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형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가 급격히 과밀화되면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과밀수용 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만든 재단법인 '아가페'는 2005년 민영교도소 개소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성명을 내고 "과밀수용,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또 다른 인권침해 영역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재고를 요구했다. 민변은 또 "국영교도소 내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 통제에 적극적이지 의문"이라며 "역사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외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거의 예외없이 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교도소라고 인권침해 없을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민영교도소 설

립으로 풀려고 하는 법무부의 해법을 강력히 비판하고, 민영교도소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구속 만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라며, "과밀화의 해소는 민영교도소의 신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속위주의 수사관행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현재, 수감자 중 미결수용자가 40%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제 실형을 확정 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특정 종교 강요·차별 우려도

인권실천시민연대 역시 "민영교도소 설립이 하나의 실험이 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궁극적인 대안은 현 국영교도소부터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교도소가 '종교' 교도소라는 점에서 "운영주체들이 교정이 아닌 선교에 관심을 가질 때 군 선교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와 종교에 따른 처우의 차별 문제가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민영교도소 설립을 준비중인 '아가페' 스스로가 천명하고 있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의미'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현재 '아가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기독교 교도소 설립은 결국 '정부예산'으로 지속적인 '복음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독교

교도소의 설립을 통한 선교는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선교 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신장을 위한 전반적 조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혜정)

"파병=식민지 점령 지원"

이라크 공격·파병 반대 요구 고조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도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11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가장 반인륜적인 전쟁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는 한반도에도 전쟁과 학살의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정부의 파병계획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김석수 국무총리는 "이라크전 발발 시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회 질문에 대해 "아프간 수준 또는 동티모르 수준의 파병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범위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해, 지원병력 위주의 파병이 이루어질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강대국의 식민지 점령정책에 동원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하고,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계획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원에도 반대한다"며 정부의 전쟁지원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를 '반전·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라크공격 반대 캠페인을 오늘부터 3일 동안 벌일 계획이다. (김영원)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최근 비정규노동문제 관련,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차기 정권의 비정규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노동계 그리고 재계가 각각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제시했다.

인수위 측에서 나온 노민기 위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비자발적이며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고용형태'라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를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 위원은 자신의 말이 인수위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 인수위 내부 분과 사이의 의견조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최근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보호정책은 불가피하게 노동유연성에 대한 역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노동유연성 확대와 비정규노동자 보호의 양립불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해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적 가치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

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철폐 100만서명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비정규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고용형태인 기간제 계약직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적용할 것 △파견업체의 중간착취에 시달려온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노동자와 실질적 고용주인 사용자주간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에 마련하

는 한편,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명백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노동자를 독립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할 것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러한 해법에 대해 경총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 측 발언자로 나온 김경태 씨는 "비정규직은 세계적 추세이고, 노동시장유연성이 높은 나라가 경쟁력이 강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빈축을 샀다. 그는 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와 기간제 계약직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수위와 경총이 각각 자기 발언만을 전달하고 자리를 뜨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토론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허혜영)

클릭! 인권정보자료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지은이: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보적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모색을 표방한 인권운동연구소 1기 연구원의 연구 성과로 기존의 아동권리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동권리를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1기 연구원 배경내 씨는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동에게 가장 밀접한 공간인 '가족'과 '학교'가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돕는 가운데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억압해왔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한다. 무엇보다 아동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전환을 요구하며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이 미성숙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동 역시 성인과 다름없는 인권의 주체라는 인간의 보편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동권리협약 등 기존의 인권체계가 아동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성인들에 의해 규정된' 아동 억압의 질서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다고 배 씨는 비판한다.

배 씨는 아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아동의 자기결정권 최대 보장 △아동 삶의 탈제도화 노력 △아동의 사회로의 전면적 통합 등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사적으로 책임지고 자신의 자녀만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형식의 보살핌과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분신사당 대책위, 시측 문서·업무일지 등 공개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일주일째 진행중인 가운데, 그동안 사측이 광범위한 조합원 사찰과 노조파괴공작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

12일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당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의해 작성된 노무관련 문건과 회사 간부들의 다이어리에 적힌 업무일지 등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대책위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재벌은 2000년 12월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이래, 그 이듬해부터 노조파괴공작을 체계적으로 자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2월 임원 워크샵에서 발표된 '신노사문화 방안,이라는 문건은 2004년 어용노조 건설을 목표로 한 '노조무력화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8가지 세부과제로는 △조합 활동가 중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밀착관리 △건설전력 육성 △사주적 '계과'에 대한 표적 점검과 주요 활동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 △조합원 성향을 친회사, 온건, 중도, 친조합, 강경 세력으로 구분하고, 친회사 세력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강경 세력에 대한 1:1 밀착 관리와 불이익 조치, 직무배치를 통한 영향력 축소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나아가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잔업 특근 통제, 인사평가 불이익, 기피업무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이러한 지침에 따라 실제로 노조파괴공작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도 함께 제출했다. 일례로 '주단 BG(사업본부)'에서 작성

된 '오피니언 리더 현황문서'를 보면, 공장별 노조 전·현직 간부나 대의원 46명에 대한 조합활동 경력과 계과, 성향 등을 상세히 분석해 ☆온건, ☆☆☆강성, ★★조강성 등으로 등급을 매겨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신노사 문화 정립방안'은 발표 자체로 종료되었고, 조합원에 대한 성향 분석은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노무관리"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세정부 인권과제 전달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부와 소속 박법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난민의 권리보장 등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 인권활동 등 총 8개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이에 대해 박법계 위원은 "인수위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는 단위가 아니다. 다만 차기 정권이 출범하면 인권단체들의 의견서를 정책자료로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내)

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각종 지인관계와 가족까지 동원해 '순화교육'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대상'으로 내몰아 해고하는 행위를 어떻게 일상적 경영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사측의 해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노동부 특별조사반을 찾아가 노조탄압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측이 소지 혹은 이미 폐기한 노조탄압관련 자료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대책위측 자료 공개가 향후 노동부의 조사나 법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내)

용화여고 허성해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

학생의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 징계가 불려온 용화여고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용화여고 목성균 교장은 졸업식 연설에서 '구제차원에서 허성해 학생에 대한 퇴학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성해 학생은 "용서 차원에서 퇴학 철회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피답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교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진유식 위원장은 "퇴학 철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당징계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사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퇴학 철회는 기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오는 14일 학교측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 (김영원)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주요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03년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권현안에 적극 나설 태세다. 현재 인권위는 박경서, 유현, 류시춘 등 상임위원 3명의 책임 아래 각각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정규직팀, 청문회로 현안 돌파

먼저 류시춘 위원이 이끌고 있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아래 비정규직팀)의 구성이 가장 빨랐다. 류 위원은 이미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준비모임까지 마친 상태다. 류 위원 외에 비정규직팀에 소속된 인권위 관계자는 비상임인 정감자 위원,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인권정책국 임승준 씨와 행정비서 1명 등 모두 5명. 류 위원은 앞으로 학계, 노동계, NGO 등에서도 팀원을 더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나 사회보호법처럼 법률 개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7%나 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정규직의 형태도 다양하고 △대법원판례도 친(親)사용자 쪽으로 나오고 있으며 △권고시 국가재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동 방향과 내용이 고민스럽다"라고 솔직히 토로했다.

류 위원은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은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철저히 '차별'이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정부와 공공 내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보법팀, 올해 안에 입장 발표

"인권위가 국보법 등 대표적인 악법들을 수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인권위는 일상업무에 바빠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이런 반성 속에서 금년에 4개 현안을 뽑아, 차별금지기본법 제정은 중점 기획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태스크포스팀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박경서 위원은 태스크포스팀이 제기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 위원이 이끌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아래 국보법팀)에는 비상임인 신동운 위원, 조미경 위원, 인권정책국 정영선 씨 등이 결합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자 1명, 법조인 1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2명을 결합시켜 매월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박 위원은 "개인적 입장은 국보법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팀 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첫째 주에 팀내 입장을 정하고 둘째 주 전원위원회를 거쳐 올해가 가기 전에 인권위 이름으로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을 맡은 유현 위원은 "아직까지 구체적 구

상은 나오지 않았다"며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개인적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다.

공론화 전략 선행돼야

태스크포스팀은 인권'심판' 업무에 머물렀던 인권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인권 '옹호'의 책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인권옹호에 무능력한 인권위원은 인권단체들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인권위도 보다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태스크포스팀은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던 인권위의 활동방향과도 사뭇 다르다.

하지만 태스크포스팀이 인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현안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드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 전략부터 수립돼야 한다. 태스크포스팀은 인권현안에 대한 '논리적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 온 지금까지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용)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지난 10일 제34차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목포교도소장을 상대로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칸막이가 없는 목포교도소 징벌실에서 용변을 보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인권위에 진정했던 당사자 방모 씨는 이미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뒤였다. 그렇다면 인권위는 당연히 광주교도소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도소장은 피진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고를 하지 않았다. 광주교도소 내 41개의 징벌실 중 7군데에 화장실 칸막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말이다. "광주교도소에서 또 진정하라고 해!"라는 어느 인권위원의 이야기는 비록 농담일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한 손에는 '정책·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다른 한 손에는 '진정사건에 대한 개별 구제조치'라는 권한을 움켜쥐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위의 의무다. 하나의 사건에서 이 두 권한을 구분해 사용하기란 오히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두 권한을 법 형식적으로 해석해,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교도소에 대해서는 정책권고를 포기했다.

인권위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개별 구제조치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법 형식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인권옹호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14일(금)

제 22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각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김대중 정부가 닳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통재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이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준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무려 55년간이나 독재정권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률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국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작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교무줄 조항'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내부의 적'(정치적 반대자)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의 싹을 자르는 통재 도구로 활용돼 왔다.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된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7조 위반으로 공안세력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은 7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보조적인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소 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제도와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한 총련 대의원들에게 강요되는 반성문 역시 준법서약제의 또 다른 얼굴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보안관찰처분을 부과, 이들의 생활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관찰법 역시 사상법들을 영구적인 '창살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지난 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7조의 시급한 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반인권적 법률이라면, 이를 보조하는 법률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악법들을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인권 신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경내)

☞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은 2면에서!

만화사랑방

이동수



*아, 그림의 사람이 바뀌었군요...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

<심층 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꼭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함께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상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발병률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제도는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2000년 현재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 대다수가 장기 수용으로 사회적응력이 저하된 데다, 특별한 기술도, 돈도 없이 출소하다 보니 다시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소에 있는 사람만도 1600여명. 이들 피보호감호자들의 대다수는 '빈곤범죄'로 분류되는 '절도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발장'들이다. 빈곤은 개인의 내태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은 그 근본적 원인에는 아랑곳없이 사회문제를 소외된 개인에게 전가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의 낙오자로 남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새 정부는 조속히 사회보호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유해정)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지난 10일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학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촉한 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터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지난 9일,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이경우 인권위원장을 만나 창립 배경과 활동 구상을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원진레이온 문제를 계기로 '노동과 건강연구회'를 창설, 대표로서 활동했으며, 민변 노동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 인권위원회를 만드셨게 된 동기가 궁금한데요?

= 그간 원불교 내에서는 '사회개혁교무단'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교무 모임이라는 한계 때문에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지난 12월, SOFA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면서 인권단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동안 교단 내에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던 분들의 힘을 모아 인권위원회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실 계획입니까?

= 아직은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인권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된 문제들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풀어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활동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문제에 집중하실 건지요?

= 우선 청소년 인권문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다른 단체들의 관심이 미흡한 분야더군요. 청소년 특별분과를 두고, 청소년 인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인권교육에도 힘쓰구요.

◎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가 인권이겠지요. 사람마다 절실히 필요한 권리의 내용은 다를 텐데요,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다며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인권운동이 되어버리는 듯 싶습니다.

◎ 다른 인권단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 작지만, 나름의 성과를 사회에 돌려주고픈 바람으로 우리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출발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앞서의 경험을 잘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연대도 제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경내)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을 의문한 채 목포교도소에만 구제권을 내린 것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인권옹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인권위는 개별 진정사건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읽어내고 개별 구제권고와 정책 개선 권고를 동시에 병행할 때에만 인권옹호 기구로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15일(토)

제 22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수형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모(32) 씨. 전 씨는 2000년 1월, 전주교도소 취사장에서 고추분쇄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네 개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전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명절 휴가에 따른 인원 부족으로 교도관들이 외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후 3일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두, 세 번째 손가락을 한마디씩 더 잘라내야 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이 전 씨에게 준 위로금은 고작 3백7십여만 원이었다.

이에 전 씨는 2001년 4월 출소한 직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2천3백여만 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5부 정재훈 판사는 “작업자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도소 내 작업장에도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 다칠 위험이 높지만 ‘조심하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전씨의 지적은 그동안 수형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 방치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수형자가 작업 중 손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배상액을 낮게 책정했던 그 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수형자에게도 일반 노동자의 하

루 임금을 적용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하루 7, 8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상여금’은 고작 월 2만원 정도이다.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로금’도 턱없이 낮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국 작업지도과의 김광희 계장은 “예산

이 적은 탓도 있겠지만, 단순 제조업이라 상여금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독일의 수형자의 경우, 작업 임금을 일반 노동자의 75% 정도 지급받고, 산재보험도 적용받고 있다. 수형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교도소 내 ‘작업’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시급히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오늘(미국 시각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의 2차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의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무력사용 결의안이 유엔에서 거부되더라도, 즉 유엔의 승인 없이도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미국은 폭주기관차처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한 민족의 정당한 자결권을 짓밟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실제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는 중동 지역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다툼이 있을 따름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라크 민중들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초반부터 이라크 군의 전의를 꺾기 위해 수백 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집중 발사할 것이라 한다. 표적에서 민간인과 민간인 아닌 사람이 구분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엔보고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이라크 국민 50만 명이 사망하고 국민의 4분의 1인 7백4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엔 1개월치 식량과 3개월치 의약품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것이 2003년판 홀로코스트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터에 공식적인 요청도 들어오기 전부터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답변을 통해 개전시 한국군의 참전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또한 학살에 가담하는 제국주의 용병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 아닌가? 비전투병만 보낸다 해도 학살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에 고한다.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하라. 나아가 세계를 향해 ‘전쟁을 반대한다’고 당당히 말하라. 한편에선 ‘전쟁놀음’이 준비되고 있는 사이, 이라크 민중들에겐 죽음의 공포가 어느덧 숨막히는 일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권리가 된다.” - Hugh Starkey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해방의 열쇠가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을 극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안은 바로 ‘인권교육’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형성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인권교육의 씨가 전체 사회에 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부터 환기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이미 1993년의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은 물론, 이듬해 선포된 ‘유엔인권교육10년(1995-2004)’,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은 결속마단계도 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공무원, 특히 법집행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이유도 인권교육을 등한시하는 국가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 특히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육해군 사관학교,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인권교육은 또한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을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반인권적 문화나 편견, 관행이나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가능성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특히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 특히 어린이·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노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초·중등학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생색내기 교육사업부터 시행하기보다, 그에 앞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교육 교수진부터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대와 교

대, 교사 재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권교육이 대규모 청중을 모아놓고 법조항을 쏟아부으면서 진행되는 일회성 강연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자발적인 노력과 실험을 통해 ‘인권교육은 참여중심적, 실천지향적, 학습자중심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해 온 민간단체들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유일하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담당관실이 단 6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새정부는 인권교육의 전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실시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배경내)

여섯 번째 반딧불이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새 기운, ‘삐께페로스’

지금 아르헨티나에는 거대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 바로 ‘삐께페로스’(piqueteros=pickers) 운동이다. ‘반(半)실업 노동자운동’을 일컫는 이 말은 현재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가장 왕성하고 힘있는 기운을 대변한다.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외신들은 이곳을 혼란과 폭동이 난무한 무정부적인 상황이라고 속보를 송고하기 바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거스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삐께페로스의 행진에 대해선 무관심하기 일쑤였다. 마치 3~4년전 아르헨티나가 ‘신자유주의 경제’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떠들면서 그 아래 감추어져 있는 빈곤과 저임금, 노동착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해 오던 태도처럼.

아르헨티나의 현지 노동영상제작 단체인 ‘노동자의 눈 Ojo obrero’이 제작한 〈삐께페로스〉와 미국 독립프로덕션 ‘빅 노이즈’의 작품 〈아르헨티나 리포트〉, 이 두 편은 삐께페로스 운동의 현장을 누비며 아르헨티나를 떠도는 거대한 유령의 실체를 카메라에 담았다. 두 작품을 통해 우리는 주류 언론이 외면한 반실업 노동자운동의 실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반실업 노동자운동은 IMF체제였던 지난 수년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물류를 정지시키는 투쟁을 진행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투쟁의 성과들을 얻어내고 있다. 97년 이래로 지역에 따라 실업률이 30~80%를 넘나드는 아르헨티나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은 이러한 위기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었다. 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빈민 그리고 한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들, 가계가 파탄 난 여성들이 중심이 된 이 운동은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현재의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노동자뉴스제작단)

• 두 작품은 오는 19, 20일 아트큐브에서 열리는 ‘반딧불’에서 상영됩니다.
• 두 작품은 2002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상영작입니다. (문의 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그들’이 이라크로 떠난 이유

3인 3색, 하나의 외침 속에 다양한 반전 목소리

이라크로 향하는 반전평화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3명이 출국한 데 이어, 16일 또다시 4명의 한국인이 전쟁의 공포로 휩싸인 이라크 땅으로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서 “미국의 추악한 전쟁의도를 전세계에 폭로하고, 이라크 민중들과 연대해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 이틀 전, 합숙소에서 만난 그들은 각각 여성주의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로서, ‘반전평화’라는 하나의 외침 속에 담긴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여성주의자 :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전쟁 폭력 고발하겠다’

여성해방연대 오김숙이 조직국장은 “여성에게 전쟁은 일상적 폭력이 극도로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이라크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그 의미를 오김숙이 조직국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지만, 지배적 권력집단과 억압받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전쟁의 체험은 서로 다르다. 백인과 유색인,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남성과 여성이 감당해야 할 전쟁의 폭력과 학살 수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동일한 상황이 제거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상적 폭력은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남을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전쟁의 폭력을 재조명하고, 반전평화의 담론 속에 이를 담아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녀는 또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지는 전쟁과 군사주의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여성주의자들이 반전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라크행은 우리가 쏟아낸 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할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 ‘그들의 공포가 내 것이 되었다’

지난 해 10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은국 씨. 그는 “단지 군대가 두렵고 싫어서가 아니라, 전쟁과 폭력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선택했다”며, “이라크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지금의 행동은 반전평화에 대한 나의 신념과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비폭력주의자는 아니’라고 답했다. “폭력 자체가 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폭력이 어떤 명분과 이유로 사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전쟁이 석유를 둘러싼 자본가와 그들과 함께 하는 지배적 억압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은국 씨는 자신을 추동하는 힘도, 그리고 반전을 위한 연대를 보다 강하게 만드는 힘도 바로 ‘전쟁의 공포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나는 전쟁을 상상할 수 없는 세대다. 그러나 이라크로 가기로 결정하는 순

간, 이라크의 수많은 민중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공포가 내 것이 되었다. 만약 부시가 전쟁의 공포를 체험한다면, 이런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포를 더 가깝게 느낄수록, 반전평화운동의 연대는 더욱 견고해지리라 믿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를 더욱 가깝게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다.

사회주의자 : ‘새로운 사회의 상상력 말살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사회당 당원인 허해경 씨는 사회주의자로서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라크행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조지 오웰의 이야기부터 꺼냈다. “조지 오웰은 자전적 소설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파시즘에 대하여 30년대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이유에 대해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바 있다. 70여년 전 그를 스페인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나를 이라크로 이끈 이유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21세기의 전쟁은 모든 생명체를 강그리 없애버리는 참상을 낳는 동시에, ‘꿈꿀 수 있는 상태’, 즉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말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현재 미국이 벌이려는 이라크 전쟁은 총자본의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단으로 선택된 이번 전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에게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빼앗는 자본의 폭력인 것이다. 덧붙여 그녀는 “전쟁이 가져올 인간적 상상력의 파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연대는 곧 우리의 몫”이라며, 반전평화운동의 전 세계적 연대를 강조했다. (허해영)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

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면서 얼마나 무력해지고, 고통 당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다 보면 정규직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갖고 비정규직들을 마구 대하는지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분통이 터지곤 했다. 쪼뼛도 없으면서 “난 정규직이니까 재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이 만들어낸 차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갖는 허구적인 우월감의 정체가 어찌 보면 ‘자기도 살아남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 비정규직을 짓밟아서라도 자기 살길을 마련하려고 하는 고통의 몸부림’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규직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본의 허구적 차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만,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만큼 자신의 존엄성도 파괴된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상황은 공포 그 자체이다. 정규직들도 그것을 잘 알기에 더 괴로울 것이다. 나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아니 자본주의 자체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을 짓밟고, 자신마저 파괴하도록 만드는 극악한 제도를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 지옥을 유지하는 데 큰 몫을 하는 것이 바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정규직들은 열심히 비정규직을 총알받이로 사용하고, 비정규직들은 한 칸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경쟁하고, 죽지 않기 위해 자본에 순응한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을까? 신자유주의 장벽은 그렇게 견고할까? 자본주의는 영원할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투쟁’이다. 투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결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물론 여전히 벽은 두텁다. 그러나 투쟁을 해본 사람은 안다. 그 벽의 두께를. 그 벽은 무한히 크고 무한히 두꺼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도전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인간은 투쟁을 통해 발전하고 인간다워진다. 투쟁은 거대한 장벽을 깨는 힘인 ‘집단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하게 한다. 서로를 짓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거부하고 집단이 되어 어깨 걸 수 있기에, 자기가 누구를 향해 분노를 내뿜어야 하는지를 알기에, 그 때부터 노동자는 인간 본연의 공동체성과 신뢰를 획득한 ‘인간’이 된다.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짓밟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서 신자유주의의 벽, 자본주의의 벽을 무너뜨리게 될 작은 구멍을 뚫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부딪힘은 큰 것이 아니다.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의 차별에 저항해 보는 것, 한번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보는 것, 투쟁의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동지로 만나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간인권호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1. 전세계가 외친다, NO WAR!
프랑스, 이라크 전쟁 지원 요청 거부 (2.10) /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한국정부의 파병계획 규탄 (2.11)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이라크전 발발시 60여만 명에 이르는 난민 발생할 것이라 경고 (2.13) /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라크 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를 위한 국제공동 반전평화 대행진’ 열려...전세계 6백여 도시 1천만명 반전시위 (2.15) / 이라크반전평화팀, ‘인간방패’ 자원한 2진 4명 출국 (2.16)

2. 노조탄압이 신노사문화?
고배달노동자분신사망대책위원회, 두산중공업 사측의 조합원 사찰과 노조파괴공작 입증 자료 공개 (2.12) /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여명, 서울 종로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 두산제철 규탄’을 위한 결의 다져 (2.16)

3. 학교가 무서워!
서울지역 77개 학교 정보담당교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의 교무·학사 관련 업무 거부 선언 (2.10) / 용화여고 교장, 졸업식장에서 학교 비관글 게재한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하겠다고 밝혀 (2.11)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 재결정하겠다고 밝혀, 사태 다시 원점으로 (2.14)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생활지도 계획’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교사들, 가정내 폭력이나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은 학생들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2.12)

4. 수형자 인권침해, 떠넘기면 사라지나?
국가인권위, 목포교도소에만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 (2.10) ...국가인권위쇄신위원회 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상황 외면한 ‘법 형식주의’라 비판 (2.13) / 민변·인권운동사랑방 등,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에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하기로 한 데 대해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2.11)

5. 농민 잡는 ‘자유무역’
농민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반대 전국농민대회’ 열려...대회 촬영 중이던 농민, 경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에 맞아 실명 (2.14) / 정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서명 (2.15)

이것이야말로 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의 인간성 파괴에 맞서 인간다움을 다시 세우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실질적’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아니겠는가. (김혜진 씨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19일(수)
제 22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긴급'구제조치, 차리리 이름을 바꿔라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름으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모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등부지청에 권고한 이번 조치는 진정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인권적 무지를 드러낸 대표적 결정이었다.

지난 95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방척추수술을 받은 뒤 허반신이 마비된 김 씨는 병원측이 지급한 미흡한 위자료와 비인간적 대우에 분노, 지난 2월 4일 병원 현관 앞에서 분신을 기도했다. 그러자 경찰은 김 씨를 연행,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김씨가 수감된 송파경찰서 유치장과 10일 검찰로 송치된 후 수감된 성동구치소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김 씨는 기저귀를 착용한 채 장애인으로서의 고통과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감당했다.

김 씨의 사정을 보다 못한 친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지난 8일. 그러나 인권위가 사태조사에 나선 것은 14일이 되어서였고, 이튿날 오후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라는 이유로 등부지청에는 17일이 되어서야 결정문이 송부됐다. 현재까지도 이태승 담당검사는 인권위 결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더구나 오늘로서 구속기간은 만료될 예정이다. '긴급'구제조치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진 시점에서야 인권위 결정문이 담당검사에게 전해진 셈이다.

물론 애초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김 씨를 무리하게 구속한 검찰부터 비판받아야 한다. 장애인 편

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찰서와 구치소 당국도 문제다.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이렇듯 안이한 태도로 인권침해의 현장을 방치, 능동 대응을 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사안의 긴급성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인권상담센터 직원들, 그리고 조사국의 긴급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김형완 소장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안이한 판단'이 이번 사태의 주원인이다. 김 소장은 "진정내용이나 언론보도,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의 통화 결과, 긴급구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소장이 판단하는 과정

에서 김 씨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은 생략됐다.

2001년 10월 중증장애인으로서 구치소에 수감된 적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도 마련되지 않은 곳에 중증장애인이 수감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자 이중처벌의 효과마저 갖는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인권위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요식절차에 따라 판단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는다.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결정 사실의 통지를 미루고,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 서야 서류로 결정문을 송부하는 태도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뒷전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바에야 '긴급'구제조치라는 명패부터 떼어 낼 일이다. (배경내)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저자: 문만식(인권운동연구소 1기 객원연구원) / 2003년 2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인정할 가운데, 여성의 동일성(identity)에 근거한 고유한 권리로서 '신체에 대한 권리'를 승인할 것을 주장하는 논문이 나왔다. 인권운동연구소 1기 연구원인 문만식 씨는 기존의 남·녀 평등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사회에서는 허구나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여성에 대한 배제와 소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씨의 주장이다. 문 씨가 제안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에는 처녀성에 대한 권리와 모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인간'의 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의 인간적 동일성'에 주목하면서 진정한 권리의 평등은 '각자의 성에 적합한 권리가 긍정적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 씨가 성적 차이에 기반하여 여성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보편성'의 틀 내에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갖는 의미를 함께 논의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은아)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서야 무참히 학살당한 영혼들의 한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들의 주검을 가슴에 묻고 소복 차림으로 전국 군부대를 쫓아다니는 어머니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적 은폐'와 '강요된 망각'에 맞서 '기억의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일제 강점기를 넘어 전쟁과 분단, 독재와 폭압으로 굴절된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렇듯 무수한 '한'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진실은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오히려 '빨갱이'나 '폭도' 등으로 낙인찍히는 2중, 3중의 폭력을 당해야만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백 40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8만~20만,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1백만, 그리고 수많은 조작사건과 고문, 실종, 정치테러의 희생자들. 이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과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은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소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과거를 '현재화'함으로써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와 미래세대들이 다시는 동일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 정부가 피해자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겪고있는 상처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활동해 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만을 다루었을 뿐이며, 또한 진실의 일부분을 밝혀냈을 뿐이다. 새 정부는 죽음과 인권침해의 '등급'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건들의 역사적 진실을 온전히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또 진실의 일부분을 밝히고선 '개별 보상' 차원에서 사건을 성급히 마무리짓는 잘못도 사라져야 한다. 이들 사건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고 박영두 씨 치사사건처럼 이미 국가범죄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조차 '공소시효'에 발목잡혀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못하는 현실, 교문에 따른 자백과 허위증거로 조작되었음이 명백한 사건들이 '엄격한 재심 요건'에 발목잡혀 오욕의 멍에를 계속 짊어져야 하는 비극도 사라져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재심의 요건도 최대한 낮춰져야 한다.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의식 고양의 효과를 낳는다. 진실을 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사회적 노력은 가장 훌륭한 인권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배경내)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아래 국보위)의 '삼청5호계획'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삼청교육이 지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하거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9년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도,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행방불명자가 4명,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등의 피해자가 2천6백78명에 이른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소한 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해왔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이사항 때마다 동사무소로부터 순화교육 이수자임을 확인하는 섬뜩한 전화를 받았다. 심지어 89년에는 나의 주민등록초본 위에 '순화교육이수자 정화담당부의'라고 쓰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했다"고 증언한다. 전 회장은 또 "당시 국보위는 무려 1백3십1만여명에 달하는 사회정화추진위원을 두고 불량배 색출과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그 캠페인이란 삼청교육대 갔다 온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로 각인시키는 세뇌작업에 다름 아니었다"며,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피해자들의 기막힌 세월을 한탄했다.

그러나 이 명백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88년 당시 국방부장관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신고까지 접수했지만, 아무 보상 없이 14년이 흘렀다. 국회 또한 뒷짐만 지고 있었다. 89년부터 13·14·15·16대 국회에 걸쳐 제출된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특별법안'은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형식적 논리로 매년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의문사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 시한과 권한의 한계 때문에 의문사위가 밝힌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의문사위의 권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의 의무는 새 정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정부는 공범자임을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 한 삼청교육에 의한 인권유린은 현재진행형이다.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두산중, "간부수첩 내용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 사측 부당노동행위 집중 추궁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에서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의 진위를 따지는 회의가 열렸다. 두산중공업 노·사 대표와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상임위원들은 '고 배달호 씨의 분신은 노조탄압이 낳은 결과'이며, '파업에 대한 손해·가압류는 신종 노조무력화 수단'이라는 데 동의를 표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응답 과정에서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이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간부들의 수첩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함에 따라, 그 동안 "노조측이 출처불명의 자료로 악선전을 하고 있다"던 사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손해·가압류와 관련해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추궁도 잇따랐으나, 방 장관은 "손해·가압류는 민법상 문제로서, 노동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이날 박인성, 안동선 위원 등은 "노동부의 특별조사 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한 후,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2면 (허혜영)>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최근 대법원이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한양공영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세력의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개혁과 불법 파업을 양산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삼미특수강 정리해고 합법 △한국조폐공사 통폐합 반대 파업 유죄 등의 보수적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배경내)>

[근조] 지난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시민,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03년 2월 20일(목)

제 22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

최근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농민 황재윤 씨가 경찰측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 파편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발생, 집회현장에서 기습을 부리는 경찰폭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황 씨는 지난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농민집회를 촬영하던 도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황 씨는 경찰측을 향해 썬글러를 던져, 전투기동대에 의한 강제진압 장면을 촬영 중이어서 경찰이 던진 유리병에 맞아 실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7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19일 경찰청 부근에서 '집회현장에서의 경찰폭력 근절과 황재윤 농민 실명위기사건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움직이는 살인무기'로 불리는 전투기동대의 해체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최근 2-3년간 각종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휘두른 폭력으로 농민, 단체 대표, 취재기자 등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사건은 집회현장에서 일상화된 경찰폭력의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대표단을 보내 한동훈 정보3과장을 면담하고 대책위측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폭력 근절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치기 전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배경내)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전재희 위원(아래 전): 지난 12일 노조측이 노조무력화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사측은 올해 1월 간부 워크샵에서 논의된 실무차원의 보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증 아닌가.

-김상갑 사장: 아니다.

◎전: 회사 고위간부 업무일지에 따르면, 사측의 노조무력화 작업은 이미 2001년 6월 11일 부사장 주재회의에서의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노조원에게 월차 권유하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됐다. 사측 주장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그런 기록이 시작되어야 하므로, 위증이 틀림없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회장에서 작업반장까지 동원돼 '동태파악', '성향분석', '노조 위축을 위한 차별관리' 등이 이뤄졌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김 사장: 공기업 시절부터 노조가 강해 해마다 파업을 벌였다. 그래서 민영화 초기, 이래서는 회사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 '신노사문화 정립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실행은 안됐다.

◎전: 노조측, 실행을 입증할 수 있나?
-박방주 노조대표: 상무급 이상 관리자들의 업무일지와 실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의 진술서가 있다.

◎박인성 위원(아래 박): 사측이 노조가 거세, 대응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노조 지배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가 간부들의 수첩을 불법 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수첩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김 사장: (...)그렇다.

◎박: 수첩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미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증명이 나온 것이다.

◎오세훈 위원(아래 오): 한 간부의 수첩에 작년 6월 사장이 '정부에서도 이 기회에 손 봐줘라'고 했다고 적혀 있다.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
-김 사장, 방 장관: 있을 수 없다.

◎오: 그래도 의혹은 남는다.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특별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조사결과와 객관성과 신빙성이 우려된다.

◎서병수 위원(아래 서): 작년 7월 4

일, 노사는 파업관련 '민형사상 고소 고발과 징계 최소화' 중재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다음날 사장 주재회의에서 가압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맞나?
-김 사장: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회사가 가압류를 결정한 것은 6월 22일경이었다. 회사로서는 처벌 최소화에 노력한 것이다.

◎서: 노조 감시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을 인정하나?
-김 사장: 감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회사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였다.

◎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5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압류했나?
-김 사장: 불법파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서: 결국 가압류를 노조활동제약

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아닌가?

◎김라기 위원(아래 김): 2001년 노사는 집단교섭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는데, 작년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겨 파업이 발생했다.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방 장관: 맞다

◎김: 노조간부에 대한 감시는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방 장관: 문건을 만든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승철 위원: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노조 지배 개입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는 특수성을 갖는다. 즉, 지배개입에 대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요약/정리: 허혜영)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 ...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 폐쇄·휴업·합병·분할·사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행 등 사용자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는 점...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정리해고 철회 등을 통한 고용 안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2)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한양공영은 노조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시켜 노사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방침을 정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이를)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이 사건 쟁의행위에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없는 것이다. (후략)

2003.2.11 주심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결연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법원 등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들 기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국민들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경찰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가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과정과 재판과정의 국민 참여 보장 등이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국가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위원회에 대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권력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성숙시켜 온 이러한 깨달음을 차기 정부는 겸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배경내)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인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선정작업에 들어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강신욱 대법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서를 내고 "강 대법관이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구현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이를 변질시켰던 인물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역사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법관은 1991년 5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했던 대표적 정치검사로서, 5월 공안정국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유서대필' 사건이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과 필적 조작 등에 의한 것이 드러났지만, 그는 2000년 대법관 자리에까지 오르는 등 고속 승진을 거듭해 왔다. (배경내)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개별 사건의 지휘권 폐지 △특검제 수용 △검사인사 관련 다면평가제 도입 △상명하복은 인정하되 담당검사의 항변권 인정 △정치권 인사들의 검찰에 대한 비공식적 압력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만으로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이 '인권의 적'이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려워 보인다. 권력의 시너로서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고문치사사건 등 과거 검찰이 저질러온 잘못에서 비롯된 국민의 검찰 불신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개혁 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과노현 교수(방통대 법대)는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부여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 확대하며,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조직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검찰 개혁이란 기관이 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과 교수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의 마련도 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평검사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상당히 미시적인 것으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현재 법무부 내 대부분의 고위직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어 이들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산하기관인 검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꼴"이라며 "법무행정에서 검찰 인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내의 통제 장치 외에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과노현 교수는 "지방검찰청 등 인권관련 권력 기관마다 시민참여형 민원처리위원회를 두어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기관에 대해 감시·통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한편, 정치비리 외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검찰 내부의 개혁 논의는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21일(금)

제 22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기간의 무리한 독방 감금조치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교정시설의 징벌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가운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인권위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적인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던 피해자에 대해 의무관의 진단 없이 연속 징벌을 집행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당시 청송제2교도소장 감모 씨와 보안과장 배모 씨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리한 연속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5조 2항의 개정도 권고했다.

가혹한 연속 징벌이 자살 불러

고 씨는 2001년 5월 대전교도소에 수감, 그 해 12월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자살한 200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금치 2월'의 징벌을 6번 연속해서 받음으로써 무려 10여개월을 징벌실(독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독방 감금은 물론, 면회나 편지, 작업, 운동 등 외부와의 교류가 일체 차단된다.

더구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이 고 씨가 △동료 수용자가 코를 곤다며 독거실을 요구했고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욕설을 하였으며 △동료 수용자가 몸을 더듬자 방을 옮겨달라며 문을 건어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만으로 고 씨를 금치 처분했으며, 또 이

과정에서 수감과 사슬 등의 계구를 79일 동안이나 착용하게 하는 등 가혹한 징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송제2교도소측은 고 씨가 이미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고 씨에 대한 연속 징벌을 강행했다. 수용자의 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연속 징벌이 고 씨의 자살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위가 △의무관의 진단 결과 건강상 해가 없는 경우에만 '금치'처분을 집행할 수 있고, △징벌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의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 행정법시행령 145조와 148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고 씨의 자살사건으로도 증명되었듯이, "이러한 규정은 현재 교정 시설 내에서는 무시되기 일췌"라는 것

이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 활동가의 지적이다.

정신과 진료절차로 제동효과 기대

한편, 고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연속 징벌이 수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관행임이 새삼 재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위의 유현 상임위원은 "현행 행형법이 연속 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불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칙'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2개월 '금치' 징벌이 종료된 후 외부의 정신과 진료를 받는 동안은 징벌이 일시 정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연속 징벌은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면서 행형법의 개정을 (2면에 계속)

만화사랑방

이동수



'법'은 '자본'의 '신도'일 뿐?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고, 권력이 덧씌운 강압적인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 침탈이 활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물리력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자행하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강제진압, 감압 수사, 가혹한 징벌 등으로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지지르는데 구타나 총기남용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횡포에 의해 몇 년간 수배자로 떠도는 사람들, 국가가 승인한 안전선 안에서 '자기검열'의 가위질을 해야 하는 사람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죄'로 감옥행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존재 역시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불온', '유해', '음란' 등의 자의적인 딱지에 의해 각종 표현물과 단체들의 행동이 자의적으로 제약되는 현실도 여전하다. 더욱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까지 수집·집중시키려는 시도들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반면, 이들 자의적인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보호막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새 정부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삶의 영역 곳곳을 침탈하고 있는 고삐 풀린 권력의 횡포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제도와 법률, 관행부터 손질하는 일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배경내)

(= 1면에서 이어짐)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진 변호사는 "현재 징벌이 '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규칙' 개정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수용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이 행정기관이 정한 규칙에 일임되어 있고, 행정법에 수용자 인권보호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인 만큼, 연속 징벌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행정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금지" 중에도 외부와의 교통권을 전면 차단하지 않고, 징벌실의 열악한 환경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계구를 남용하는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상임위원은 "하나의 진정사건으로 교정시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교정시설 내 징벌문제에 관한 총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인권문제에 대해 향후 어떠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내)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독질 멈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시행이 유보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을 교육부가 3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1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없던 정보를 새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보관해온 정보를 집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재량으로 남아있어 은밀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정보가 집중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창덕여자중학교 김진철 교사 역시 "정보집중은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희 학생은 "선생님과 상담기록도 함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상담을 하려 하겠는가. 이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차단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전재현 학생 역시 "이는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보탈취"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교육을 통해 파시즘을 주입하다 못해, 이젠 우리를 완전히 파시즘 속으로 포섭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은우 변호사도 "이 시스템은 교사들의 활동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이 곧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더구나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은 "각 교육청에 집중된 정보를(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다른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대국민 통제 수단으로까지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교육정보시스템은 몇년 전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전자주민카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 도독질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상담수가 이 시스템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를 물어볼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22일(토)
제 22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오늘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사측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종 노조탄압 수단'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들의 '300인 선언'이 21일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홍근수 향민교회 목사,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금실 변호사,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등 인권·사회·종교단체 인사 359인이 참여했다.

'3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가 진상 파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특별조사를 앞두고 사측에 의해 은폐 혹은 폐기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력한 진상조사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교체된 개인 컴퓨터의 원래의 하드웨어나 사내 전산

■ 알림

<면지, 사복을 묻다> 배급

2002년 제6회 인권영화제에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한 이미영 감독 작품 <면지, 사복을 묻다>를 인권영화제에서 배급합니다.

작품은 80년 사복탄광 파업의 전모와 신군부정권의 탄압을 파헤친 다큐멘터리입니다. (문의:741-2407)

▷ 가격: 30,000원(우송료 2,000원 별도)

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제보자 신분 보장 천명과 비공개 증언 청취 △노사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첩 압수수색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최근 2-3년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노동3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논평>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

지하철에 몸을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종착역으로 떠났다. 지난 18일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더욱이 철축 같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까지 도움을 갈구했던 희생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전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참사가 용의자인 김모 씨에서 비롯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불러온 원인을 김씨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효율성을 추구하며 대규모 인력감축을 벌여 결국 승무원 한 명이 수천 수백의 사람들을 싣고 달리는 열차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는 예정된 비극이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은 자본과 정부의 이윤 추구는 수백 명의 참사를 낳는 인재를 면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번 참사를 접하는 일부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의 화살이 '장애인 집단'을 겨냥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모두 격리시켜라', '정신장애인들은 다 죽여라' 등 심측한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등장하고 있다. 2000년 발간된 범죄백서 통계에 따르면 장애 또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길들여진 사회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비틀림'을 더욱 부추긴 것은 언론이었다. 보도 과정에서 많은 언론들이 이번 참사를 '정신질환자, 장애인의 뼈뺀 복수심에서 기인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부각시켰다. 또한 김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한편 그의 가족까지 추적·보도하는 등의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묻고 싶다. 진정,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해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생매장'하려는 것인가?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신장된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힘겹다면,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즉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과 생활은 급절로 불안정해졌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간격은 훨씬 벌어졌다는 점에서, 지난 김대중 정부의 사회권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새 정부는 지난 5년간 후진만을 거듭해 온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는 이른바 '노동하는 빈곤층',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향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토대인 적절한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보장은 결코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위로만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비 보조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확충하고 약값은 환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이 부의 세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불의 역시 타파돼야 한다. 영유아에 대한 공보육·공교육화를 실시하고,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자, 환경과 공교육, 공공의료에 대한 재앙이다. '외자유치'라는 주문에 빠져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위험적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대세로 여긴다면, 민중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사회는 절망에 흐느끼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구호 속에 인간다운 생존을 희생시키는 일을 되풀이한다면 민중의 저항은 예정된 일이다. 사회권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을 향해 나아가라. [이주영]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이라

에바다 복지회 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이 세상에 처음 폭로된 것은 96년.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옛 재단의 황포 속에 에바다는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에바다'의 비극은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이미 예정되었다. 사유화된 시설은 온갖 차별로 멍든 사회적 약자들을 '도구' 삼아, 재단의 배를 불리는 폐쇄된 감옥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에바다가 또 다른 외딴 섬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연고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신의료기관 수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동안 사유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재정 지원 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이같은 다양한 대안들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더 이상 감제로 시설에 수용되거나 폐쇄된 시설 내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해법들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수용' 시설의 온존을 전제하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왜 장애인, 노숙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용'돼야 하는가? 인권운동사랑방 배대군 씨는 "그들이 수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정상인'임을 자처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때문이며, 이는 곧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말한다.

수용시설이란 애초에 '사회방위' 즉,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협세력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인권침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곧,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그것의 '폐기'인 것이다.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격리되어왔던 이들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는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단계적으로, 대규모시설을 그룹홈 같은 소규모 형태로 전환하면서 탈시설화해야 한다"며, "기존 대규모시설을 개별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규모 그룹홈으로 분가하고, 대규모 시설은 개방된 지역복지센터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자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사회 주변부로 떠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노동부가 그 동안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장해온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를 공식 인정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 "노동조합 운영 등을 지배·개입한 사례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관련,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정립방안', '선무활동지침서', '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리스트' 등이 작성된 사실 △위 문건에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의도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 △위 내용이 회사간부들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메모된 사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또, 회사측이 파업참가자들을 그들의 본래 직종이 아닌 청소 등 잡무에 종사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참가자들에게 특근·연장근로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노동자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이 작성한 조합원 등급에 따른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상당히 미흡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특별조사 결과는 실제 회사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의 빙산의 일각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배달호 씨 분신사망대책위 박유호 언론담당장 역시 "노동부는 사측이 특별조사를 앞두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폐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고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는 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압수 수색을 요구하였으나, 조사반이 확보한 자료로도 충분하고 사측이 대부분의 자료에

2003년 2월 25일(화)

제 22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대해 작성 사실을 시인, 사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

더구나 노동부가 두산중공업의 조직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이번 특별조사의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손 실장은 "두산의 부당노동행위는 박용성 회장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었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이 땅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부산지방노동청은 조사 결과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보완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허혜영]

허성혜 학생 재징계 위기

용화여고, "반성 없이는 용서 없다" 고집

학교측이 퇴학철회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던 용화여고 사태가 학교측의 재징계 방침으로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학교측은 허성혜 학생에게 "퇴학 철회는 선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반성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재결정하겠다"고 통보, 21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1일 학교측의 퇴학처분 철회 방침이 밝혀진 지 삼일만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현재 허양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학교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허양은 26일 다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용화여고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모임'은 "퇴학 철회는 여론이 불

리해지자 학교측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한 기만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징계 자체의 완전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21일 성명을 통해 "1년 내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더니, 또다시 자퇴와 전학을 운운하며 재징계하려는 것은 교문과 같은 것"이라며 학교측을 비판했다.

한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해 왔던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허양의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활동중인 관련 모임들은 오는 28일까지 오후 12시와 3시, 하루에 두 차례씩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청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새 정부에 대해서도 감시와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달째 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드디어 들어섰다. 그런가 하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전개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선은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 하물며 인수위원회 과제에도 끼지 못한 것 같아 자못 우울하기만 하다. 반세기 전 이 땅 낡은 사회 인권 문제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는 여전히 전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또다시 수많은 민생 현안에 파묻혀 질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자못 비참한 긴장과 각오를 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우리 옛말에 '우는 애야아 젓 준다'는 말이 있다. 자식은 많고 먹을 양식은 적어 손 불 자식 사람은 한계가 있어 나온 얘기일 게다.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처지가 꼭 그 모양 같다. 그러나 반세기 전 통한의 슬픔을 부여안고 구천을 떠도는 고향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묻혀지고 왜곡된 이 땅의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 도덕성을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청산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청산 없이 이 땅의 민주화의 완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낡은 사회 권력의 뿌리는 주로 일제 식민지 지배나 한국전쟁 전후의 좌우의 갈등의 산물로써, 이는 어김없이 친일세력과 극우 세력들이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이른바 학살권력을 재생산하다 보니 전 사회적인 민주화와 인권의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 땅에서 민족의 운명과 생사를 함께 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다. 한 몸이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위 '아군'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민족사회 전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주검과 시체를 온 적막강산에 유기한 채로 아직도 유교적 정서가 진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한 회의가 드는 것은 흑여 세상을 잘못 살아서일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살아남은 유족들도 고령화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낡은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도덕성과 사회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의 장인과 중학교 은사, 친인척 중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줄로 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민족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사건인 것이며, 그러기에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한 과거청산의 문제만도 아니듯, 이 땅 모든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민간인학살 문제를 진실되게 인권문제로 인식을 같이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영일 씨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1. 두산중공업이 제대로 풀려야...
(주)삼광 고하켄 노조, 노조파괴 문서와 사측이 관계기관에 정기 상납을 제공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사장 고발(2.17)/ 기자자동차 노조, 노조사찰 문건 공개(2.18)/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이 노조무력화 방안을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 요구(2.18)/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간부 수첩내용 사실임을 인정(2.19)/ 각계 인사 300인 선언...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 촉구(2.21)/ 노동부,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한 특별조사 결과 발표(2.24)

2. 노동자 내몰더니 시민 생명까지!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 사상자 발생(2.18)/ 노동계, "부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 더 큰 희생 불렀다"고 지적(2.19)/ 철도노조, 열차 안전 무시한 철도청의 1인 승무제 철회와 부족 인력 충원 등 요구하며 '안전운행' 돌입(2.21)

3. 세계를 비웃는 미국의 광기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담 갖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합의서 발표(2.17)/ 러시아, 연 나흘째 이어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방공시설 공습에 강력 항의(2.19)/ 프랑스·아프리카 45개국, 이라크 무기사찰 연장과 이라크 전쟁 반대 공동성명 발표(2.20)/ 미,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략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 공표하고, 유엔 총력 압박(2.22)

4.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이제 그만!
민변·민교협 등,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개최(2.18)/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기자회견' 개최(2.20)

5. 국가인권위, 권고만으로 문제 해결될까?
인권위,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 반대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당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징벌 연속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 진료 거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권고(2.20)/ 인권위, 군 영창 수감자의 실외 운동 제한하고 영창 내 감시 카메라 설치한 것 등은 인권 침해라며 영창 관리규정의 개정 및 삭제를 공군 참모총장에게 권고(2.21)

6. 기타
78개 인권·사회단체, '집회현장에서의 경찰폭력 근절과 황재운 농민 실명위기사건 공동대책위' 발족하고 진상규명 등 촉구(2.19)/ 대법,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성 없다"는 판결 내놓아(2.1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26일(수)

제 22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벽,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격 체포와 농성장 침탈이 자행됐다.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날 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중수 본부장 등 4명의 지도부가 각각 자택 부근과 광주 북구청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번 연행과정에서 농성장까지 침탈,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컴퓨터 등 물품을 압수해 갔으며, 연행된 지도부에게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밝힐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도부들은 지난해 3월 23일의 전공노 결성과 같은해 11월의 연가투쟁 등을 주도한 것과 관련, 설날술 부위원장과 오명남 사무처장의 해임이 지난 1월 13일 결정되자 이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 북구청 앞에서 17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전공노는 체포 대상자 모두가 경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이미 밝힌 상황이고, 정부와 전공노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전공노 김정수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를 전교조 수준에서라도 허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인수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 같은 사태는 이제 막 시작되려는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혹평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이래 전공노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지도부의 사법처리 등을 통한 정부의 다각적인 탄압도 계속되어 왔다. 전공노에 따르면, 연

가투쟁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개별 지자체에 주동자에 대한 징계지침을 하달한 이래,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총 31명의 지도부들에 대한 해임과 수백 명 조합원에 대한 징계·감봉 등의 징계가 취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검찰이 지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울산본부 동구지부 허승근 정책부장은 "지난 1월말 울산지검에 출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강요를 당한 바 있다. 울산본부 소속 30명이 넘는 지도부들이 똑같은 강요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허 정책부장은 "현재 공무원노조가 '법의노조'인 상태에서 불법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조를 탈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약서 제출을 거부,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다. 허 정책부장 외에 울산본부 소속 지도부 4명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21일 성명서를 발표, "울산뿐 아니라 서울본부에서도 검찰에 의한 노조탈퇴 서약서 강요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구시대적인 작태를 규탄하고 강력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배경내)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청송감호소측이 수용자들의 헌법소원 참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15일, 이상희 변호사는 세 명의 청송감호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작업상여금 문제 등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료 수용자들의 위임장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며 위임장 양식 300부를 함께 발송했다. 수용자들을 한 명씩 만나 위임장을 받을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감호소측은 '수용자들 사이의 물품 교환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임장 배포를 불허했다. 청송제2감호소 손기운 교무계장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인들을 주려야지 소송에서 위임장을 배포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대해 이 변호사나 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소장의 재량으로

위임장을 배포해주거나 수용자 세 사람에게 배포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면회를 가면 헌법소원에 참여할 사람을 모아줘도 된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사실상 수용자들의 헌법소원의 길을 가로막는 감호소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사무국장 역시 "수용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법률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소측이 통로 역할은 못할망정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측이 집단 위임장 수취를 거부한 것은 문제를 더욱더 극단적 차원으로 몰고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리는 청송감호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수용자 1백여명이 근로상여금 인상과 가솔수준안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으나, 소측의 보복성 징벌로 문제가 봉합된 바 있다.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을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연속 징벌 집행 시 정신과 진료를 거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기자는 인권위의 결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2월 21일자> 하지만 이후 연속 징벌 문제와 관련한 인권위 내부의 논의 역사와 기사작성 당시 미완성 상태여서 공개되지 않았던 결정문 전문을 접하면서 인권위에 대한 끔찍한 절망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가 2002년 12월 발행한 <Article 2> 1권 6호에는 지난달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박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가 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1년의 평가"라는 글이 실려있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미 인권위 내부에서는 연속 징벌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박교수는 청송교도소를 방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0.9평도 채 못되는 징벌방에서 몇 개월째 갇혀있던 여러 재소자들을 만났다. 이에 박교수는 상임위원회에 △전국 교도소의 2개월 이상 연속 징벌자 명단을 입수하고 △이들의 남은 징벌기간의 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며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6개월 이상 연속 징벌을 받다 몸무게가 12kg이나 빠진 한 재소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연속 징벌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별 징벌이 합법적이라면 연속 집행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교수의 요청을 거부했고, 여기에 유현, 박경서 상임위원도 동조했다. 긴급구제 요청 역시 거부했다. 2개월 이상 연속되는 징벌이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 셈이다.

이것이 지난해 2월의 일이다. 그런데

지난번 결정에서 다루어진 고모 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이 같은 해 5월, 그리고 현재 인권위에는 같은 시기 부산교도소 징벌방에 3개월째 갇혀있던 자살한 배모 씨 사건이 진정되어 있다. 만약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박교수의 주장대로 연속 징벌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게다. 박교수는 "두 사건을 접하고선 마치 내가 그들을 죽인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고백한다.

또 이들 알려진 죽음 이외에도 연속 징벌 과정에서 발생한 더 많은 죽음이 있었을 수 있다. 아니, 지금도 구급시설 내 징벌방에는 몇 개월째 고립된 상태에서 자살로 내몰리고 정신이 기거할 곳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태평스레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을 뿐, 연속 징벌로 고통받고 있는 재소자들을 당장에 구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진정이 제기된 지 9개월 후에야 나왔다

사실 역시 인권위가 연속 징벌의 위헌성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게다가 인권위는 위 결정문에서 "10여 개월의 연속적인 징벌, 과도한 계구사용...등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가혹한 행위가 되었을 것"이며, "과도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심각한 연속징벌의 집행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최소한 그 집행 전에 그 대상자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는지 전문가에 의한 엄정한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그럴 듯한 말들은 '미치지 않은 재소자는 2개월 넘게 징벌방에 갇혀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신과 진료가 얼마나 엄정히 실시될지, 얼마 만에 끝날지도 의문이다.

인권위가 이렇듯 안이한 자세로 연속 징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동안, 징벌방 내에서는 살릴 수도 있는 목숨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배경내)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흉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긴급체포의 남용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긴급체포 요건의 강화 △사후체포영장발부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국장은 "인신구속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는 요건과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체포영장주의가 명시되었지만, 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국회의원 등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수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수보다 무려 10배에 이르며, 그 비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나, 불법체포 부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허혜영)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이들 스스로 약자이길 자처하거나 이들이 약자로 규정되어야 할 그 어떤 '자연적' 속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억압적 기준에 의해 '소수'이자 '약자'로서 강제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미성숙하거나, 뭔가 모자라거나, 누군가의 보호나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이들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요, 동등한 인권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 이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 질서, 그리고 이러한 억압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준은 다만 이를 통해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배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강제되는 것일 뿐이다. 새 정부는 이들을 억압해 온 차별적 관행과 반인권적 제도들을 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여성과 관련해서는 남아선호사상과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해 여성들을 끊임없이 이등 성원으로 위치시키는 호주제부터 폐지해야 하며,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양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권을 불평등하게 향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어디든 이유로 이들에게 미성숙과 굴종을 강요하는 '학교'라는 영역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노동현장'을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의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각종 삶의 현장에서 사회가 쳐놓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교육, 노동, 사회참여의 길을 봉쇄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연수'란 이름으로 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갖가지 차별과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동성애를 '변태 성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각종 '가위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시급히 삭제돼야 한다.

하나의 차별은 또다른 차별을, 하나의 억압은 또다른 억압을 양산하고 정당화하는 근원이 된다. 그러하기에 인권은 차별없는 인권의 보장이라는 '보편성'을 대원칙으로 갖고 있다.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노력을 새 정부는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배경내)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문제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난 95년, 40여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시설의 문제가 폭로되고, 이를 방지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의 문제점 역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윤방법은 이들을 보호하고 성매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와 지난해 1월 말 또다시 발생한 군산시 개북동 화재참사는 우리 사회에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다. 결국 이 두 사건은 감시 속에서 성매매를 감요당하고 포주의 착취로 빛에 허덕이며 어쩔 수 없이 성을 팔아야 하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당한 채 죽어서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현실에 놓여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조배숙·이연숙 국회의원이 '성매매방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을 사는 자', '인신매매, 감금, 협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알선하는 중간업주', 그리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광고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 확대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관계의 무효화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성매매의 동기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로 여성들을 평가하고 도덕적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을 주장하거나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등 잘못된 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다. 이에 대해 여성해방연대 정책국장인 야루 씨는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는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포주의 억압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공창제 도입에 대해서도 "성매매 자체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영속화하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고 덧붙였다. 2001년 서울터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96.7%가 "공창제가 도입돼도 성매매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매매는 죽음으로써만 벗어날 수 있는 현대판 노예제다. 그리고 이 노예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시작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이다. (김영월)

<속보> "에바다 정상화 약속 잊었는가"

'에바다 정상화'를 약속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린 채 임기를 마치자, 대구 장애인 인권단체 '밝은 내일'의 대표 최창현 씨가 25일 오후 4시부터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집 앞에서 밤샘 1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27일(목)

제 22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청와대 가는 활채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지난 26일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과 에바다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청와대로 가던 장애인들의 행렬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날 장애인 20여명은 해화동 로터리에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이동, 오후 2시경 안국동 버스정류장에 내린 후 인도로 청와대까지 가려고 했으나, 경찰은 끝내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날 장애인들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려 한 이유는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과 에바다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노들장애인야학 김기룡 기획국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애인 대표단은 인수위와 건설교통부를 만나 '장애인 이동법을 제정하고, 건설교통부가 그 시행부처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부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법을 만들 때까지는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기획국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고 생명권인 만큼 5년이나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려 한 것"이라고 면담요청의 의미를 전달했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은 이를 보장하는 법적 강제장치가 없어, 저상버스 등 편의시설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심에 전적으로 내맡겨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장애인들이 전달하려 한 면담요청서에는 '아직도 시설비리의 주범인 구제단에 의해 잠약되어 학교수업이 1년이 넘게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바다 문제의 해결'을 새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인도든 아니든 집회 신고 없이 다수가 플래카드를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장애인들을 가로막았다. 이날 겹겹이 둘러싼 경찰의 방패막에 갇힌 장애인들은 "단지 면담을 요청하려 가려는 것인데, 이렇게 억압적으로 막을 수 있냐"며 분노를 토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취임 축하의 뜻으로 가져 온 꽃다발이 분노의 꽃이 되어버렸다"며, 준비한 꽃다발을 경찰의 방패에 내리쳤지만 꽃잎들만 공중에 흩날릴 뿐이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고 적힌 리본도 땅에 떨어졌다. 박 대표는 또 항의의 표시로 장애인이동법 초안이 첨부된

면담요청서를 찢으며, "이 종이 찢아리 하나 전달하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저기서 "이것이 새 정부가 공언한 열린정부, 참여정부의 모습인가"라는 탄식과 비판도 터져 나왔다.

면담요청 길에 함께 나선 장애인 김태현 씨는 "지나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까지 시위하며 행진할 때는 경찰이 가로막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갈 수 있고, 장애인들은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며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장애인들은 이후 2시간이 넘도록 '청와대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말라'며 저항했지만, 경찰은 끝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청와대를 향하던 활채어를 둘러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방구석에 처박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야 할 바에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길에서 싸우겠다"며 오늘을 싸움이 시작임을 알렸다. (허혜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선언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행위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책임을 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 국내 여건의 미비를 운운하며 박해와 재난과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문전에서 내모는 태도 역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난민 신청인에게 과도한 박해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그들을 오랜 기간 불안과 생존의 고통 속에 방치해두는 난민심사절차부터 시급히 개선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과 인권전문가들의 헌신에 힘입어 유엔의 이름으로 채택된 각종 국제인권조약들은 수십 년간 독재와 '무(無)복지', 각종 억압적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횡포에 짓눌려온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권기준을 담고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들 조약들에 형식적으로 가입하고 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도 국제인권기준을 홍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조약감시기구들의 권고 역시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진행되는 각종 반인권적 무역·투자협정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노력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인권의 향유에도, 인권보장의 의무에도 국경이란 없는 법이다. (배경내)

제1회 수도권지역 학살지 순례행사 "잃어버린 기억, 학살의 현장을 찾아"

- 연 제: 3월 8일(토)~9일(일)
- 순례지: 고양 금정굴/ 태극단 묘역/ 강화도 천우물·갑곶돈대 학살지
- 참가비: 1인당 35,000원
- 주 최: 학살규명 사회단체협의회
- 접 수: 3월 3일(월)까지
- 접수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02-741-5363)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전 세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감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아무런 명분도 없음을, 그리고 그 어떤 전쟁보다도 수많은 이라크 민중의 희생을 가져올 것임을 전 세계 양심들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는 명분으로 힘없는 이라크 민중을 희생양으로 내몰면서 석유를 쟁탈하기 위한 패권다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기도 전에 한국 정부가 이라크 파병 방침을 내놓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지난 10일 김석수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개전 시 지원병력 위주의 파병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군 참전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의 염창근 씨는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는 한국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이라크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시너라는 세계의 조롱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라크 파병 방침은 한국 정부에 현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집단학살극에 우리 젊은이들까지 가담시켜 제국주의 용병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든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난달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시에라리온 내전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평화가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1년부터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시에라리온의 내전은 애초 정권의 부정부패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내전은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변질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군과 반란군, 심지어 유엔이 파견한 국제평화유지군에 의해서도 여성들에 대한 강간 등의 성폭력과 끔찍한 만행이 자행됐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평화를 위해 왔던 미군에 의해 자행됐던 수많은 민간인 학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에 의해 자행됐던 학살과 강간 등과 같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 역시 군사력에 의존해 평화와 인권을 실현시키겠다는 발상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또다시 이라크 민중을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을 파괴할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2월 28일(금)

제 22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민간인학살 유족들, 무기한 농성 돌입

국가인권위 접거...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반세기 넘게 외면당해 온 유족들의 한이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소속 대표들과 전국의 민간인학살 유족회 대표 20여명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접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학살규명위는 오전 11시 인권위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에는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서영선 강화유족회장, 체외진문경유족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오후부터 전국 각지의 유족들이 추가 상경, 농성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학살규명위 이이화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학살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결합돼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참혹했고 그 피해자도 많다"며 "정전 50주년이 되는 올해,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문제가 반드시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2001년 9월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47명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심사소위원회에조차 회부되지 않아 '실종위기'에 놓여있는 데다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16대 국회가 종료되면 특별법안도 자동 폐기돼 특별법 제정운동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김영훈 상임공동대표는 "제주4·3특별법도 15대 국회 말기 유족들과 단체들이 상경투

쟁과 전국순회투쟁까지 벌인 끝에 겨우 제정됐다"면서 "이번 농성으로 16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합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인권위에 모두 36건의 집단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전국의 유족 1백명 이상이 2차로 집단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창수 상황실장은 "인권위가 민간인학살 진정건을 주요 인권사안으로 분류하는 한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배경내]

박경순씨,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

27일, 양심수 박경순(48) 씨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새 정부에 양심수 전면 사면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998년 7월 구속된 박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 이전부터 이미 간경화로 시한부 관정을 받은 바 있는 박 씨는 5년제 죽음을 공포와도 싸워야 했다.

박 씨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며'라는 글에서 새 정부가 양심수 석방과 수배 해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의 의지를 표현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 등 '참여'와 자유를 가로막는 족쇄의 제거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클릭! 인권정보자료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역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된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이 펴낸 이 책은 1966년 채택된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피고, 규약의 내용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자유권은 국가의 불간섭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사회권은 국가의 간섭에 의해 -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인권이란 단지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사회권의 각론에 대한 해설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최은아]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1.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드러난 '절반의 진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노동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2/5). 두산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노동부 특별조사에 앞서 노조탄압 증거자료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2/4), 노조사찰과 노조과파공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2/12). 하지만 노동부는 인멸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사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의 범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2/24).

2. 전 세계에 메아리 친 함성, "No War!"

이라크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협이 고조되면서 이라크 전쟁 준비와 한반도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이어졌다. 민족화해추진통일협의회 등은 '미국의 한반도 전력증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2/6),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 3인이 1차로 '미국의 추악한 전쟁을 온몸으로 막겠다'며 이라크로 출국한 데 이어(2/7), 2차로 6명, 3차로 4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 개전시 지원병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2/10), 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 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정부의 파병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2/11).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반전 평화'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제 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의 일환으로 평화대행진이 개최됐다(2/15). 유럽연합과 러시아, 프랑스·아프리카 45개국까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잇달아 내놓았지만(2/17~2/20), 미국은 또다시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2/22).

3. 교육부,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독질 강행

교육부가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강행, 억압적 통제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에 23개 인권·사회단체는 NEIS의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2/6), 전국의 많은 교사들도 학생정보의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2.18),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전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2/21), 전교조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25). 게다가 벌써부터 NEIS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반대여론도 더욱 확산됐다. 목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 43명의 인사기록카드가 무방비로 노출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NEIS의 위험성을 드러낸 단적인 예로 지목됐다(2/24).

4. 용화여고, "학생이 어딜 감히 학교를 비판해?"

학교 비리와 교감의 성추행 의혹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용화여고가 지난해 12월 허성혜 학생을 보복 퇴학시킨 데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교장이 퇴학처분 철회 방침을 밝혀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2/11). 하지만 학교측은 허양에게 또다시 '반성'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재결정하겠다'고 통보하며 허양의 반성을 요구했고(2/14), 이 요구를 거부한 허양은 재징계 위기에 놓이게 됐다(2/24). 한편, 허양의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모임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평

-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2.8)
-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2.15)
-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2.22)

인권이야기

- 김정아 - '인권영화' 확대하는 인권위(2.4)
- 한상희 -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2.11)
- 김혜진 -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2.18)
- 이영일 -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2.25)

인권정보자료

-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2.5)
- 『근대자본주의사회의 아동』(2.12)
-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2.19)
-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2.28)

기획 -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 ①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심층분석> 사회보호법(2.14)
- ②인권교육의 전면 실시(2.15)
- ③과거 인권침해 진상규명/ <심층분석> 삼청교육(2.19)
- ④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심층분석> 검찰개혁(2.20)
- ⑤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심층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2.21)
- ⑥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심층분석> 사회복지시설(2.22)
- ⑦소수자의 권리보장 및 차별금지/ <심층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2.26)
- ⑧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심층분석> 해외파병(2.27)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2.6)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2.13)
-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2.19)
-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불법 긴급체포기 고문 부른다(2.26)

연재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2.5)

기타

- <기고> 이광영 -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처(2.8)
- <인터뷰> 원불교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2.14)
- <국회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2.20)
- <판결문 요약> '정리하고 반대파업은 불법'(2.20)